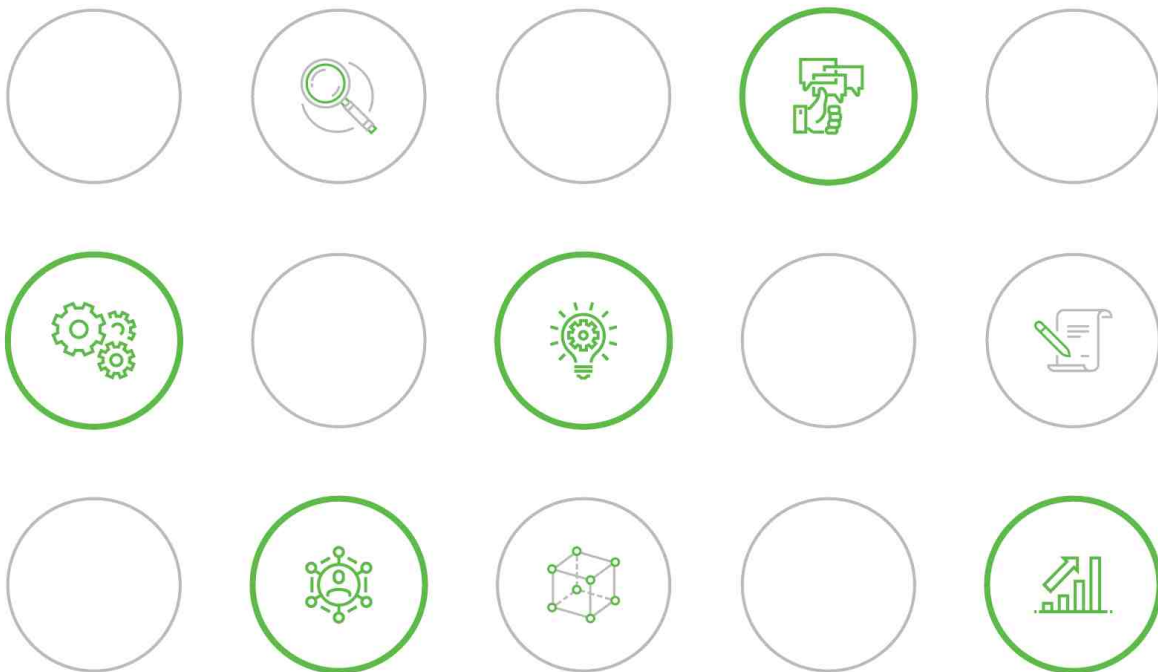


고양특례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본구상

Basic Plan for Future Job Creation in Goyan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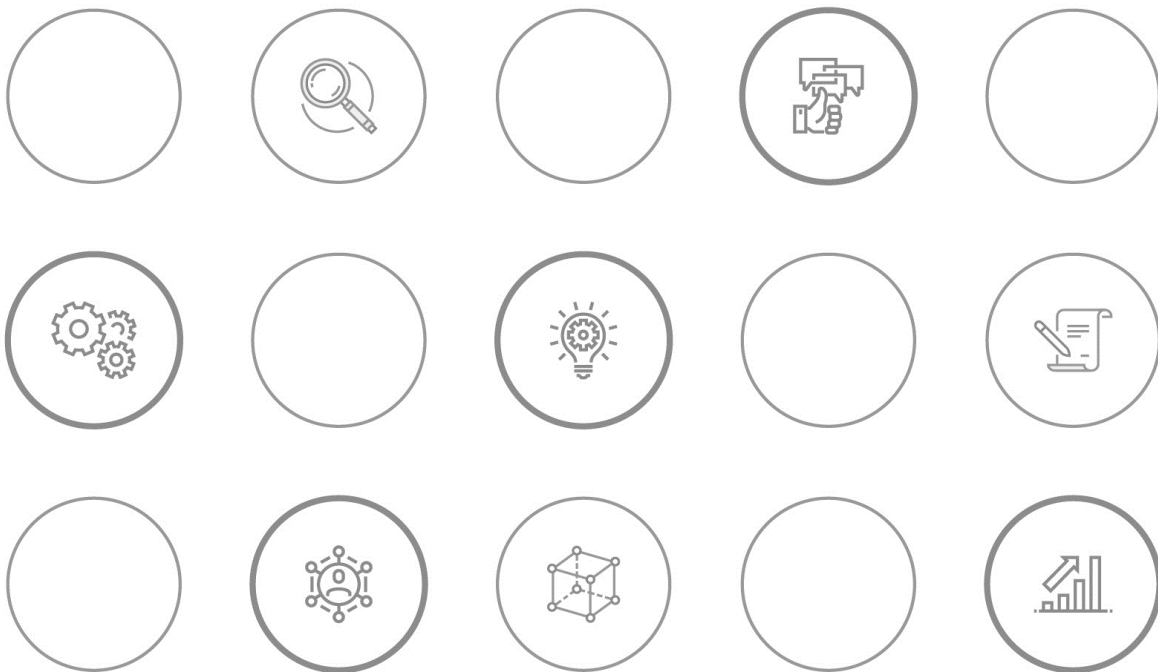
• 김용덕



고양특례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본구상

Basic Plan for Future Job Creation in Goyang City

• 김용덕



고양특례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본구상

Basic Plan for Future Job Creation in Goyang City

연구책임자

김용덕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실장

연구진

유진근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초빙선임연구위원
안지호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이현정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종윤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주연우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김범수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김지윤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이기엽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외부 연구진

박병록 고양시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황수영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외부 연구지원

김경한 고양특례시청 일자리정책과, 과장
김미애 고양특례시청 일자리정책과, 팀장
배은지 고양특례시청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정 책 제 안

■ 고양특례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본구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4대 전략과 6대 추진과제를 통한 기본 계획 추진



● 세부 전략

	6대 추진과제	세부 추진 과제 (안)
성 장	1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결 강화	- G-Youth Campus 운영 - 지역문제 해결형 중심 청년 리빙랩 창업 지원 - 취업-주거-문화 통합 지원을 통한 청년 정착 패스포트 제도 도입
성 장	2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창업 육성	- AI+ 콘텐츠 융합 허브 조성 - G-Knowledge Valley 구축 - 지역산업 AX 지원센터 설립 - 의료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과 고도화 1인 창작자 및 근로자 고용 지원 체계 마련
성 진	3 기업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계 전환	- 고양형 펀드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 고용혁신본부 설치 -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 절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지원
성 진	4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 G-Metro 산업벨트 조성 - 경기북부 혁신경제권 협의체 구성
포 용	5 여성·신종년 고용확대 및 연구유출 감소	- Re:Work 프로그램 추진 - 여성 리스킬링 아카데미 운영 - 여성 창업 플랫폼 설치 - 세대 융합 창업 지원 - 한부모양육책임자 재도약 일자리 연계
포 용	6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고양형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 데이터 센터 설치 - 사회적 경제·돌봄 일자리 확대 - 고령자 알·심 복합센터 설

요 약

□ 일자리 창출 비전

- 미래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과 고용 확대를 추구
 - 미래산업·디지털서비스·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고임금 일자리 정책 추진
- 동시에 기존 고양특례시의 기반을 고려한 포용적 정책 기조 병행
 - 여성 및 중장년 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 성장동력형 청년·혁신 일자리 중심, 복지형·포용형 일자리 정책을 보완한 이중 전략

□ 일자리 추진 체계

- 첨단·미래산업 기반 자족형 산업 생태계 선도 전략
- 외부 혁신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전략
- 광역 인프라 연계를 통한 경기 방어 및 자족 기능 강화 전략
-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구조적 위험 완화 전략
- 위의 전략을 구체화하여 성장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6대 추진과제 수립

그림 1 | 미래 일자리 전략 및 추진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

□ 일자리 세부 추진 과제

○ 과제 1.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결 강화

- G-Youth Campus: 관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 기반 맞춤형 취업 트랙 운영
- 지역문제 해결형 중심 청년창업 리빙랩 창업 지원: 고양특례시 생활·도시 문제 해결 목표의 창업 지원
- 청년 정책 패스포트 제도 도입: 취업-주거-문화 통합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유도

○ 과제 2.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창업 육성

- AI+ 콘텐츠 융합허브 조성: 고양 콘텐츠 산업 기반과 연계한 콘텐츠 산업 융합 거점 조성
- G-Knowledge Valley 구축: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대곡역세권과 연결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산업벨트 구성
- 지역산업 AX 지원센터 설립: 지역 중소기업 대상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추진 및 생태계 조성
- 의료 연계 산업 강화: 고양특례시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돌봄·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생태계 구축
- 1인 창작자 및 근로자 고용 지원 체계: 방송영상밸리 등 인프라 조성에 따른 1인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 유입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

○ 과제 3. 기업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계 전환

- 고양형 펀드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투자청을 펀드 운영 허브로 설정하여 고양특례시로 본사 이전 및 설립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 고용혁신본부 설치: 성장형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 제공을 통해 유니콘 기업 육성
- 지역 기업 절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지원: 기업 유치를 위해 이전 및 설립 시 지방세 감면과 입지 보조금 지원

○ 과제 4.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 G-Metro 산업벨트 구축: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한 산업기반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기북부 혁신경제권 협의체 구성: 서울, 마곡지구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성장 혁신축을 구성하고 창릉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산-덕양 균형발전 유도

○ 과제 5. 여성·신중년 고용확대 및 인구유출 감소

- Re:Work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과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전문교육과 기업 연계 과정 운영
- 여성 리스킬링 아카데미: 디지털헬스 · 데이터관리 · 문화콘텐츠 등 여성 친화형 미래직군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 연계 실습 과정 도입
- 여성 창업 플랫폼: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의 여성 창업 프로젝트 발굴과 공익형 소셜 비즈니스 집중 육성
- 세대 융합 창업 지원: 관내 거주하는 중장년층 전문가와 청년 창업가 연계를 통해 세대 간 협업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
- 한부모 · 양육책임자 재도약 일자리 연계: 혼자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력 단절 여성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 과정 제공

○ 과제 6.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고양형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 데이터 센터 설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검수하고 개선하는 고급 데이터 정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품질 데이터 생산 거점 구축
- 사회적경제 · 돌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참여형 일자리 확대
- 고령자 일 · 쉼 복합센터 설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 건강 · 휴식 통합형 복합공간 조성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5
제3절 일자리 창출의 개념	6
제2장 일자리 창출 환경 변화와 정책 동향	9
제1절 글로벌 및 국내 일자리 트렌드 변화	11
제2절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 현황	23
제3장 국내외 일자리 창출 사례	41
제1절 해외 일자리 창출 사례	43
제2절 국내 일자리 창출 사례	63
제4장 고양특례시 일자리 여건과 빅데이터 분석	71
제1절 고양특례시 인구구조 및 산업현황	73
제2절 고양특례시 일자리 현황	87
제3절 뉴스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트렌드 분석	91
제4절 고양특례시 추진 사업과 일자리 연계 필요성	112
제5장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 체계 도출	115
제1절 고양형 일자리 창출 방향 설문조사 분석	117
제2절 SWOT 분석 및 전략 과제 도출	136
제3절 미래 일자리 상황별/시나리오별 전망 분석	147

제6장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비전 및 로드맵	159
제1절 일자리 창출 비전 및 목표 설정	161
제2절 일자리 창출 로드맵	166
제3절 핵심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	167
 참고문헌	 181
Abstract	185

표 목차

표 1-1 일자리 창출 관점	7
표 2-1 OECD 2025 고용률	14
표 2-2 OECD 2060년 인구 전망	14
표 2-3 잠재성장률 전망	15
표 2-4 고용탄력성 추이	15
표 2-5 연령별 창업기업 수 추이	16
표 2-6 고용률 추이	17
표 2-7 업종별 취업자 수 추이	18
표 2-8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추이	18
표 2-9 시도별 취업자수 증감(2020년-2024년)	19
표 2-10 취업자 수 증가 상위 20개 시군(2012-2023년)	20
표 2-11 청년 취업자 비중 상위 20개 시군(2023년 1분기 기준)	20
표 2-12 혁신성장·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	31
표 2-13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	32
표 2-14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	32
표 2-15 지역기반의 협력체계 구축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	33
표 2-16 2025년 고양시 일자리 대책 4대 전략과 핵심과제	35
표 2-17 직접일자리 창출 대표 사업	36
표 2-18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표 사업	36
표 2-19 고용서비스 대표 사업	37
표 2-20 창업지원 대표 사업	37
표 2-21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질 개선 대표 사업	38
표 2-22 기타 대표 사업	38
표 3-1 지방분권화 방침에 따라 시행된 주요 산업정책	49
표 3-2 프로젯토네(Progettone) 프로그램 일자리 유형별 자격요건	60
표 3-3 인천 2022년 인천형 032 일자리 추진전략	64
표 3-4 서울 구로구 일자리 추진전략	66
표 3-5 대전 첨단기술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68
표 4-1 고양특례시 인구 추이	73

표 4-2 고양특례시 내국인 성별 비중	74
표 4-3 고양특례시 고령화율 및 성비 비중	75
표 4-4 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 구조 전망 1	76
표 4-5 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 구조 전망 2	77
표 4-6 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 구조 전망 3	78
표 4-7 고양특례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23년)	79
표 4-8 고양특례시 영세사업자 특징(2021년)	80
표 4-9 고양특례시 사업체 규모별 수 및 총 종사자 수(2023년)	81
표 4-10 고양특례시 사업체 규모별 총 종사자 수(2023년)	82
표 4-11 경기도 내 도시별 대표자연령대별 사업체 수(2023년)	84
표 4-12 고양특례시 자치구별 구인배율	87
표 4-13 고양특례시 영세사업자 현황(2021년)	88
표 4-14 전국단위 일자리 정책 이슈 키워드 Matrix	92
표 4-15 성남시 일자리 정책 이슈 키워드 Matrix	94
표 4-16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이슈 키워드 Matrix	96
표 4-17 경기도 시·군 및 정책 대상별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 결과	106
표 4-18 경기도 주요 10개 도시 및 정책 대상별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 결과	108
표 4-19 뉴스 빅데이터로 관찰한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의 특징	110
표 4-20 전국-고양특례시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110
표 4-21 성남시-고양특례시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111
표 4-22 인프라사업 예상 일자리 창출 효과 추정	114
표 5-1 전문가 설문 평가모델 항목	118
표 5-2 전문가 설문 참여자	124
표 5-3 Line-up 모델 분석 결과	125
표 5-4 전문가 설문 결과 순위	131
표 5-5 인지도-관심정도 기업인 설문 결과	133
표 5-6 기업인 정책니즈(needs) 조사	135
표 5-7 PEST 분석(거시적 환경 요인)	136
표 5-8 내부 환경 분석(강점 및 약점)	139

표 5-9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종합)	142
표 5-10 SWOT 분석 기반 일자리 전략	146
표 5-11 6대 추진과제 파급효과에 따른 업종 전망	149
표 5-12 추진과제 1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150
표 5-13 추진과제 2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151
표 5-14 추진과제 3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152
표 5-15 추진과제 4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153
표 5-16 추진과제 5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154
표 5-17 추진과제 6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155
표 5-18 일자리 창출 통합 시나리오	156
표 6-1 역세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	174

그림 목차

그림 1-1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 프로세스	5
그림 2-1 일자리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25
그림 2-2 미래세대 대상 일자리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26
그림 2-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유형 구분	28
그림 2-4 2025년 경기도 일자리정책 비전, 목표와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31
그림 2-5 2025년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비전 및 전략	35
그림 4-1 고양특례시 취업자 수 및 비중	89
그림 4-2 뉴스빅데이터 네트워크(전국단위)	93
그림 4-3 뉴스빅데이터 네트워크(성남시)	95
그림 4-4 뉴스빅데이터 네트워크(고양특례시)	98
그림 4-5 대상별 일자리 정책 월 기사 건 수(전국)	100
그림 4-6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 월 기사 건 수(전국)	101
그림 4-7 성남시-고양특례시 청년 일자리 정책 관심도 비교	102
그림 4-8 전국-고양특례시 청년 일자리 정책 관심도 비교	103
그림 4-9 고양특례시 추진 예정 인프라	112
그림 5-1 전문가 설문 분석 과정 개요도	118
그림 5-2 매트릭스 분석 항목 연계	119
그림 5-3 위험도-기대효과 매트릭스 분석 평가 기준	120
그림 5-4 매력도-적합도 매트릭스 분석 평가 기준	121
그림 5-5 시급성-중요성 매트릭스 분석 평가 기준	122
그림 5-6 전문가 설문 예시	123
그림 5-7 위험도-기대효과 매트릭스 결과	126
그림 5-8 매력도-적합도 매트릭스 결과	127
그림 5-9 시급성-시장성 매트릭스 결과(기술성-시장성 요인)	128
그림 5-10 시급성-시장성 매트릭스 결과(파급성-지속성 요인)	129
그림 5-11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전략 및 추진과제 연계성	148
그림 5-12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통합 시나리오	156
그림 6-1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비전	162
그림 6-2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전반적 전략	163

그림 6-3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핵심 추진 전략	164
그림 6-4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주요 추진 과제	165
그림 6-5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로드맵	166
그림 6-6 경기북부 혁신경제권 구축 구상(안)	175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3절 일자리 창출의 개념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거시경제 여건 악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기반 약화
 -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고용 흡수력이 낮은 구조로 전환
 - 생산성 정체와 저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가계 및 소상공인 부문의 부담 증가
 -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고용 축소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며 지역 고용 안정성 저해
 -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25.08.22)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성장정책과 고용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체감 가능한 고용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라는 평가 제기
-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한계
 -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기·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약
 -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 및 실효성 저하
 - 성장 정책과 고용 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 창출 간 선순환 구조 형성 미흡
- 고령특례시 고용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
 - 고령화 심화와 전통산업 쇠퇴, 지역 상권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자리 감소 압력 확대
 - 제조업 및 전통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기반이 약화되면서 신규 고용 창출 여력 축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부진 장기화 및 다수 지역에서 카드 매출 감소 추세 지속
- 청년층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 유출 가속화로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
- 지역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로 산업 수요와 인력 공급 간 괴리 확대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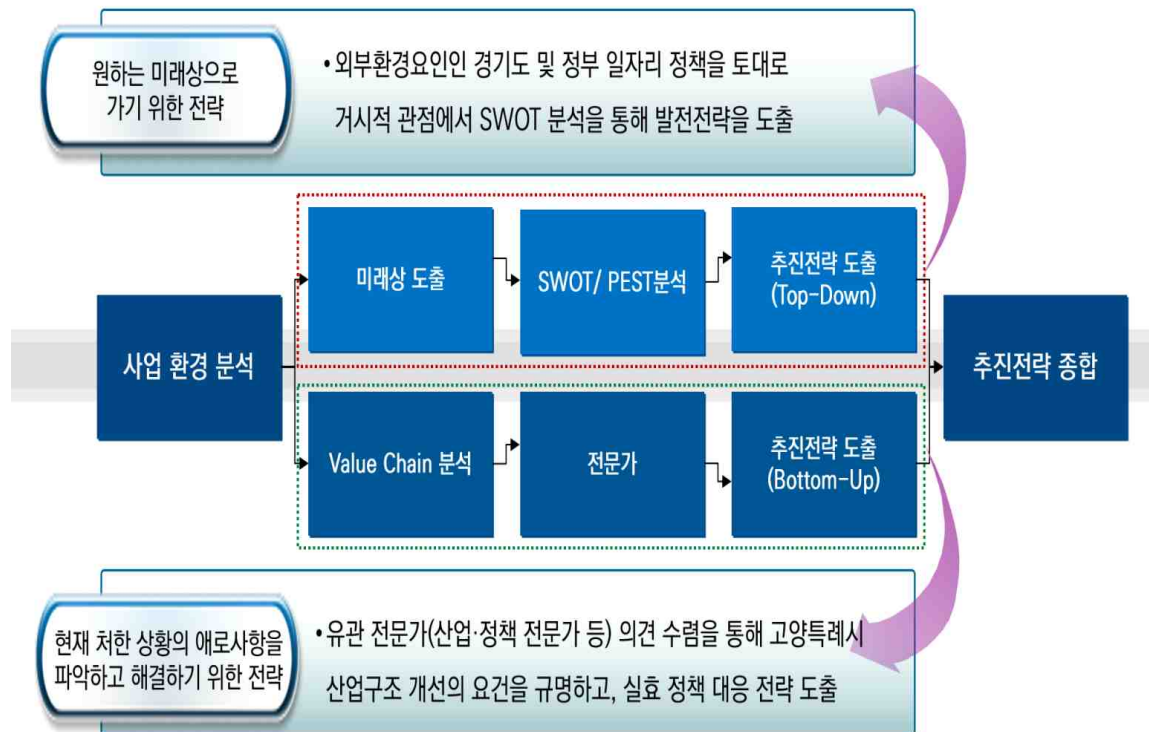
- 고양특례시 지역 여건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고양특례시의 인구 구조, 산업 특성, 고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 마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의 근거 제시
- 기본 전략 프로세스 기반의 미래 일자리 창출 기본구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 도모
 - 단기·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도출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을 결합한 이중 전략 접근 적용

- 외부 환경 변화와 정부·경기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상을 설정하고, SWOT 및 PEST 분석을 통해 발전 전략 도출
-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중장기적 미래상과 핵심 추진 전략을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도출
- 동시에 지역 산업 구조와 현장의 제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Value Chain 분석과 산업·정책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병행
- 현장 중심의 분석을 통해 현재 고양특례시가 직면한 산업 및 고용 구조상의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전략을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마련
- 상·하향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추진 전략을 종합·연계함으로써, 전략적 일관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일자리 창출 전략 체계 구축

그림 1-1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 프로세스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일자리 창출의 개념

□ 일자리의 개념

- 한국에서 일자리란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의미(국가데이터처, 2021)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일자리와 고용과 관련하여 정의(ILO, 2013)
 - 일자리는 한 사람이 하나의 경제 단위를 위해 수행하는 과업과 책무의 집합을 의미하며 산업 구조, 기업 활동 등에 의해 형성·확대·축소되는 개념
 - 고용은 일정 기간 동안 보수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에 종사한 상태를 의미하며 존재 여부보다는 경제 활동 참여 여부에 초점을 둔 통계적 개념
- 최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 확대
 - 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을 1999년 발표하였으며, 이를 '자유, 형평, 안전,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생산적이고 보수가 적절한 일'이라고 정의(ILO, 1999)
 - 유럽연합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논의하면서 질적으로 높은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강은영, 2017)

□ 일자리 창출의 구분

- 경제적 관점
 -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 수요가 확대되며 고용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
 - 산업구조 변화, 기업 투자, 생산성 향상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 최근에는 고용 규모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고도화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고용 기반 구축이 중요 과제로 부각
- 사회적 관점
 - 소득 보장, 사회적 통합,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정책 목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용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 추진
 -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강조

표 1-1 | 일자리 창출 관점

구분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개념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 수요 확대를 통해 일자리(직무 단위)가 증가하는 현상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 보장, 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
주요 내용	• 산업구조 변화, 기업 투자, 생산성 향상이 핵심 동인 • 노동 수요 증가를 반영 • 산업 고도화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고용 기반 구축 강조	• 실업을 감소 및 사회안정 도모 • 취약계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 고용의 질 개선 및 형평성 제고 강조

〈자료〉 연구진 작성.

□ 본 연구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향

-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단순한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 산업 구조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직무 단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
-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고용안정성, 경력 발전 가능성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진행
- 또한, 고양특례시의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고용 기반을 구축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향

제2장 일자리 창출 환경 변화와 정책 동향

제1절 글로벌 및 국내 일자리 트렌드 변화

제2절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 현황

제1절 글로벌 및 국내 일자리 트렌드 변화

1. 글로벌 일자리 트렌드 변화

1) AI 기술 발전과 일자리의 변화

□ 기술 발전의 이중 효과

-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노동 생산에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반면,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소멸을 유발하는 이중적 특성 존재
- 동일한 기술 요인이 일자리 창출과 상실을 동시에 초래

□ 노동시장 구조 재편

- AI·로봇 기술 도입으로 인간-기계 간 협업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이 노동의 생산성 보조 및 증강
- AI·로봇 기술에 의해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는 불안감 내재
- 전통적 고용관계가 약화되고, 플랫폼 노동과 같이 단기적이며 높은 유연성을 가진 일자리 확산

□ 고용 불안과 디지털 양극화

- 기술활용 역량과 정보 습득 차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안정성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활동 기회와 경제적 소득격차 확대
- AI 확산에 따른 빅테크 기업의 인력 감축처럼,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한편,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영입 전쟁이 동시에 진행

□ 글로벌 고용 전망 변화(WEF의 「일자리 미래(2025)」 보고서)

- AI와 로봇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약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사람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비율은 약 15%p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자동화기술(82%), 인간-기계 협업 확대(19%)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응답 기업들은 향후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인공지능과 정보처리 기술(86%), 로봇 및 자율 시스템(58%),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술(41%) 순으로 응답

2) 일자리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트렌드

□ 지경학적 분절화

- 미·중 갈등으로 초래된 지경학적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 각국의 보조금 및 보호무역 정책 확대, 글로벌 무역 및 투자 감소 초래
 - 지경학적 분절로 인한 전 세계적 손실은 글로벌 GDP의 0.2%에서 최대 7%로 추정(IMF 전망)
 - 지정학적 분절화는 글로벌 무역 및 투자 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영향
- *예) 통상법률 전문가, 물류 전문가, 공급망관리 전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개발 전문가 등

□ 녹색전환

- 지속가능하고 탄소 중립적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 산업생산, 소비, 에너지공급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노동자들이 다양한 직종과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업, 폐기물관리, 전기차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석탄이나 가스 채굴과 같이 오염이 심한 산업 분야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에너지생산, 중공업, 운수업 등)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 존재
- * 예) 탄소거래분석가, 태양광 발전 설치자, 바이오매스 플랜트 엔지니어 등
- 녹색전환은 경제전반의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이 강조되고 확대될 전망

□ 인구 구조변화

- 세계는 현재 두 가지 방향의 근본적인 인구구조 변화 경험
 - 고소득 국가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노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
 -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보너스(인구배당효과¹⁾) 기대

1) 인구배당효과: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양률(생산가능인구 대비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합)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이며 인구보너스 효과라고도 부름

□ 경제적 불확실성

- 더딘 경제성장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경제충격의 위험에 노출
 - 경제적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축소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시장은 신규채용 축소, 경력직 선호, 청년층 고용 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남
 - 또한, 전체적으로 구인 경쟁률이 높아지고 단기·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

3) 글로벌 고용시장 현황과 전망 2)

□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³⁾은 완만하게 지속 증가
 - OECD국가 평균고용률: 66.3%(2015년) → 66.2%(2020년) → 70.3%(2024년)
 - 고용률 상승은 핵심근로연령층(25~54세)의 고용률 증가가 약 1/3, 고령층(55~64세)의 고용률 증가가 약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소폭 감소
- 좁혀지고 있는 고용률의 성별 격차
 -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OECD 평균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보다 약 0.32%p 상승
- 장기적으로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고용률이 더 크게 상승
 - 청년층(15~24세) 고용률: 40.6%(2015년) → 38.7%(2020년) → 43.2%(2024년)
 - 고령층(55~64세) 고용률: 58.1%(2015년) → 60.2%(2020년) → 64.6%(2024년)
-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50세 이후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 60세 이후에는 보다 급격히 하락하여 65~69세 고용률은 29.6% 수준
 - 연령대 별 고용률(2024년): (50~54세) 78.9%, (55~59세) 73.0%, (60~64세) 55.9%, (65~69세) 29.6%
- OECD국가의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 2023년 2분기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4.8%에 도달, 2025년 1분기 실업률 4.9% 기록
- 코로나19 위기 이후 노동력 부족(labour shortages) 현상 완화
 - OECD 25개국의 구직자 1인당 구인 건수: 0.50(2019.4분기) → 0.41(2025.1분기)

2) O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참조

3)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표 2-1 | OECD 2025 고용률

(단위: %)

구분	2015년	2020년	2024년
평균 고용률	66.3	66.2	70.3
청년층(15-24세)	40.6	38.7	43.2
고령층(55-64세)	58.1	60.2	64.6

〈자료〉 O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 지정학적 불확실성(러-우 전쟁 등)과 관세율 인상으로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모두 둔화 예상
 -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3% → 2025년 2.9%(e) → 2026년 2.9%(e)로 둔화 전망 (OECD, 2025)
 - OECD 회원국(중위국 기준), 고용 증가율은 2024년 1.0% → 2025~2026년 0.7%로 하락할 전망
 - 2060년까지 OECD 국가의 생산가능인구(20~64세)는 -8.05% 감소 예상
 - OECD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층(55~64세) 비중은 2023년 26.9% → 2060년 29.3%로 2.4%p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의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023년 48.1% → 2060년 46.2%로 -1.9%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노령 부양비(65세 이상 인구수/15~64세 인구수)는 2018년 19% → 2023년 31% → 2060년 52%(e)로 크게 증가할 전망

표 2-2 | OECD 2060년 인구 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2060년	예상 증감률
생산 가능인구	20-64세	-	-8.05
	55-64세	26.9	29.3
취업자	48.1	46.2	-1.9
노년부양비	31	52	+21

〈자료〉 O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2. 국내 일자리 트렌드 변화

1) 저성장 시대, 일자리 창출 역량 약화 추세

- 대한민국은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
 - 출산율의 하락, 기대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진행
 - 합계출산율(명): 1.48(2000년) → 1.23(2010년) → 0.84(2020년) → 0.75(2024년)
 - 기대수명(세): 76.0(2000년) → 80.2(2010년) → 83.5(2020년) → 83.5(2023년)
 -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 하락 국면에 진입
 - 생산가능인구(천명): 33,702(2000년) → 36,209(2010년) → 37,379(2020년) → 36,328(2024년)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에 0%대 성장에 진입할 전망

표 2-3 |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2025-2029년	2030-2034년	2035-2039년	2040-2044년	2045-2049년
1.8	1.3	1.1	0.7	0.6

주: 생산함수 모형 기준, 연간 변화율의 5년 평균

〈자료〉 이은경·천동민·김정욱·이동재(2024),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 성장잠재력의 둔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역량 약화

-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은 2024년에 0.3(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전체 고용은 0.3% 증가)으로 둔화 추세
- 특히, 제조업은 -0.02(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제조업 고용은 0.02% 감소) 기록
 - 전 산업 고용탄력성 1.14(2020년) → 0.30(2021년) → 1.11(2022년) → 0.75(2023년) → 0.30(2024년)
 - 제조업 고용탄력성 0.60(2020년) → -0.03(2021년) → 1.24(2022년) → -0.60(2023년) → -0.02(2024년)
- 전반적인 기업의 고용탄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약화 추세가 두드러짐

표 2-4 | 고용탄력성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산업	0.353	0.125	0.478	1.143	0.304	1.111	0.750	0.300
제조업	-0.093	-0.353	-3.600	0.600	-0.031	1.240	-0.600	-0.023

주: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2020년 기준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5), 『2025 KLI 노동통계』.

□ 기존 고용창출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이 향후 약화될 가능성 증가

- 수출의 취업기여율(수출의 취업유발인원/총취업자 수)은 2023년 17.0%로 소폭 개선
- 그러나 최근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제조시설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수출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될 가능성 있음
 - 수출의 취업기여율(%):⁴⁾ 13.6('20) → 15.9('21) → 17.8('22) → 17.0('23)
 - 수출의 취업유발인원 상위 10개 품목(천명, '23년 기준): 자동차(926), 일반목적용 기계(319), 전기장비(283), 반도체(257), 선박(206), 특수목적용 기계(195), 철강1차제품(188), 금속가공 제품(173), 정밀기기(164), 기초화학물질(163)

□ 창업을 통한 일자리공급도 코로나 이후 감소 추세

- 2025년 창업기업 수는 113만 6천 개로 2020년 대비 23.5% 감소
-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 대비 감소세 지속
 - 2025년 연령대별 창업 증감률(% , 전년대비): (30세 미만) -6.6, (30대) -2.8, (40대) -4.8, (50대) -5.6, (60세 이상) -2.1

표 2-5 | 연령별 창업기업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전체	1,344,366	1,285,259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1,135,561	-4.0
30세 미만	138,933	146,766	174,728	183,956	173,022	169,952	148,086	138,332	-6.6
30세 ~ 39세	303,671	293,522	315,784	327,431	320,980	309,663	288,066	280,032	-2.8
40세 ~ 49세	387,868	355,567	391,010	382,474	354,943	323,135	303,845	289,355	-4.8
50세 ~ 59세	339,633	313,768	361,259	326,261	289,278	262,877	259,373	244,743	-5.6
60세 이상	172,794	174,152	240,438	195,678	176,672	170,178	178,033	174,328	-2.1
기타	1,467	1,484	1,448	2,173	2,584	2,812	5,502	8,771	59.4

주: 증감률의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6), 「창업기업 동향」.

4) 한국무역협회(2024), 취업기여율=수출의 취업유발인원/총취업자 수. 참고

2)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는 감소

□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양적 지표는 역대 최고치

- 역대 최고 고용률 기록과 동시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
 - 고용률(15세 이상)의 경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25년 62.9%로 역대 최고치 기록
 - 고용률(15~64세)도 69.8%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2005년 대비 약 6.1%p 증가
 - 그에 반해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며 2025년 2.8%로 2023년 2.7% 다음으로 낮은 수치 기록

표 2-6 |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고용률(15세 이상) 1)	59.9	58.9	60.5	60.1	60.5	62.1	62.6	62.7	62.9
고용률(15~64세)	63.7	63.4	65.9	65.9	66.5	68.5	69.2	69.5	69.8
실업률 2)	3.7	3.7	3.6	4.0	3.7	2.9	2.7	2.8	2.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2026),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일자리의 질 저하 가능성을 시사
 - GDP증가율(%): 9.0(80년대 평균) → 7.4(90년대 평균) → 4.9(00년대 평균) → 3.5 (10년대 평균) → 2.0(2020~2024년 평균)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5)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해지는 현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났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상반된 현상

□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위주의 일자리 증가

-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
 - 약 4,500천 명이던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5년 약 4,300천 명대로 진입
 - 건설업은 2022년 2,123천 명을 기록한 후 2025년 1,940천 명까지 하락
 -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23,000천 명에 이르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른 상승세
- 수출증가세 둔화, 미국의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음
- 특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중과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해당 산업 고용 감소는 안정적 일자리 기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반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는 산업 특성상 임금 격차와 고용 형태의 다양성이 커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표 2-7 | 업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제조업	4,584	4,566	4,510	4,429	4,376	4,368	4,503	4,461	4,455	4,382
건설업	1,869	1,988	2,034	2,020	2,016	2,090	2,123	2,114	2,065	1,940
서비스업	18,477	18,683	18,723	19,063	18,828	19,106	19,694	20,086	20,331	23,000

〈자료〉 국가데이터처(2026),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임금근로자 일자리 증가와 동시에 비정규직 일자리도 증가
 - 임금근로자의 경우, 2025년 22,413천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2016년 대비 5.4%p 증가

표 2-8 |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임금근로자	19,743 (100.0)	20,006 (100.0)	20,045 (100.0)	20,559 (100.0)	20,446 (100.0)	20,992 (100.0)	21,724 (100.0)	21,954 (100.0)	22,143 (100.0)	22,413 (100.0)
정규직	13,262 (67.2)	13,428 (67.1)	13,431 (67.0)	13,078 (63.6)	13,020 (63.7)	12,927 (61.6)	13,568 (62.5)	13,832 (63.0)	13,685 (61.8)	13,845 (61.8)
비정규직	6,481 (32.8)	6,578 (32.9)	6,614 (33.0)	7,481 (36.4)	7,426 (36.3)	8,066 (38.4)	8,156 (37.5)	8,122 (37.0)	8,459 (38.2)	8,568 (38.2)

주: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202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3) 지역별 일자리 양극화 심화

□ 산업구조 재편과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역별 일자리 창출의 쏠림 현상 심화

○ 지역별 고용동향의 특징은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발생

- 2020~2024년간 전체 취업자 증가의 69.4%가 경기(48.4%), 서울(11.5%), 인천(9.5%)으로 수도권에서 발생
- 수도권 이외 지역 중에서 취업자 증가 비중이 높은 지역: 충남(5.1%), 충북(3.7%), 강원(3.5%) 등
- 제조업 취업자 증가 비중이 높은 지역: 경기도(37.1%), 경남(30.3%), 충남(22.0%), 울산(13.6%) 등
-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82천 명), 전남(11천 명), 강원(9천 명), 전북(4천 명), 세종(3천 명)이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오히려 감소

표 2-9 | 시도별 취업자수 증감(2020년~2024년)

(단위: 천 명, %)

구분	전 산업		제조업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	비중	취업자 수 증감	비중	취업자 수 증감
전국	1,930	100.0	132	100.0	-44
서울	222	11.5	-22	-16.7	-10
부산	61	3.2	0	0.0	-5
대구	18	0.9	6	4.5	-35
인천	183	9.5	-6	-4.5	-6
광주	20	1.0	2	1.5	-20
대전	-2	-0.1	-9	-6.8	-19
울산	24	1.2	18	13.6	-2
세종	31	1.6	11	8.3	3
경기	935	48.4	49	37.1	82
강원	67	3.5	9	6.8	9
충북	71	3.7	-6	-4.5	0
충남	98	5.1	29	22.0	-11
전북	51	2.6	14	10.6	4
전남	30	1.6	7	5.3	11
경북	58	3.0	-13	-9.8	-15
경남	44	2.3	40	30.3	-21
제주	22	1.1	0	0.0	-7

주: 청년층은 15~29세임

〈자료〉 국가데이터처(202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세부 지역별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⁶⁾

- 지난 10년(2012~2023) 동안 취업자 수가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
-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는 15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분 331만 명의 46.8%를 차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KTX 개통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개선과 기업 유입 확대 등으로 사실상 준수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형성된 행정 수도권인 세종특별자치시와 호남의 대표적인 혁신도시인 전남 나주시와 전북 완주군 등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

표 2-10 | 취업자 수 증가 상위 20개 시군(2012~2023년)

구분	상위 20개 시군
경기 남부권	하남시(155.7%), 화성특례시(97.4%), 광주시(61.4%), 평택시(55.0%), 시흥시(41.3%), 오산시(37.6%), 용인특례시(34.8%), 과천시(32.4%)
경기 북부권	김포시(86.2%), 파주시(42.6%), 남양주시(42.6%), 양주시(41.7%)
비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276.6%), 양산시(45.5%), 진천군(45.1%), 계룡시(39.8%), 완주군(36.7%), 나주시(34.5%), 아산시(34.5%), 춘천시(31.3%)

주: ()안은 2012년 대비 2023년 증가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운영 및 정책과제」.

- 2023년 1분기 기준, 해당지역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경기도 지역으로, 수도권 대도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
 - 경기 안산시(17.4%)와 충남 천안시(16.6%) 청년 취업자 비중이 최고 수준
 - 서울특별시 청년 취업자 비중 16.5%로 전국 세 번째 수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밀집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 취업자 비중도 15.7%로 높은 수준
 -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학이 많은 경북 경산시와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그리고 중부권 제조업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산시 등 포함

표 2-11 | 청년 취업자 비중 상위 20개 시군(2023년 1분기 기준)

구분	상위 20개 시군
수도권	안산시(17.4%), 서울특별시(16.5%), 안성시(16.2%), 이천시(15.4%), 오산시(15.3%), 수원특례시(15.2%), 의정부시(14.7%), 평택시(14.6%), 용인특례시(14.4%), 성남시(14.4%), 부천시(14.3%), 군포시(14.3%), 화성특례시(14.2%)
비수도권	천안시(16.6%), 경산시(15.9%), 대전광역시(15.7%), 고성군(15.7%), 춘천시(15.5%), 청주시(15.3%), 아산시(15.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운영 및 정책과제」.

6) 한국고용정보원(2024).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운영 및 정책과제」 참고

-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의 요인은 지역마다 지리적 환경, 입지적 요소, 산업구성의 차이에 따라 형성
 -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숙련-고학력 인력일수록 고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
 - 노동수요 측면에서 산업구성의 차이가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조업의 성쇠가 인력의 유출입에 영향
 -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의 대도시 집중이 일자리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 도로와 철도교통망,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경성 인프라(hard infrastructure)와 이에 대응하는 인재 유치, 네트워크 연결 등 연성 인프라(soft infrastructure)가 상호 균형 있게 추진되는 도시로 인구 유입

3. 글로벌 및 국내 일자리 트렌드 변화를 통한 시사점

□ 기술 변화에 대응한 미래역량 중심 일자리정책 강화 필요

- AI·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직무 재편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단순 취업 지원을 넘어 디지털 활용 능력과 직무 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
- 신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개발 및 직업훈련 체계 강화 필요

□ 양적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중심 정책 전환 필요

- 저성장 기조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취업자 수 증가보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 고용의 안정성, 임금 수준, 직무 숙련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질 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

□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고려한 일자리 기반 확대 필요

- 청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간 인재 확보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단기 취업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직무경험, 역량개발, 지역 내 일자리 기회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 청년층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창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한 일자리 기반 강화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일자리정책 확대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흐름을 고려할 때, 청년 중심 정책에 더해 중장년 및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

□ 산업 변화와 연계한 성장기반형 일자리정책 강화 필요

-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가 노동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정책을 산업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산업 기반과 연계한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

제2절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경제성장전략 방향⁷⁾

□ 추진 배경

- 생산연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지연, 기업 투자 위축, 청년 노동참여 정체 등으로 인하여 국내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심화
- '25년 8월 새정부는 경제 대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비전, 정책방향, 경제성장전략 수립

□ 경제성장전략 방향

- 2025년 하반기부터 다음의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지속성장 기반 강화
- 기술선도 성장
 -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 재정 적극 지원
 - R&D 사업(시범사업)부터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예: R&D 예산 대폭 확대, 예타 제외·면제)
 - 기업 투자 시 ‘국민성장펀드금융,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제, 전력 지원’ 등의 전방위적 수단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분담폭 확대 예정
 - 특히, AI·첨단소재·기후·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속련·고임금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중점
- 모두의 성장
 -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을 통해 전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할 수 있는 성장의 영역 확대
 - 특히, 지역균형성장과 관련하여 지역주도 성장(AI 기반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성장엔진 집중지원, 지역소득기반 확충, 지역 재도약 지원 등을 통해 지방 우대 정책체계로의 개편 강조
- 공정한 성장
 -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와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성장유인을 제고하고,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및 상생·협력 기반의 고용환경 조성 도모

7) 관계부처합동(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08.22)” 참고

2) 중앙정부 주요 일자리 정책⁸⁾

□ 2026년 예산 편성 방향

-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
 -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7조 6,7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 증가(+6.6%)
 - (2023년) 34.95조원 → (2024년) 33.7조원 → (2025년) 35.3조원 → (2026년 안) 37.6조원 → (2026년 최종) 37.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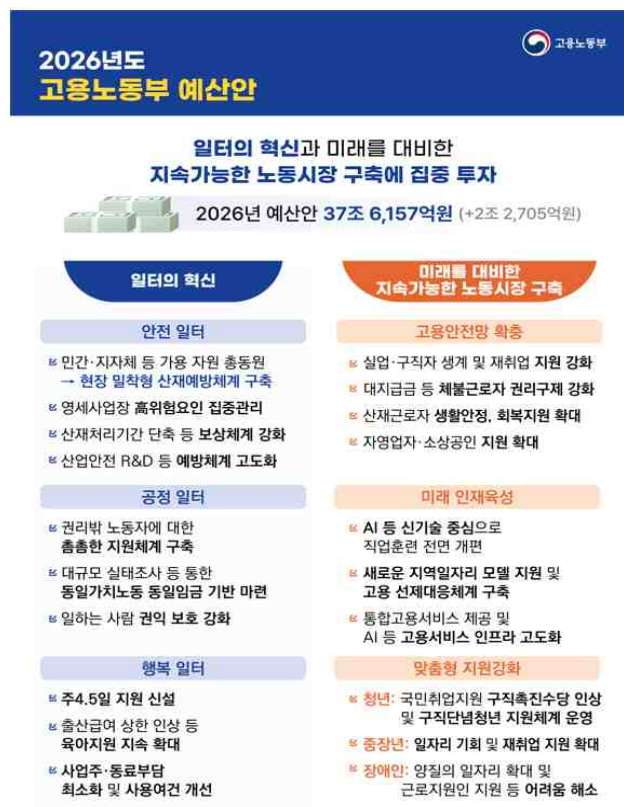
□ 일자리 정책 기조 주요 정책

- 고용노동부는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2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일터의 혁신
 - 안전 일터 조성
 - 민간·지자체 자원 총동원을 통한 현장 밀착형 재해예방체계 구축
 - 영세사업장 위험요인 집중관리 및 산재보상체계 강화
 - 산업안전 R&D 확대 등 예방 중심 체계 고도화
 - 공정 일터 구축
 - 취약 노동자 보호체계 강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
 - 노동권 보호 및 권리구제 체계 강화
 - 행복 일터 조성
 - 주 4.5일제 지원 신설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지원
 - 육아지원 확대 및 출산·양육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사업주·근로자 부담 완화 및 사용여건 개선
-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 고용안전망 확충
 - 실업·구직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대지급금 및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확대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및 회복지원 강화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8) 고용노동부(2025). “[보도자료] (참고)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2025.12.03)” 참조 및 재구성

- 미래 인재양성
 - AI 등 신기술 중심 직업훈련 체계 전면 개편
 - 지역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대응체계 구축
 -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및 AI 기반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청년지원체계 운영
 -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근로지원 강화

그림 2-1 | 일자리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2025), “[보도자료] (참고)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2025.12.03)”.

□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 특히, 미래세대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
- AI·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체계 전면 개편
 - AI 등 신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
 - 첨단·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 확대('25년 4,781억 → '26년 5,213억)

- 훈련장려금 인상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특별수당 지원
- 폴리텍·공동훈련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AI 특화 교육 확대

○ 지역 연계형 청년 일자리 모델 확대

-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 1,926억 편성
- 지역 고용둔화 대응 및 초광역 협력 모델 추진

○ AI 기반 고용서비스 및 인프라 고도화

- AI를 활용한 신규 고용서비스 개발
- 통합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 고용정보 접근성 및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청년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인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일경험 지원 확대
- 대학재학생·졸업생 대상 맞춤형 고용지원 인프라 강화
- 구직단념청년·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 청년 특화 프로그램 확대

그림 2-2 | 미래세대 대상 일자리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2025), “[보도자료] (참고)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2025.12.03)”.

[참고]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향

-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초기에는 경기 부양 및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고용률 제고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혁신성장 기반 고용 창출 등으로 정책 초점이 점진적으로 이동
- 최근에는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선도 성장, 지역주도형 일자리 모델, 청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적 접근 강화
- 이러한 정책 흐름은 단기적 고용 확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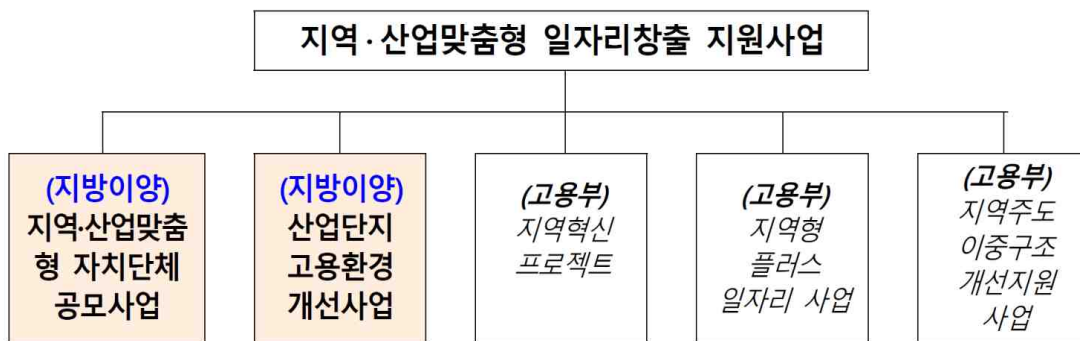
참고 표 | (참고)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김대중정부 (1998~2003)	-배경: IMF 위기 직후, 대량 실업 시대 -정책: 공공근로사업 대폭 확대(‘희망근로사업’), 고용보험제도 강화, 직업훈련 확충, 벤처기업 육성(IT산업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기초생활보장제) 등 -특징: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 중 하나이며, 단기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노무현정부 (2003~2008)	-배경: 청년실업 심화, 비정규직 문제 대두 -정책: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2006),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청년인턴제 확대, 지역균형 발전, 지방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사업 확대 등 -특징: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기반 마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심
이명박정부 (2008~2013)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정책: 녹색성장(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육성), 청년인턴제, 시니어클럽 확대 등 취약계층 고용대책, 워크넷 강화, 고용센터 확대, 4대강 사업 등 SOC 투자를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 등 -특징: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심, 단기 실업을 안정에 기여
박근혜정부 (2013~2017)	-배경: 저성장 고착, 고령화 심화 -정책: 고용률 70% 로드맵, 여성·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육아휴직, 시간제 일자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스타트업·벤처 지원), 고령층 일자리 지원 강화 등 -특징: 고용률 제고를 명시적 국정 목표로 제시, 여성 고용률 증가 등 기여
문재인정부 (2017~2022)	-배경: 정부 슬로건,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정부” / 취임 첫날 ‘일자리 상황판’ 설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한국판 뉴딜(미래산업 중심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특징: 일자리 중심 정부, 단기 고용 증가 기여
윤석열정부 (2022~2025)	-배경: 디지털 전환, AI·반도체 산업 성장,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 시대 도래 -정책: 노동 개혁(근로 시간·임금 체계 유연화),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규제 완화, 스타트업 활성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특징: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구조 개혁형 일자리정책, 첨단산업 인력 중심의 미래형 고용 구조 전환 추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고용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기회의 확대, 취업 역량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일자리 정책
- 과거 중앙정부
 - 지역이 나서서 지역 현안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고용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목표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현실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련
-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창출하고, 지역 기반의 혁신 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22년부터 동 사업 중 일부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전 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 재분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여건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맞춤형 일자리 정책 기획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그림 2-3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유형 구분



〈자료〉 경기도(2024), “24년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추진 배경

- 중앙정부 수립 일자리 정책의 전국 단위 통합적 제시에 따른 정책 방향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고용 여건 불균형 심화에 따라 지역별 경제구조·산업발전 수준·인구·노동시장 특성·사회문화적 배경 등 다차원적 요인 반영의 한계 심화
-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 일자리 사업의 목표 성과(예: 부문별 목표고용률, 부문별 목표취업자수 등) 공식 발표

○ 주요 내용

- 성과평가의 기준점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시된 목표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2010년부터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진단 시스템(지역일자리맵)’ 활용을 통한 지역 노동시장 정보 진단·파악 및 효율적 지역일자리 정책 수립 노력

○ 성과관리 체계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한 연례 개최
 - 2012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실적 종합 평가 및 우수 지자체 시상 행사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의 수상 소식 적극 홍보
 - 고양특례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수상 기록(연합뉴스, 2022.07.22.)

2. 경기도 일자리 정책 현황

□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 추진 방향

-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대응하여 2023~2026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미래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핵심 방향 설정
- 정책은 크게 생애주기별 일자리 기회 확대, 미래·첨단산업 중심 혁신성장, 일자리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축으로 구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기회 제공
 - 청년, 베이비부머, 노인, 여성 등 대상별 고용정책 세분화
 - 재취업 및 경력활용 지원 확대
 - 미래·첨단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
 -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기업 육성
 - 기업 연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기술혁신형 창업 생태계 조성
 - 제도적 기반 강화
 - 광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 구인·구직 플랫폼 고도화

□ 2025년 경기도 일자리 정책 방향

- 경기 둔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첨단산업 중심의 일자리 활성화 전략 제시
-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고용률 제고 및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 목표 설정
- 주요 정책 방향
 - 혁신성장·균형발전 기반 일자리 확대
 -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그림 2-4 | 2025년 경기도 일자리정책 비전, 목표와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2025년 경기도 일자리정책 비전과 목표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비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미래 도약 경기도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	2025년 실천 전략
	목표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 대상 넓히고(the bigger), 늘리고(the more), 잘 높이고(the better) < 2025년: 고용률 71.1%, 상용근로자 비중 60.5%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기회 제공 [청년] 일경험 등 다양한 기회 제공 [베이비부머] 경력활용 맞춤 지원 [노년] 사회활동 참여 촉진 [여성] 경력활동 촉진 취업유망 강화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육성 지원 •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육성 지원 •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 추진을 통한 혁신형 일자리 창출
5대 전략	역신성장·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미래·첨단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육성 지원 • 북부발전계획 등 지역특화 성장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 추진을 통한 혁신형 일자리 창출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니트·온도·청년 등 고용시장 재진입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 베이비부머 경력 활용 등 중장년 취업역량·재취업 지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여성 취업 및 경력유지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일자리 형성·유지·안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여성 취업 및 경력유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인·구직자의 쌍방향 수요를 반영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확대 • 구인·구직 정보비대칭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지원 • 원활한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장시간 근로개선, 일·생활 균형 일터 문화 확산 지원 •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노동환경·안전문화 정착 조성 지원	지역기반 협력체계 구축	• 일·생활 균형 일터 문화 확산 • 안전한 노동환경·안전문화 정착
	• 지역 내 중앙-지역 일자리 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 • 중앙-지역 고용복지서비스 사업의 통합관리 등 연계 지원		

〈자료〉 경기도(2025). “2025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연차별 세부계획.”

□ 세부 실천과제 및 미래세대 정책

○ 혁신성장·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육성 지원, 북부발전계획 등 지역특화 성장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 추진을 통한 혁신형 일자리 창출 초점
- 첨단산업 분야 미래세대 고용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 현황(표 2-12)

표 2-12 | 혁신성장·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주요 목적: 첨단산업 분야 미래세대 고용 활성화)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국가직접지원)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실시	도내 구직자 (미취업 청년 등)
2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실무형 기술인력, 반도체 교원양성 및 공공교육 인프라 기반 실습교육 지원·운영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고교, 취업 준비생 등
3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	취업전문교육/자격증전문교육/도민맞춤형과정	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4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취업희망자(대학생) 대상 단기 집중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년 및 대학생
5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4차산업 전환에 적합한 미래기술 분야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촉진	도내 15세 이상 미취업자
6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빅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맞춤형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도내 거주/대학(원) 졸업(예정)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7	미래융합전문교육	신기술 및 미래 유망 직종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	신기술 및 미래 유망 직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8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특강, 창업캠프, 데모데이,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자금지원 등	도내 거주 39세 이하 예비·3년 이내 창업자

〈자료〉 2025년 고용노동부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재구성.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접속일 2025.09.24).

○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경제활동 참여 지원, 중장년 취업 역량·재취업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여성 취업 및 경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에 초점
- 미래세대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표 2-13])

표 2-13 |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주요 목적: 미래세대의 취업역량 강화)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도내 청년
2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직무교육 및 기업 현장실습(2개월, 4개월)	도내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 등
3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미취업 청년이 매칭된 중소기업에서 일경험(2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지원	도내 청년 및 중소기업
4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우수 중소기업 발굴·선정 및 구직자 매칭	경기북부 중소기업, 북부 특성화고 재학생 및 대학생
5	경기북부 직업교육	경기북부 산업 및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 운영	도내 거주 미취업자

〈자료〉 경기도(2025). “2025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연차별 세부계획.” 재구성.

○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구인·구직자의 쌍방향 수요를 반영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확대, 구인·구직 정보비대칭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지원, 원활한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초점
- 산업생태계 구인구직 매칭 효율 증대 관련 주요 사업 현황([표 2-14])

표 2-14 |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주요 목적: 산업생태계 구인구직 매칭 효율 증대)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직업상담사를 통해 도민에게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도민
2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비스 운영 등	일자리 정책 정보 제공, 비대면 취업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민 및 수도권 소재 우수기업
3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대학 내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및 취업서비스 강화,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도내 대학 22개소
4	일자리상황판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일자리 상황판 운영	경기도 및 시·군 일자리사업 담당자
5	경기도광역일자리센터 운영	신성장산업 및 전문·기술직 중심 구인·구직 발굴, 상담, 알선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6	도민평생 일자리앱 운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추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지원	경기도민

〈자료〉 경기도(2025). “2025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연차별 세부계획.” 재구성.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장시간 근로개선, 일·생활 균형 일터 문화 확산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노동환경·안전문화 정착 조성 지원 초점
- 고용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통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확립 중점

○ 지역기반의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성 구축 강화와 중앙·지방 고용복지서비스 사업 통합 관리 지원 초점
-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표 2-15])

표 2-15 | 지역기반의 협력체계 구축 전략에 의거한 실천과제(주요 목적: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공모사업	•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되, 지역산업별 여건에 맞춰 우대지원 조건 부여 및 지원 확대	도내 미취업자, 반도체·부라·자동차산업 관련 중소기업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역장학형 - 지역기반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 지급 • 지역지원형 - 창업컨설팅·직무교육 등 간접지원 및 추가 고용 창출 지원	도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3	시군 일자리광역지원 강화사업	• 일자리사업 광역기능 강화 추진(예: 설명회, 일자리 네트워크, 취업지원 컨설팅 등)	도내 31개 시·군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유관기관

〈자료〉 경기도(2025). “2025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연차별 세부계획.” 재구성.

3.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⁹⁾

□ 추진 배경

-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동시에 중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양극화 및 고령화 심화
- 소규모 영세 사업체 중심 구조의 산업 탈피를 통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필요

□ 일자리 정책 전략 방향

-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 기반 확충, 고용안정,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 방향 설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일자리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구인·구직 연계 체계 강화
 - 일자리창출위원회 및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운영
 - 유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대상별·유형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 일자리기금 활용을 통한 전략적 신규 일자리 발굴
- 경제자유구역 및 전략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 산업거점(지식산업센터 등) 관리 강화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UAM, 디지털, 콘텐츠 등 미래산업 기반 일자리 영역 확대
 - 콘텐츠·방송영상 분야 기업 특화 육성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마이스(MICE) 인프라 및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추진
- 생애주기별 균형 일자리 확대
 -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고양형 일자리학교 운영
 - 청년 공간 조성 및 직무체험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여성·노인·신중년 등) 대상 공공·사회적 일자리 지원
-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기반 조성
 -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
 - 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근로환경 개선
 - 교통·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기반 강화

9) 고양특례시(2025). “-지역일자리 공시제- 2025년도 고양특례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참고

그림 2-5 | 2025년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비전 및 전략

III. 2025년 일자리 목표	
1 비전 및 전략	
비 전	고양시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글로벌 자족도시 고양!
목 표	고용률 68.9%, 취업자수 560,500명 초과달성
4 대 전략	1. 고양 최적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양형 일자리 통한 거버넌스 강화 2.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글로벌 신산업 성장 3.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 일자리 청년, 여성, 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4.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여건 조성 기업 자생력 강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
8 대 핵심과제	고양 최적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① 지역 통합일자리 거버넌스 내실화 ②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거버넌스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일자리 창출 ③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자족능력 강화 ④ 글로벌, 지식산업 기반 신성장 동력 일자리 마련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 일자리 ⑤ 지역 안착형 청년 인적자원 양성 ⑥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여건 조성 ⑦ 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⑧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자료〉 고양특례시(2025). “-지역일자리 공시제- 2025년도 고양특례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표 2-16 | 2025년 고양시 일자리 대책 4대 전략과 핵심과제

4대 전략	8대 핵심과제	세부 계획
고양 최적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① 지역 통합일자리 거버넌스 내실화 ②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거버넌스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위원회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기업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추진 -일자리 기금운용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일자리 창출	③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자족능력 강화 ④ 글로벌, 지식산업 기반 신성장 동력 일자리 마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마이스육성센터 운영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 -지식산업센터 추가 설립 및 운영 -ICT 융복합 육성지원 사업 -고양시특수출연식도 운영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 -고양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 일자리	⑤ 지역 안착형 청년 인적자원 양성 ⑥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신종년경력형 일자리 사업 -고양맞춤형 일자리 학교 공모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8청춘창업소 운영 -1인창조기업육성센터 운영 -내일꿈제작소운영 -고양청년동지론사업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동국대향동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여건 조성	⑦ 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⑧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 -기업입주시설 입주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역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

〈자료〉 경기도(2025). “2025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연차별 세부계획.” 재구성.

□ 세부 일자리 정책

○ 직접일자리 창출

-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 계층 생계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및 재취업 기회 마련 초점
- 직접일자리 대표 주요 사업([표 2-17])

표 2-17 | 직접일자리 창출 대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공공근로 사업	취약계층, 청년실업자,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지원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	고양청년 미래도약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18-39세의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65세 이상 어르신
4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5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미세먼지 집중 발생 사업장 및 불법소각 의심지역 등에 대한 감시·단속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10명

〈자료〉 고양특례시(2025). “2025년 고양특례시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재구성.

○ 직업능력개발훈련

-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계층별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표 주요 사업([표 2-18])

표 2-18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공모사업	구인기업과 협약을 맺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이 참여자를 지도해 취업 연계를 강화	고양특례시 거주중인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2	미래기술학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 양성	18-39세의 고양특례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청년
3	농업기술전문교육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도모	관내 농업인

〈자료〉 고양특례시(2025). “2025년 고양시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재구성.

○ 고용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초점
- 고용서비스 대표 주요 사업([표 2-19])

표 2-19 | 고용서비스 대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운영	구직자와 구인기업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	고양특례시민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한국항공대)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관내 대학교 재학생, 졸업 2년 이내 및 지역 청년
3	새일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에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관내 경력단절여성

〈자료〉 고양특례시(2025). “2025년 고양시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재구성.

○ 창업지원

- 계층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 창업지원 대표 주요 사업([표 2-20])

표 2-20 | 창업지원 대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고양청년 미래드림 창업지원사업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도모	18세~39세의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창업 7년 이내인 창업 초기 청년
2	28청춘창업소 운영	시민의 인식 확산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 화하기 위한 28청춘창업소 조성을 통해 고양 특례시 창업 생태계 조성	고양특례시 내 기업 및 청년창업가
3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역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창업 생태계 확산	미디어 특화 고양특례시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

〈자료〉 고양특례시(2025). “2025년 고양특례시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재구성.

○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질 개선

-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률 증가에 초점
-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질 개선 대표 주요 사업([표 2-21])

표 2-21 |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질 개선 대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내일꿈제작소 운영	혁신적인 청년 주도 경제활동 추진을 위한 청년 취·창업 생태계 인프라 확충	18세~39세의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2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지식산업센터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운영 안정성 확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자료〉 고양특례시(2025). “2025년 고양특례시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재구성.

○ 기타

- 사업 분류별로 대규모 시정 역점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
- 기타 대표 주요 사업([표 2-22])

표 2-22 | 기타 대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1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신규개설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고양특례시민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3	고양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고양문화재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대중화 및 활성화 기여	고양특례시민

〈자료〉 고양특례시(2025). “2025년 고양특례시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재구성.

4. 국내 주요 정책을 통한 시사점

□ 산업·기술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가속

- 중앙정부는 AI·첨단산업 중심의 기술선도 성장과 인재양성(직업훈련 개편)에 재정을 집중하고, 경기도 역시 미래·첨단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클러스터·기업협력 인재양성을 핵심 축으로 제시
- 고양특례시 또한 단기 취업지원 중심을 넘어 기업수요 연계형 일자리 체계 전환 필요

□ 지역주도·공모형 일자리 정책 구조 강화

- 중앙정부는 지역산업맞춤형, 목표공시제 등 지역주도형 정책과 성과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운영하며, 경기도도 목표·전략 중심의 종합계획을 통해 광역-기초 연계 정책 강화
- 고양특례시는 성과지표 기반 설계, 공모·재정사업 대응 역량 강화와 광역-기초 협력 사업 발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전략적 활용 필요

□ 청년 중심의 경로 설계형 정책 확대

- 중앙정부 및 경기도 모두 청년정책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
- 고양특례시도 청년층에 대해 일경험-훈련-매칭-정착 등을 묶는 패키지형 설계와 취약청년 특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고용서비스의 AX,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정책 확대

- 중앙정부는 AI 기반 고용서비스·통합고용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도 플랫폼 및 인프라 개선을 전략으로 제시
- 고양특례시는 통합일자리센터/플랫폼을 단순 안내 기능에서 데이터 기반 매칭, 상담, 사후 관리 중심 고도화가 필요하며, 광역 플랫폼과 연계 필요

□ 취약계층·중장년 고용안전망 보완 필요성 확대

- 중앙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과 맞춤형 지원을, 경기도는 생애주기별 대상 확대와 안전한 일터 조성 함께 강조
- 고양특례시는 중장년 전환훈련·재취업, 여성 경력복귀, 고령층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고도화하되, 노동권익·안전 등 일자리 질의 축 함께 강화

제3장 국내외 일자리 창출 사례

제1절 해외 일자리 창출 사례

제2절 국내 일자리 창출 사례

제1절 국외 일자리 창출 사례

1. 미국의 일자리 창출 사례: 캘리포니아주¹⁰⁾

-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州) 차원에서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 미국의 여러 주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 세액공제, 연구 개발(R&D)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재정정책¹¹⁾ 활용
 - 동(同) 정책의 민간기업 고용확대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Chirinko and Wilson, 2023)
 - 캘리포니아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주(州)로서, 주요 정책으로는 세액공제, 보조금과 대출, 그리고 창업자와 근로자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원 포함

1) 세액공제(Tax Credit)

- 소득세 세액공제
 - 캘리포니아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세액공제
 - 규모: 연간 1억5천만~2억달러 규모로 운영되며, 2022~23년 실제 사용액은 1억달러 수준
 - 심사 기준: 지원기업 선정 시 신규 정규직 일자리 수, 투자규모, 지역/주 전략적 중요성 등이 평가요소. 특히 정규직 순고용 증가의 75% 이상이 저소득 또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
 - 사후 관리: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3년간 유지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환수 조항을 엄격히 적용

10) Neumark and Wohl(2023)을 참고하였음

11) 바이오기업 등 특정산업에 적용되는 투자·고용 세액공제, 판매·사용세 면제, 저금리 창업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등

- 실증적 평가결과: 세액공제로 지원받은 지역의 실제 취업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Freedman et al., 2023), 3년간 고용 및 급여 성장률도 최대 30% 상승했으며, 특히 저소득 취약지역에서 두드러진 고용·급여 증가 효과(Hyman et al., 2023)

□ 고용창출 세액공제(New Employment Credit)

- 실업률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정 지역(Designated Geographical Area, DGA)’에서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고용창출 시 기업에게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
- 적용 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 채용까지 적용
- 자격 요건: 35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이면서, 채용 시점에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과거 6개월 이상 실업자, 최근 1년 내 전역 군인, 전년도 연방 근로소득세 공제 수급자, 범죄 전과자, 아동부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CalWORKs¹²⁾) 수급자 또는 카운티 보조금 수급자)
- 공제 내용: 시간당 임금이 주(州) 최저임금의 150%~350%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급의 35%를 세액공제로 환급. 최대 5년동안 직원 1인당 최대 \$56,000까지 기업 소득세 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22~2023년 회계연도 집행액: 약 500만달러¹³⁾

□ 영화, TV제작 세액공제(Film & Television Tax Credit Program 4.0)

-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작된 영화·TV 프로그램은 제작비용에 따라 세액공제 제공
- 공제 내용: 매 5년간 15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최대 90%를 환급형으로 지급(수혜기업의 세금부담이 공제액보다 낮으면 해당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 실증적 평가결과: 세액공제 제공이 캘리포니아의 출연진 및 영화제작자 수를 평균 123% 증가했으며,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평균 388% 증가(Workman, 2021)

□ 영상 세액공제(Soundstage Filming Tax Credit Program)

-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상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세액공제
- 시행 주체: 캘리포니아 영상 위원회(CFC)

12) 아동부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CalWORKs, 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현금지원, 고용·직업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13) 제도가 복잡하고, 지역임금대상요건 제한으로 기업의 활용 실적이 낮음

- 적용 기간: Senate Bill 144(법령)에 근거해 2022년 1월 1일~2032년 1월 1일까지 한시적 시행
- 공제 내용: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에서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적격 경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제공하며, 독립영화와 신규 TV 시리즈는 적격 경비의 25%, 여타 제작물은 20%를 세액공제 환급 가능
- 신청 요건: 예산의 최소 75% 이상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출하거나, 주요 촬영일 최소 75% 이상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예산: 연간 1억5천만달러 할당, 프로젝트별 최대 5,400만달러 한도

□ 노숙인 고용 세액공제(Homeless Hiring Credit)

- 노숙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
- 적용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공제 내용: 고용주는 노숙인이거나 노숙인 지원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 1인당 2,5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 세액공제(R&D Credit)

- 1987년에 도입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내 과학인력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 실증적 평가결과: 세액공제율이 인상된 후 기업별 실질 R&D 지출이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Paff, 2005)

2) 보조금 및 대출프로그램(Grant and Loan Programs)

□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Competes Grant)

-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거나, 유지 및 성장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1억 2천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 비환급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보조금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개발 기회를 캘리포니아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캘리포니아 소기업 자본 접근 프로그램(California Capital Access Program for Small Business)

- 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대출 손실 준비금 제도

- 특정 대출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참여 대출기관에 최대 100%까지 보전
- 캘리포니아 자본 접근 프로그램 담보 지원(California Capital Access Program Collateral Support)
 -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보강 프로그램 운영
 - 캘리포니아 내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5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담보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
 - 민간, 공익재단, 공공부문의 자금을 모아 캘리포니아 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경제 위기에서 재개·회복할 때 필요한 자금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소기업 금융센터 대출보증 프로그램(Small Business Finance Center)
 -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출보증 제도
 - 실증적 평가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 향상(Bradshaw, 2002)

3) 근로자 및 창업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 근로자 교육·지원 프로그램
 -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기업에 근로자 직업훈련비 지원
 - 실증적 평가결과: 회사 매출·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Negoita and Goger, 2020)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보험 부담 감소에도 기여(Moore et al., 2003)
- 창업자 교육·지원 프로그램
 - 다양한 창업자 훈련 프로그램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인재의 역량 제고에 성공적이었던 평가 존재
 - 아직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의 인과관계는 별도의 추가 연구 필요

2. 독일의 일자리 창출 사례: AUTO 5000¹⁴⁾

□ 추진 배경

- 1990년대 중후반 독일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폭스바겐의 경영난 심화
 - 당시 독일 내 자동차 생산량이 40% 급감하고, 고용이 1만명 이상 줄어드는 심각한 경기 침체 및 고용위기에 직면
 - 국내 실업자 확대, 구조조정 후폭풍 등 사회적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제조업 일자리 유지가 시급한 상황
 - 고임금·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해외로 생산기지가 유출

□ 프로그램 내용

- 일정 기간 어떠한 인력 구조조정도 시도하지 않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전 직원의 근로시간을 약 20% 정도 단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 삭감(인사 담당 임원인 Peter Hartz의 구상)
 -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노동조합은 당시에 하르츠가 구상했던 모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이에 노사 양측은 협상을 시작하여 소위 ‘주 28.8시간 근무제’ 도입 합의

□ 프로그램 진행과정

- 당시 폭스바겐의 기존 근로자 평균임금의 80% 정도에 상응하는 5,000마르크를 지급받는 5,000명의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공장 건립
 - ‘AUTO 5000 유한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새로운 공장을 볼프스부르크에 건설
 - 폭스바겐 경영진은 볼프스부르크에 3,500개 및 하노버에 1,500개 등 총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데 우선적 활용
 - 2002년 3월 본격적으로 실업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2002년 11월 다목적 밴 투란(Touran), 2007년 8월 티구안 생산
 - 2000년대 중반 들어 유로화의 출범에 의한 독일 주요 수출산업의 호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폭스바겐의 경영 정상화
 - 2008년 11월 모기업인 폭스바겐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통합 단체협약 체결
 - 2009년 1월에 약 3,500명의 Auto 5000 유한회사의 근로자들은 모기업인 폭스바겐사로 최종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AUTO 5000프로그램의 실험도 성공적으로 종결
 - 2009년 AUTO 5000 유한회사는 해체되고 이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폭스바겐 본사의 정규직원으로 귀속

14) 박성훈 외(2018), 최균호(2019) 참고

□ 프로그램 실증적 평가

- 대규모 실업 해소, 고용창출 압력 속에서 '노동조건 타협'과 혁신적 거버넌스, 능동적인 노동자 참여, 유연노동 실험의 상징으로 평가
 - 노동시장 정책측면에서 볼 때, 해외에 공장을 지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Auto 5000 유한회사 공장은 폭스바겐 공장 중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공장으로 기록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 평가 존재
 - Auto 5000 프로젝트가 운용되었던 지난 7년간, 이전에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자동차 생산 가능 사실 도출
 - 노조 및 정책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로 평가하며, 독일·유럽의 자동차 및 제조업계에서 노사관계에 신(新) 표준의 벤치마크 역할
 - 오늘날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모델' 설계에 주요 참고사례로 활용

□ 성공의 핵심요인

- 직원 채용 시 실업자 중심의 채용
 - Auto 5000 프로젝트의 본질은 동종업계의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하게 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실업자를 채용함으로써 저임금의 불만 극복
- 기존의 자동차 공장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조직 운영
 -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7~17명 단위의 팀을 구성하여, 모든 공정의 기본 작업을 팀 단위의 작업으로 만들었으며, 기존에 6~7단계로 존재하던 위계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여 수평적이고 단순화된 위계 구조를 만들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새로운 형태의 숙련 교육 도입
 - 비숙련 근로자들을 3단계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숙련 근로자로 변화시켰으며, 작업 현장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 스스로 작업공정을 이해하고,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 * 직업교육은 준비단계, 시작단계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간동안 현장교육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
 - 근로자의 이러한 주체적인 활동과 능동적 참여는 근로자와 회사의 일체감을 높이는 데 기여

3. 일본의 일자리 창출 사례: 지역고용정책¹⁵⁾

□ 추진 배경

- 지방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는 반면 도쿄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는 청년층 인구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 지속
- 도쿄 등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정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
- 2000년 이후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
- 이에 일본정부는 지역 재건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획·입안한 계획을 추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방 분권형 정책으로 전환 시도

표 3-1 | 지방분권화 방침에 따라 시행된 주요 산업정책

정책	추진 내용
산업클러스터 계획	• 2000년 경제산업성이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발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기술개발의 추진, 창업자 육성 시설(인큐베이터)을 정비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 전국에 19개의 프로젝트가 계획·실시
지식클러스터 창성(創成)사업	• 2002년부터 문부과학성에서 시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의 기업을 참여시켜 구성하는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을 목표 • 18개 지역이 동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
구조개혁 특별구역법 (2002)	• 지방공공단체의 자율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을 한정한 특례조치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지방 응원프로그램	• 총무성의 '지방응원프로그램'은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90% 이상이 응모 • 응모자 수가 많은 것으로 저출산대책 프로젝트, 관광진흥·교류 프로젝트, 환경보호 프로젝트, 안심·안전마을 조성 프로젝트, 지역특산물 발굴·브랜드화 프로젝트 순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촉진법 (2007)	• 지역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상품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시장화를 통합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목적 • 지원조치의 내용은 보조금, 전문가 자문, 판로확대 지원 등
지역고용창출 추진사업	• 2005년부터 후생노동성이 실시 • 기초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계획 중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콘테스트 방식을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계획을 선발, 사업수행 위탁, 최대 3년간 보조금 지급

〈자료〉 이토 미노루(2015), 강은영 외(2015) 참조하여 재구성.

15) 이토 미노루(2015), 강은영 외(2015) 참고

- 2000년 이후 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산업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되었던 고용창출 분야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도 점차적으로 대책 강구 시작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업용지를 정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대규모의 고용증가가 발생한 지역 출현
-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도 지역 나름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고용창출 정책 시도

1) 기업유치형 개발

□ 기본 방향

- 공장부지를 조성·정비하고 각종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 특징

-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고 관련 부품기업의 진출까지 포함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크고 확실
- 최근 대부분의 성공사례는 지리적 특성과 비교우위 등을 고려해 유치 산업과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화하는 전략형 기업유치 방법 구사

□ 성공 사례

○ 미에현(三重県)

- 미에현 지사로 당선된 키타가와 마사야스가 취임하면서 ‘크리스탈 밸리’ 육성 구상 본격화
- 크리스탈 밸리는 21세기형 성장산업의 하나인 액정을 비롯한 평면형 패널 디스플레이 산업의 집적 목표
- 일본 액정산업의 선두기업인 (주)샤프와 관련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고용 크게 증가

○ 오키나와현

-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오키나와현이 고용창출을 위해 주목한 것은 IT관련 산업
- 오키나와현은 ‘멀티미디어 아일랜드 구상’을 발표하고, 통신 인프라 정비, 각종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등 IT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고용창출 성공

○ 쿠마모토현

- 쿠마모토현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테크노 파크’ 조성
- 기업유치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대규모 고용창출 성공

2) 산업 클러스터형 개발

□ 기본 방향

- 지역의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공간적으로 집적시키는 전략 산업 중심의 개발
- 지역밀착형 산학관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과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 문부과학성의 지식클러스터창성사업 진행 과정

□ 특징

- 고용창출의 규모는 크지만 고용창출을 실현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 기존의 공장 유치형 개발과는 달리 지역에서 자발적 산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유형

□ 성공 사례

- 효고현 고베시
 - 산업클러스터 개발에 기존의 지역 구조개혁특구를 통합시켜 지역개발을 추진한 사례
 - 고베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지식 클러스터 창성사업¹⁶⁾」에 더하여 「첨단의료산업특구¹⁷⁾」로 인증
 - 「첨단의료산업특구」에서 이화학 연구소의 유치, 고베 임상연구정보센터, 첨단의료센터 등 핵심시설이 정비되고, 의료 관련 기업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지역 고용창출 성공

3) 벤처 비즈니스형 개발

□ 기본 방향

-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자원에 제약이 있는 자치단체가 추진 가능한 저비용·고효율형 지역고용창출 전략 중 하나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대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 기반 구축
- 단기 고용 확대보다는 지역 내 혁신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 중점의 전략

16)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2002년부터 추진중인 『지식클러스터 창성(創成)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의 기업을 참여시켜 산학관 교류, 공동연구 등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사업

17) 고베 의료산업특구는 인공섬 포트아일랜드에 조성된 단지로서 임상시험,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과 의료기업 약 360개가 모여 있는 일본 최대 바이오·의료산업 단지

□ 특징

-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 규모로 낮은 추진 부담
- 창업 및 벤처 육성을 통해 단기간 내 고용 창출의 속도는 빠르지만 적은 고용창출 규모
- 지역에서 육성된 벤처기업이 장래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내포

□ 사례

- 홋카이도 삿포로시
 - ‘삿포로 밸리’로 불리는 삿포로역 북쪽출구 부근 지역에는 기술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들이 다수 입점
 - 삿포로 밸리를 형성하는 핵심 기업 경영자의 대부분은 홋카이도 대학 재학 중에 「마이콘 연구회」 참여자 출신으로 이들은 졸업 후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오늘날의 삿포로 밸리 형성

4) 제3섹터형 개발

□ 기본 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제3섹터)을 통해, 공공서비스, 지역개발사업, 기업경영,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목표

□ 특징

- 일자리 창출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일자리 창출의 규모도 크지 않지만, 일부 유형(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은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고용 창출효과도 좋은 편
- 유형별로는 지역개발형(인프라 투자, 관광), 기업경영형(특산물, 정보서비스), 시설운영형(공공시설, 복지·문화시설 위탁 운영) 등으로 구분
- 다만, 과거에 리조트개발을 위해 제3섹터가 전국에 많이 설립되었지만, 대부분 많은 부채를 안고 도산 혹은 해산

5)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개발

□ 기본 방향

- 마을·지역공동체가 직접 설계·운영하는 일자리 모델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며, 고령자·여성·취약층 등의 지역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결합된 형태

□ 특징

- 대도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이용하여 소규모이긴 하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개
- 제3섹터형과 일부 분야가 중복되기도 하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일본에서 매우 유용한 지역 고용창출 전략으로 평가

□ 성공 사례

- 도쿠시마현 가미카츠 마을 ‘이로도리(彩り)¹⁸⁾’ 사업
 - 일본 요리에 장식되는 나뭇잎을 뒷산에서 채취하는 작업을 지역의 고령자에게 의뢰하여 대도시의 고급 음식점에 공급하는 이른바 ‘나뭇잎 비즈니스’ 전개
 - 지역자원과 고령자를 활용하여 고용창출에 성공한 예
- 고치현 우마지촌, 에히메현 우치코 마을, 군마현 가와바촌
 - 직판장이나 ‘거리의 역(道の駅)¹⁹⁾’을 활용함으로써 농업까지 포함한 형태로 지역에서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사업 전개
 -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거리의 역’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시설 자체가 고용의 창출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낙농업 등과 같은 지역산업 활성화 기여
- 그 외 해산물을 냉동시켜 대도시권에 판매하는 사업에 성공한 시마네현 아마초, 전통식품인 오야키를 제조·판매하는 나가노현 오가와무라 등 다양한 성공 사례 존재

18) 장식, 꾸밈의 의미

19) 거리역(道の駅)이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 농촌체험센터 + 특산물직판장을 합친 개념. 각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성이 통일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한 시설

4. 프랑스의 일자리 창출 사례: 스타트업 지원정책

1) 제도·프로그램 기반 지원(프렌치 테크(French Tech))

□ 추진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의 저성장 및 고실업 구조 고착화
- 타 국가 대비 스타트업 경쟁력 열세
- 파리와 지방 도시들과의 혁신 생태계 불균형 심화
- La French Tech로 불리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국제화를 위해 2013년부터 스타트업 육성 전략이자 국가 이미지 브랜드 추진
 -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기업총국의 산하기관인 ‘미션 프렌치 테크(Mission French Tech)’에 의해 운영되며, 민간, 공공, 지방정부, 해외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플랫폼 역할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2023년부터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성평등, 사회적 포용성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정 기준 포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French Tech Visa, French Tech Tremplin, French Tech Next40/120 등

□ 주요 정책 및 제도

- French Tech Visa
 - 해외의 유망한 기술 인재, 스타트업 창업자 및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 초고속 성장중인 스타트업에 고용되어 있는 우수한 해외인력들을 대상으로 4년 기한의 노동허가와 체류비자를 매우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
- French Tech Next40/120
 - 프랑스의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40개사(Next40), 초고속 성장 스타트업 120개사(Tech 120) 등 유망 스타트업들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제도
 -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해외 투자 유치 지원
 - 전문 멘토링과 투자 연계: 프랑스 및 글로벌 투자자와의 연결,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

○ French Tech Tremplin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금융·멘토링 지원,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제공
- 보조금 및 초기 투자금을 통해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도움
- 창업 교육, 네트워킹 이벤트 및 지속적 멘토링을 통해 교육 및 네트워킹 제공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창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포용성과 다양성 확대

○ Green20

- 기후 및 녹색 전환 관련 스타트업 20개사 선정을 통해 녹색 관련 혁신 기술개발 업체 지원
-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지원, 멘토링,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네트워킹 기회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공

2) 공간·생태계 기반 지원

- 프랑스의 창업(스타트업) 생태계는 La French Tech 전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존의 산업과 연구 집적지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혁신 클러스터 형성

(1) 창업 허브형

□ Station F(파리)

- 프랑스 기업가인 그자비에 니엘(Xavier Niel)이 사회기여의 일환으로 2017년에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French Tech 전략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
- 단일 건물 내에 스타트업, 대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교육기관 등이 집적되어 있으며, 창업부터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형 창업 인프라 구축
- 출범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아, Station F 내에는 Facebook(현 META), HEC, LVMH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상주하면서 스타트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정부 정책과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가 결합된 대표 사례로,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Lyon French Tech(리옹)

- 프랑스 리옹 인근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술·스타트업 혁신 클러스터이며,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French Tech Capital²⁰⁾' 중 하나
- 프랑스 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스타트업 생태계로 평가되며, 650여 개 회원사(스타트업,

20) 프랑스 정부의 혁신·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스케일업, 중소기업, 대기업, 투자자, 공공기관, 대학 등) 참여

○ 핵심 분야: 바이오·제약, 산업기계, IoT, 푸드테크

□ Nantes & Atlantic Tech(낭트)

○ 프랑스 정부로부터 'French Tech Capital'로 지정된 도시로, 스타트업, IT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사, 디지털 서비스업 등이 밀집한 선도적인 문화·디지털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 다양한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창업 지원 구조(La Cantine, Atlanpole 등)가 운영 중이며, Web2Day(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유럽의 대표 테크 페스티벌) 같은 대형 행사 주최

○ 핵심 분야: AI, 게임, 크리에이티브·콘텐츠, 그린테크, 해양기술

(2) 산업·연구 집적 기반형

□ 국가 전략 연구 및 과학기술 클러스터

○ Saclay Cluster(파리 남서부·사클레)

- 파리 남서부 사클레 고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클러스터이자 세계적 혁신 생태계
- 프랑스 전체 R&D의 약 15%가 집중되며, 파리 지역 전체 공공·민간 연구의 40% 담당
- 71,000개 기업과 42만8천개 일자리, 약 800여개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활동 중이고, 딥테크 창업 활성화
- 65,000명의 학생, 19개 대학·국립연구소, 9개 그랑제콜, 360개 연구실 등 방대한 고등 교육·연구 인프라 형성
- 핵심 분야: AI, 양자, 반도체, 바이오, 클린테크

○ Microelectronics Valley(그르노블)

- 세계적인 혁신도시 및 역동적 산업 클러스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기술 기업(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존재
- 이 지역은 프랑스 내 반도체 산업 일자리의 1/4(23,000명)을 차지하며, 3,000명 이상이 공공 연구실 소속
- 주요 연구 기관으로는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²¹⁾ 및 CEA-Leti(CEA의 기술혁신 부문인 CEA Tech 내 연구소) 소재
- 핵심 분야: 반도체, 나노기술, 양자, 배터리

21) 프랑스 정부 산하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관

□ 산업특화 글로벌 경쟁 클러스터

○ Toulouse Aerospace Valley(툴루즈)

-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로 에어버스(Airbus), 다소항공(Dassault Aviation), 에어프랑스 인더스트리즈(Air France Industries²²⁾) 등 8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참여
- 클러스터 내 약 120,000명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인력이 일하며, 8,500명이 연구개발 종사
- 핵심 분야: 항공우주, 드론, 위성, 모빌리티, 신소재

○ Sophia-Antipolis(니스 인근 남프랑스)

- 프랑스 남동부 니스 인근에 위치한 유럽 최초·최대의 첨단과학기술단지
- 2021년 기준 2,500개 기업, 38,000명 이상 종사자, 80개국 국적 인재 참여
- 아마테우스(Amadeus), 도요타(Toyota), 삼성, 위프로(Wipro), 에어프랑스(Air France), 르노(Renault), 웹표준화기구(W3C),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TSI), 유럽심장학회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 입주
- 핵심 분야: ICT, 사이버보안, 헬스테크, 환경기술

□ 디지털 전환·경쟁력 클러스터

○ Cap Digital(파리)

- 파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분야의 최대 혁신 클러스터
- 1,000여 개가 넘는 회원사, 대부분 중소기업, 대학, 대기업, 정책기관 등 입주
- 핵심분야: AI, 데이터/클라우드, 로봇틱스, IoT, 사이버보안 등

○ Lille & Euratechnologies(릴)

- 프랑스 북부 릴(Lille)을 중심으로 조성된 유럽 최대 규모의 테크노폴(Technopole)²³⁾ 중 하나
- 2009년 설립 이후, 300개 이상의 디지털 혁신기업과 4,500명 이상 종사자, 연간 500건 이상의 기술비즈니스 행사, 100여 개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50여 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등 활발한 성장 진행
- 핵심 분야: 리테일테크, 이커머스, 물류, 핀테크, ESG

22) 에어프랑스-KLM 그룹의 자회사로 항공기 정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23) 과학기술 기반 산업·연구·창업이 집적된 기술 혁신 도시, 기술 단지를 말함. 프랑스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실리콘 밸리처럼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모델

3) 금융지원 프로그램

□ 프랑스 정부

○ 첫 번째 공장(Première Usine)²⁴⁾

- 2022년에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첫 번째 산업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조기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23년까지 총 78개의 프로젝트에 3억 4천만 유로의 자금 집행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 스타트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산업벤처기금(Fonds National de Venture Industriel)을 비롯한 금융지원 제공

- 금융 보조금과 대출: 연구개발, 시장 진출, 생산설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제공
- 투자유치 지원: 민간투자 유치, 크라우드펀딩 연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시드펀드 및 벤처캐피탈 연결: 초기 투자단계 스타트업 대상 투자연계 지원

4) 종합적 성과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기업총국에 따르면, 8년 이상 된 스타트업의 수는 2016년 13,000개에서 2021년 16,600개로 늘어났고, 12년 이상 된 스타트업의 수는 18,800개에서 22,700개로 증가
- 스타트업의 총 고용 인원은 2021년 약 2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20% 가량의 고용창출
- 향후 금융,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아우르며 스타트업의 전 주기에 걸친 성장 지원 목표

24)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 2030 계획(France 2030 Plan)'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프랑스 2030 계획'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대규모 혁신 및 산업 재생 전략으로, 약 54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 주요 목표는 친환경 기술, 첨단 제조업,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경제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있음

5. 이탈리아의 일자리 창출 사례: 프로젯토네(Progettone, 'big project')²⁵⁾

□ 추진 배경

- 1980년대 초 제 2차 오일쇼크와 긴축적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서 경기침체 지속
- 이탈리아 북부의 트렌토 자치도(Trentino)는 1950~70년대 자급적 농업경제에서 산업화된 지역경제로 전환했지만, 1980년대 들어 신흥공업국과의 경쟁 심화 및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산업기반 약화
 - 일부 제조업체의 공장 폐쇄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빈번해졌음
 - 1985년 당시 텔레비전 제조업체인 그룬디히(Grundig) 공장에서 해고 사태는 지역 고용 위기의 상징적 사례
 - 고용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역경제의 위축 심화
- 이에 지역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프로젯토네(Progettone) 프로그램 개발

□ 고용지원 정책 내용

○ 프로그램 운영 내용

- 주로 숙련도가 낮은 중·고령 실업자들을 지역사회의 수요(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등)에 맞춰 배치하는 방식 운영
- 이러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과 연금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 운영방식(기본형과 계절형)

- 기본형은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실업자들을 배치하며, 특히 녹색 프로젝트, 개인돌봄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중점
- 계절형은 농업 및 관광 부문에서 일할 기회 제공

○ 실행주체

- 트렌토 자치주의 노동부서가 프로그램의 기획, 조정,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이외에도 여러 주체가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
- 자치주 고용서비스 사무소는 참가자 모집과 자격 검증 담당
-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제공 일자리 발굴(주요영역은 도로 보수, 공원 및 수자원 관리, 공원과 숲 청소, 기타 관련 활동 등)
- 자치주 전담 부서는 재정지원, 인력가용성, 기타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실행할 프로젝트를

25) OECD(2024.5) , “Progettone - job matching for low-skilled workers.” 참조

- 선정하고, 해당 일자리에 배치할 근로자 결정
- 지역 협동조합들이 참가자들을 고용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질적 고용주이자 사업 집행 기관 역할 수행
 - 이러한 구조는 자치주와 노동조합의 중재 아래 공식 협약 형태로 체결되며, 이는 근로비의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참여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표 3-2 | 프로젯토네(Progettone) 프로그램 일자리 유형별 자격요건

구분	기본형	계절형
일자리 유형	• 녹색프로젝트, 개인돌봄 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의 공공일자리 제공	• 농업 및 관광 부문 일자리 제공
자격 요건	• 실업상태: 사업상의 사유로 민간기업의 무기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정당한 이유로 자진 사직한 사람으로 실업급여 만료시점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연령: 남성은 해고 당시 최소 53세, 여성은 최소 49세 이상 • 거주요건: 해고 직전 트렌토 자치주에서 연속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생애 전체를 통틀어 1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으며, 자원시점에 최소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함 • 연금자격: 최소 15년 이상의 연금 납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법정 은퇴요건을 충족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	• 실업상태: 사업상의 사유로 민간기업의 무기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정당한 이유로 자진 사직한 사람 • 연령: 좌동 • 거주요건: 좌동 • 연금자격: 법정 은퇴요건을 충족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

〈자료〉 OECD(2024), Progettone - job matching for low-skilled workers 재구성.

□ 주요 성과

- 지난 25년 동안 동 프로그램에 8,000명 이상의 근로자 참여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의 80%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 중 85%는 정책의 목표대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근무 종료
- 직접적인 절감 효과에는 사회보장 급여 지출 감소, 추가 사회보험료 납부,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이 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증가(총 2,290만 유로)
 - 비슷한 공공사업을 민간 시장에 외주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동 프로그램은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시간당 순평균 비용은 5.3유로)
- 직접적인 절감 효과 외에, 지역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창출
 - 동 프로그램이 지역경제의 투자 수익률을 두 배로 늘리는 승수효과 확인

6. 시사점

□ 미국: 세제·재정 인센티브 기반 기업 투자 유도

- 캘리포니아주는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정책금융(대출)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확대
-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산업 기반 형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테크노밸리, 지식융합단지 등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 필요

□ 독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력양성

- Auto 50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중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채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이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노동 공급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 고양특례시는 산업단지 및 기업 입지 확대와 연계하여 기업 참여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 일본: 지역 기반 고용 유지 및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지역고용정책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고용서비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초점
-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 정책 추진
- 고양특례시는 서비스업 및 소상공인 중심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지원

- 프랑스 French Tech 정책은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지원,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
- 특히 창업 초기 지원뿐 아니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정책
- 고양특례시는 대표자 연령이 비교적 젊은 사업체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스케일업 중심 기업 성장 정책 추진 필요

□ 이탈리아: 고령층 대상 사회참여형 일자리 정책

-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및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적 역할 유지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
- 고양특례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 확대 필요
- 특히 전기 고령자(65~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노인 일자리 정책 설계 필요

□ 종합 시사점

- 공통적으로 기업 투자 유도, 기업 수요 기반 인력양성,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취약계층 고용 정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
- 특히 단기적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 중심 정책보다는 산업 기반 강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
-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첨단 산업 기반 확대를 통한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 산업 수요 기반 인력양성 정책,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고용 정책, 고령화 대응 세대별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 필요
- 또한 일자리 정책 수립 시 단기적인 재정 투입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접근보다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제2절 국내 일자리 창출 사례²⁶⁾

1. 인천

□ 추진 배경

- 산단 노후화 및 제조업의 생산 감소
-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탈
- 전문 R&D 및 생산품질 인력 부족

□ 고용지원 정책 내용

- 특화 산업: 항공산업의 경쟁력 위기 극복과 MRO 산업 생태계 조성
 - 취업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에어잡(AirJob) 센터 운영, 3D 프린팅 제조공정 지원, 청년 MRO 교육 진행
 - 항공산업(MRO) 민간투자 유치(항공기 개조사업, 아틀라스 중정비센터, 대한항공 엔진 정비 클러스터)
 - 고용노동부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관련 분야 일자리 모델 구체화
 - 산·학·연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미래 일자리 도약을 위한 사다리형 양성체계 마련
- 특화 산업: 저부가가치 일자리와 산단의 빈일자리(전통뿌리산업)
 -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스마트근린산단 조성,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뿌리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안정에 기여 등)
 -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및 역대 최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화하여 중소기업 집중 육성
- 미래산업
 - 바이오산업의 경우, 산학연 협력 기반의 랩허브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기업 유치 및 활성화
 - 데이터 산업의 경우, 블록체인 기업 성장 지원, SW·AI 융합 기술 혁신 기반 생태계 조성
 - 로봇 산업의 경우,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본격 추진과 로봇산업 혁신 성장 지원
 -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하고 운영을 통해 통합형 인재, 고졸 인재 양성

26) 고용노동부(2023),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 인용 및 참고

○ 청년 일자리

- 구직활동 인프라를 확대하고 근속 유지를 위한 단계별 취업 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1호 스타트업파크 개소,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 청년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확대 추진, 인천창업펀드 조성
-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종합화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 시니어 일자리 공공분야의 경우, 일자리 확대하고, 인천형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인건비 확보
- 시니어 일자리 민간분야의 경우, GS 리테일과 협력하거나 노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민간협력 사업 연계 협력 강화
- 여성 일자리의 경우, 지역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체계 재설계, 직업훈련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해 단계별 지원
- 자활·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공공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지역자활 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연계 강화

표 3-3 | 인천 2022년 인천형 032 일자리 추진전략

구분	개선 포인트	일자리 대책
특화 산업 (뿌리 산업)	항공산업의 경쟁력 위기 극복과 MRO 산업 생태계 조성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 사다리형 인력양성 산·학·연 협의체
	저부가가치 일자리와 산단의 빈일자리	• 산단혁신 고부가가치 일자리 전환 • 뿌리 기업 성장 촉진
미래산업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지역사회 확산 필요	• 민관병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 산학연계 R&D 전문인력 양성
청년	청년인구 감소 해결과 개별사업중심 일자리 탈피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 일자리·주거·문화·인프라 통합정책
고용취약계층	도시 소득격차 심화 및 노인가구 빈곤 증가	• 민간협력 일자리 확대 • 수요맞춤형 설계

〈자료〉 고용노동부(2023),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

□ 주요 성과

- 2022년 최종 일자리 실적 148,962개로 목표 일자리 수인 137,394개를 넘는 108% 초과 달성
- 인천시 스마트 공장보급 1,607개사로 특광역시 1위
- 생산 및 전문 R&D 인력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일자리 확대
- 국내 1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업 증가율 특광역시 중 1위, 청년 고용률 광역시 중 1위 달성
- 노인일자리 ‘일자리 대상’ 4년 연속 수상하고 여성고용률 개선의 경우 광역시 중 1위로 취약계층 고용지표 개선

2. 서울시 구로구

□ 추진 배경

-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청년인구 감소
-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으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구로구 G밸리의 경우 영세기업이 다수며 4차산업 직종 밀집

□ 고용지원 정책 내용

- 구로구 지역산업 특성과 현안을 고려하고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구로형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 일자리 담당부서와 사업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
-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산업계와 일자리 네트워크 통해 구로구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 구로구와 동양미래대와 컨소시엄을 맺어 지역 주력산업 중심의 사업 및 직업 교육 추진
- 청년도전지원사업
 - 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발굴 및 상담과 취업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취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 5060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 아동 및 금융권 중장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및 퇴직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진행 후 취업 매칭 프로그램 수행
- G밸리 4차산업 맞춤형 인재 집중 양성
 - 과기정통부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을 이용하여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AI테크노융합대학원 등록금 지원, 연구원 및 재직자 대상 지능화 혁신 연구 지원, 취준생과 재직자 대상 단기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진행
- G밸리 고용환경 개선 사업
 - 기업컨설팅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복지플러스 사업으로 중소기업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표 3-4 | 서울 구로구 일자리 추진전략

구분	개선 포인트	주요사업
직접일자리	취약계층	- 안심일자리 - 자활근로사업 - 장애인 일반형/복지 일자리 사업
	청년	- 구로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단 사업 -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경력단절(보유)여성	안심 스카우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경제활동 참여 사업 진행
	신중년	-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사업 - 신중년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어르신	어르신 일자리 사업
	코로나 19 대응	코로나 대응 인력 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	청년	- 구로 청년이룸 미래인재 양성사업 -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 청년중소기업 체험사업 - 청년 진로지원 토레 멘토링사업 - AI-X 제품 및 서비스 개발교육 - ADs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과정 - 구로구-서울대 AI데이터사이언스 아카데미 - 청년도전지원사업
	장애인	장애인 경영지원 매니저 양성사업
	여성	-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 보건복지분야 신규인력 일자리창출사업 - 전산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 시니어 헬스케어 역량강화교육
	중장년	- 마을버스 기사 양성사업 - 재취업 토탈 프로젝트 -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매칭사업
고용서비스 분야		- 구로구 일자리센터 운영 - 국민취업제도 연계 - 구로구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 코스트코 고척점 구로구 채용박람회 개최 - 의료기기 채용박람회 개최 - 스마트택시 채용설명회 개최 - 소규모 맞춤형 매칭데이 개최

고용장려금 분야	•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사업 • G밸리형 구로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 G밸리 의료·IT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민간분야	• 민간 및 관급공사장 근로자 취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 분야	• KOTRA 해외지사회사업 지원 • G밸리 수출상담회 • G밸리 고용환경개선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 중소기업 복지플러스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창업분야	• 구로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 직주혼합형 청년 도전숙 운영 • 구로구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운영 • 온라인마켓 창업자 양성과정

〈자료〉 고용노동부(2023),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

□ 주요 성과

- 2022년 최종 일자리 실적 16,868개로 목표 일자리 수인 14,000개를 넘어 120.5% 초과 달성
-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경우 2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임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통해 208개의 기업 상담, 9개 기업 창업보육, 310명 직업 훈련 진행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195명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중 31명 취업 연계 성공
- 아동, 금융권 중장년 전문 인력 58명 취업, 퇴직 중장년 25명 취업 프로그램 지원
- 구로 중소기업 재직자 8명 등록금 지원, AI-X 제품 및 서비스 개발교육 34명 수료
- 구로 청년이룸 프로그램을 통해 289명 취업
- 중소기업 복지플러스사업으로 237명 워라밸 지원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3. 대전광역시

□ 추진 배경

- 다양한 연구개발 인프라, 인적자원 등 역량 평가는 우수하나 기업 성장과 일자리 연계 분야 실적 저조
- 지역 주력산업 분야인 첨단기술의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
- 지역산업과 시장과의 연계 미흡, 청년 인재 확보 등 지역 산업 생태계 성장 한계

□ 고용지원 정책 내용

- R&D 특화형 일자리창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여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과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방향성 및 지원체계 구축
- 대덕특구 연계 지역 주력산업분야(첨단과학기술) 신기술 및 신사업 지원
-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지역 주력산업 중심의 채용연계 지원
-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세미나 운영
- 지역 주력산업분야 기술 성숙도 제고
- 기술융합 지원 및 기업 간 연계 지원
- 타 사업 연계를 통한 전 주기적 기업관리

표 3-5 | 대전 첨단기술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구분	지원 내용	세부내용
연구인력지원	정부출연(연) 재직연구인력	• 기술개발, 사업화, 업종전환 및 프로젝트 발굴 등 고경력·과학기술 인을 활용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자문/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인력 기술/연구/사업화 역량 강화
시설·장비 활용 및 사업화 지원	시설·장비 활용 지원	• 기술·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활용 및 대여 등 • 정부출연(연) 보유 시설·장비, 대전소재 시설·장비 지원 • 장비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정부출연(연) 연구인력 동시 지원
	시작품·시제품 제작 지원	• 금형설계/제작, SW개발 및 3D 프린팅 샘플제작 지원 • 제작 및 개발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정부출연(연) 연구인력 동시 지원
	기업경영·시장개척 지원	• 각종 특허, 인증 및 인허가 지원 • 시장동향 분석 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 관련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정부출연(연) 연구인력 동시 지원
기업 성장	우수기업 연속사업 지원	• 전년도 사업성과(일자리 창출, 매출향상 등) 우수기업 대상

고도화 지원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연속사업 지원
		• 지원기업 중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매칭 및 협력관계 구축 지원
네트워크 연계	대덕특구 연계	• 기업간 협업 지원 및 전시회, 박람회 등 판로개척지원 • 출연연 기술 이전 설명회 및 기술 세미나 등 지원
	R&D 특화형 분과	• 지역내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기업지원방안 논의
	타 부처 사업 연계	• 기술적 애로사항에 추가로 경영관련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통한 통합기업지원 관리체계 마련

〈자료〉 고용노동부(2023),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

□ 주요 성과

- 종합적으로 신규고용 82명으로 목표(51명) 대비 161% 달성
- 지원기업 총 29개사로 목표(28개사) 대비 104% 달성
- 참여 정부출연(연) 6개 기관, 목표(6개 기관)대비 100% 달성
-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활용 기업지원체계 구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시사점

□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 필요

- 인천은 항공(MRO),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대전은 대덕특구 기반 첨단기술 산업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
- 고양특례시도 방송영상·콘텐츠, 전시·마이스 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

□ 산·학·연 협력 기반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인천과 대전은 산·학·연 협의체 및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R&D 인력양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추진
- 고양특례시 역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취업연계 중심의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 구로구는 채용박람회,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 고양특례시도 직업훈련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취업 매칭, 채용박람회, 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 취업연계 중심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 청년 및 고용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필요

- 인천은 청년 창업지원과 생애주기별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구로구는 청년·신중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 고양특례시도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

□ 일자리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세 지역 모두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정책 컨설팅, 성과관리 체계 등 정책 실행 기반을 구축
- 고양특례시도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제4장 고양특례시 일자리 여건과 빅데이터 분석

제1절 고양특례시 인구구조 및 산업현황

제2절 고양특례시 일자리 현황

제3절 뉴스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트렌드 분석

제4절 고양특례시 추진 사업과 일자리 연계 필요성

제1절 고양특례시 인구구조 및 산업현황

1. 인구구조

1) 인구 추이

- 고양특례시 인구는 2014년 1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2020년 109만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
- 내국인 인구 역시 107.9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최근 감소세로 전환
- 외국인 인구는 약 11,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약 14,000명 수준까지 증가

표 4-1 | 고양특례시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전체인구	내국인	외국인
2014	1,018,013	1,006,154	11,859
2015	1,039,839	1,027,546	12,293
2016	1,051,970	1,039,684	12,286
2017	1,054,236	1,041,983	12,253
2018	1,056,853	1,044,189	12,664
2019	1,078,859	1,066,351	12,508
2020	1,090,738	1,079,216	11,522
2021	1,090,339	1,079,353	10,986
2022	1,088,153	1,076,535	11,618
2023	1,087,607	1,074,907	12,700
2024	1,084,020	1,070,120	13,900
2025	1,060,081	1,045,693	14,388

〈자료〉 경기도(2026), 주민등록인구통계.

2) 내국인 성별 비중

- 전체적으로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조 지속
- 2014년 남성 49.3%, 여성 50.7%에서 2025년 남성 48.7%, 여성 51.3%로 변화하며 남성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여성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성별 비중 변화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여성 고령인구 증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가능

표 4-2 | 고양특례시 내국인 성별 비중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14	49.3	50.7	100.0
2015	49.2	50.8	100.0
2016	49.1	50.9	100.0
2017	49.1	50.9	100.0
2018	49.1	50.9	100.0
2019	49.0	51.0	100.0
2020	49.0	51.0	100.0
2021	48.9	51.1	100.0
2022	48.8	51.2	100.0
2023	48.8	51.2	100.0
2024	48.7	51.3	100.0
2025	48.7	51.3	100.0

〈자료〉 경기도(2026), 주민등록인구통계.

3) 고령화율(고령 인구 비중)

- 고양특례시의 고령화율은 2014년 10.3%에서 2024년 1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령화 진행 중
 - 2021년 고령화율이 14.3%를 넘으면서 고령사회²⁷⁾ 진입
- 고령 인구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남성 비중은 2014년 40.9%에서 2024년 44.3%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4-3 | 고양특례시 고령화율 및 성비 비중

(단위: %)

구분	고령화율		
		고령 남성	고령 여성
2014	10.3	40.9	59.1
2015	10.7	40.9	59.1
2016	11.0	41.1	58.9
2017	11.5	41.4	58.6
2018	12.1	41.8	58.2
2019	12.7	42.3	57.7
2020	13.5	42.6	57.4
2021	14.3	43.0	57.0
2022	15.1	43.4	56.6
2023	16.1	43.9	56.1
2024	17.2	44.3	55.7

주: 고령화율이란 고양특례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
〈자료〉 경기도(2026), 주민등록인구통계.

27) 국제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단계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함(United Nations, 2002)

4) 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구조 전망 및 비교

□ 고양특례시 2030년 기본 인구 구조 전망

- 2022년과 2030년 고양특례시 인구 구조를 비교했을 때 유소년 인구는 3.4만 명, 생산연령인구는 3.2만 명 감소 전망
- 반면, 고령인구는 9.3만 명 증가 예상

표 4-4 | 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 구조 전망 1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30년	증감
유소년인구(0~14세)	123,025	88,570	-34,455
생산연령인구(15~64세)	764,995	732,303	-32,692
고령인구(65세 이상)	158,238	251,766	+93,528
15세 미만 비중	11.8	8.3	-3.5
15~64세 비중	73.1	68.3	-4.8

〈자료〉 경기도(2024),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22~2042년) 보고서에서 재가공.

□ 고양특례시 세부 연령에 따른 2030년 인구 구조 전망

- 고령인구의 경우 전기 고령자(65세~74세)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 전기 고령자(65세~74세)의 경우, 약 6.4만 명,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경우, 약 3.0만 명이 증가 예상
- 고령층을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일자리 사업의 세분화 필요
 - 60대와 70대가 요구하는 혹은 적합한 일자리 차이 존재
- 그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감소세 지속
 - 25-29세의 경우 약 2.0만 명, 40-54세의 경우 3.6만 명 감소 예상
- 연령층에 따른 인구 구조 특징이 달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이원화를 반영한 일자리 개발과 창출 중요
 - 생산가능연령의 일자리 전략과 65세 이상 일자리 전략의 이원화를 통해 일자리 경쟁이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필요

표 4-5 | 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 구조 전망 2

(단위: 명)

구분	2022년	2030년	증감
계	1,046,258	1,072,639	+26,381
0 - 4세	30,839	24,965	-5,874
5 - 9세	43,771	26,322	-17,449
10 - 14세	48,415	37,283	-11,132
15 - 19세	46,097	46,839	+742
20 - 24세	58,630	47,552	-11,078
25 - 29세	73,664	53,560	-20,104
30 - 34세	69,407	73,023	+3,616
35 - 39세	70,597	83,124	+12,527
40 - 44세	82,168	73,287	-8,881
45 - 49세	88,669	81,966	-6,703
50 - 54세	102,999	82,337	-20,662
55 - 59세	90,960	97,425	+6,465
60 - 64세	81,804	93,190	+11,386
65 - 69세	53,414	84,283	+30,869
70 - 74세	33,708	66,620	+32,912
75 - 79세	28,333	39,771	+11,438
80 - 84세	23,863	28,382	+4,519
85 - 89세	13,276	19,985	+6,709
90 - 94세	4,592	9,908	+5,316
95세 이상	1,052	2,817	+1,765

〈자료〉 경기도(2024),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22~2042년) 보고서에서 재가공.

□ 타 도시와 고양특례시 인구 구조 비교(2030년)

○ 타 도시와 2030년 인구 구조를 비교했을 때, 고양특례시는 여성 비율,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가 높은 특징

- 성비의 경우, 수원특례시는 101.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에 비해 고양특례시는 6.6%p 낮은 수치인 95.2% 기록
- 노년부양비의 경우, 수원특례시가 27.0%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고양특례시는 34.4%로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노령화지수의 경우,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가 232.0%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고양특례시는 284.3%로 아주 높은 수치 기록

표 4-6 | 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 구조 전망 3

구분	수원특례시	성남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총인구(명)	1,230,856	892,073	1,105,326	1,072,639
남자(명)	621,024	442,342	548,885	523,078
여자(명)	609,832	449,731	556,441	549,561
성비(%) ¹⁾	101.8	98.4	98.6	95.2
노년부양비(%) ²⁾	27.0	33.3	30.7	34.4
노령화지수(%) ³⁾	232.0	275.4	232.0	284.3
중위연령(세)	45.9	47.9	47.8	49.3
중위연령(세)-남자	44.3	46.6	46.6	48.2
중위연령(세)-여자	47.4	49.1	49.0	50.5

〈자료〉 경기도(2024),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22~2042년) 보고서에서 재가공.

주: 1) 여성 100명당 남성 수

2)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3) 유소년인구(0~1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2. 고양특례시 산업현황

□ 도매·소매업·운수·창고업·숙박·음식점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 고양특례시는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 해당 3대 업종 사업체 수는 59,321개로 전체의 51.1%, 종사자 수는 142,672명으로 36.2% 차지

□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와 낮은 평균 고용 규모

○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명 수준이며, 3대 업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4명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

- 고양특례시 산업 구조가 소규모 자영업 및 영세 사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

- 소수 업종에 사업체와 고용이 집중된 구조로, 산업 다변화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 내포

표 4-7 | 고양특례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23년)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별 평균 종사자 수
전체	116,028	394,087	3
농업, 임업 및 어업	60	278	5
광업	1	-	-
제조업	7,330	31,191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8	885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0	2,337	11
건설업	8,178	29,245	4
도매 및 소매업	35,636	76,989	2
운수 및 창고업	11,386	27,714	2
숙박 및 음식점업	12,299	37,969	3
정보통신업	4,029	11,317	3
금융 및 보험업	922	8,082	9
부동산업	5,570	13,634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925	15,858	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976	19,805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6	8,315	72
교육 서비스업	6,576	32,438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67	50,336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243	9,685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276	18,007	2

〈자료〉 경기통계(2025), 경기도사업체조사.

□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주도 경제 전환 필요

○ 경기도 내에서 운영 점포 수는 경기도 내 2위로 많지만, 평균 영업기간과 평당 종업원 수는 경기도 평균 이하 수준

- 운영 점포 수: 49,809개 → 도내 2위
- 종사자 수: 15,505명 → 도내 3위
- 평균 영업 기간: 5.2개월 → 도내 22위
- 평당 매출액: 4.5백만 원 → 도내 13위
- 평당 종업원 수: 0.034명 → 도내 19위

표 4-8 | 고양특례시 영세사업자 특징(2021년)

시군별	운영점포수 (개)	종사자수 (명)	평균영업기간 (개월)	면적당 매출액 (백만원/3.3㎡)	면적당 종업원수 (명/3.3㎡)
경기	609,455	186,881	5.4	4	0.035
수원특례시	52,966	17,106	5.6	4.4	0.038
고양특례시	49,809	15,505	5.2	4.5	0.034
성남시	43,120	16,021	5.9	4.7	0.037
용인특례시	43,006	13,576	4.9	5.3	0.047
부천시	38,177	11,086	6	4.9	0.047
화성특례시	37,484	12,173	4.2	4.1	0.041
남양주시	32,207	9,022	4.9	5.6	0.047
안산시	30,082	8,912	5.7	3.2	0.035
평택시	26,757	7,458	5.6	2.6	0.02
안양시	25,542	8,406	6.3	4.6	0.031
시흥시	23,674	7,006	4.8	5	0.035
김포시	23,098	6,892	4.2	5.6	0.044
파주시	21,589	6,272	5.1	4.1	0.031
의정부시	21,445	5,912	5.5	3.6	0.02
광주시	16,270	4,943	5	5.3	0.036
하남시	14,102	4,299	4	6.1	0.051
광명시	12,261	3,943	6.1	2.8	0.049
양주시	10,641	3,026	5.2	3.6	0.038
군포시	10,461	3,563	5.9	5	0.042
이천시	10,240	3,258	6.5	3.9	0.034
구리시	9,986	3,049	5.7	3.7	0.04
오산시	9,371	2,786	5.4	4.7	0.031
안성시	8,988	2,372	6.6	3	0.025
포천시	8,364	2,275	7.4	2.2	0.02
양평군	5,831	1,357	6.5	1.9	0.03

의왕시	5,653	1,824	5.8	2.5	0.047
여주시	5,461	1,590	7.1	1.7	0.025
동두천시	4,305	1,022	7.3	3.3	0.026
가평군	3,990	991	7.4	0.9	0.022
과천시	2,460	811	7.6	6.8	0.042
연천군	2,115	425	9	1.8	0.035

〈자료〉 국가데이터처(2023), 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 1~29인 소규모 사업체에 사업체와 종사자가 집중된 고용 구조

- 고양특례시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을 보면, 1~29인 사업체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집중
- 해당 비중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사업체 의존도
- 이는 지역 고용의 양적 유지는 가능하나, 질적 고용 확대에는 한계 존재 시사

표 4-9 | 고양특례시 사업체 규모별 수 및 총 종사자 수(2023년)

구분		사업체 수(개)	총 종사자수(명)	사업체 수 비중(%)	총 종사자 수 비중(%)
경기도	전 규모	556,705	4,755,641	100.00	100.00
	1~4인	336,263	828,641	60.40	17.42
	5~9인	131,251	833,342	23.58	17.52
	10~29인	67,771	1,045,616	12.17	21.99
	30~49인	11,187	420,506	2.01	8.84
	50~99인	6,490	440,475	1.17	9.26
	100~199인	2,347	317,754	0.42	6.68
	200~299인	641	154,251	0.12	3.24
	300~499인	392	148,433	0.07	3.12
	500~999인	246	166,604	0.04	3.50
	1000인이상	117	400,019	0.02	8.41
고양특례시	전 규모	38,765	286,862	100.00	100.00
	1~4인	23,971	59,106	61.84	20.60
	5~9인	9,287	58,706	23.96	20.46
	10~29인	4,348	65,805	11.22	22.94
	30~49인	610	22,726	1.57	7.92
	50~99인	358	23,650	0.92	8.24
	100~199인	113	15,290	0.29	5.33
	200~299인	38	9,152	0.10	3.19
	300~499인	20	7,216	0.05	2.52
	500~999인	11	7,105	0.03	2.48
	1000인이상	9	18,106	0.02	6.31

〈자료〉 경기통계(2025), 경기도사업체조사.

□ 여성 종사자 비중이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용 구조 특성

- 고양특례시 남성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이 92.87%로 경기도 전체 평균(70.1%) 대비 22.77%p 높은 수준
- 특히 100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여성 종사자 비율이 경기도 대비 최대 120.6% 수준으로, 격차가 48.56%p까지 확대
- 이는 고양특례시 고용 구조가 여성 중심의 서비스·생활밀착형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

표 4-10 | 고양특례시 사업체 규모별 총 종사자 수(2023년)

(단위: 명, %)

구분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남성 대비 여성 비율
경기도	전 규모	남자	2,667,484	2,767,336	2,795,834	70.10
		여자	1,812,279	1,905,283	1,959,807	
	1~4인	남자	455,455	502,301	465,234	78.11
		여자	354,429	368,718	363,407	
	5~9인	남자	428,355	425,228	447,018	86.42
		여자	352,528	363,885	386,324	
	10~29인	남자	567,084	586,751	601,372	73.87
		여자	399,732	431,073	444,244	
	30~49인	남자	230,683	235,691	247,000	70.25
		여자	152,058	164,228	173,506	
	50~99인	남자	254,041	254,569	256,035	72.04
		여자	167,268	176,485	184,440	
	100~199인	남자	191,020	202,034	200,478	58.50
		여자	111,397	117,942	117,276	
	200~299인	남자	97,701	97,754	96,187	60.37
		여자	52,053	53,484	58,064	
	300~499인	남자	93,552	100,074	95,852	54.86
		여자	50,171	53,214	52,581	
	500~999인	남자	99,737	97,207	112,066	48.67
		여자	46,003	51,421	54,538	
	1000인이상	남자	249,856	265,727	274,592	45.68
		여자	126,640	124,833	125,427	

고양 특례시	전 규모	남자	140,348	144,666	148,730	92.87
		여자	127,011	132,180	138,132	
	1~4인	남자	32,078	34,392	32,456	82.11
		여자	26,889	27,131	26,650	
	5~9인	남자	28,616	28,218	29,929	96.15
		여자	26,380	26,895	28,777	
	10~29인	남자	31,688	32,165	33,019	99.29
		여자	30,321	32,006	32,786	
	30~49인	남자	10,180	10,433	10,941	107.71
		여자	10,397	11,363	11,785	
	50~99인	남자	11,512	11,239	10,721	120.60
		여자	11,999	12,640	12,929	
	100~199인	남자	8,695	9,368	9,396	62.73
		여자	5,467	5,343	5,894	
	200~299인	남자	5,219	6,005	5,850	56.44
		여자	2,602	2,897	3,302	
	300~499인	남자	2,474	3,466	4,096	76.17
		여자	2,187	2,608	3,120	
	500~999인	남자	2,818	3,459	4,972	42.90
		여자	1,508	2,099	2,133	
	1000인이상	남자	7,068	5,921	7,350	146.34
		여자	9,261	9,198	10,756	

〈자료〉 경기통계(2025), 경기도사업체조사.

□ 대표자 연령 구조에서 50대 미만 비중이 높은 역동적 사업체 구성

- 고양특례시 연령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대표자 연령이 50대 미만(0~40대)인 사업체 비율은 경기도 내 최고 수준
 - 그 중 건설업(80.2%), 도매 및 소매업(86.4%), 숙박 및 음식점업(83.5%)의 경우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치
- 성남시, 과천시, 부천시를 상회하며, 경기도 평균 대비 1.5%p 높은 수치
- 이는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나, 영세성과 결합될 경우 지속성 리스크 존재

표 4-11 | 경기도 내 도시별 대표자연령대별 사업체 수(2023년)

(단위: %)

구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과천시	부천시
합계	50대 이하	79.5	81.0	80.4	78.8	72.9	76.4
	60대 이상	20.5	19.0	19.6	21.2	27.1	23.6
농업, 임업 및 어업	50대 이하	67.5	58.3	86.4	78.6	70.0	72.7
	60대 이상	32.5	41.7	13.6	21.4	30.0	27.3
광업	50대 이하	62.3	0.0	50.0	50.0	-	-
	60대 이상	37.7	100.0	50.0	50.0	-	-
제조업	50대 이하	73.0	73.6	77.5	73.9	70.8	70.7
	60대 이상	27.0	26.4	22.5	26.1	29.2	29.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0대 이하	56.4	66.7	67.0	71.6	75.0	77.3
	60대 이상	43.6	33.3	33.0	28.4	25.0	2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0대 이하	73.6	75.7	66.9	65.5	68.8	72.1
	60대 이상	26.4	24.3	33.1	34.5	31.3	27.9
건설업	50대 이하	79.6	80.2	79.9	76.1	69.9	78.2
	60대 이상	20.4	19.8	20.1	23.9	30.1	21.8
도매 및 소매업	50대 이하	84.8	86.4	85.2	82.6	72.6	82.9
	60대 이상	15.2	13.6	14.8	17.4	27.4	17.1
운수 및 창고업	50대 이하	67.4	64.3	59.6	60.5	62.4	58.0
	60대 이상	32.6	35.7	40.4	39.5	37.6	42.0
숙박 및 음식점업	50대 이하	81.6	83.5	84.1	82.0	79.0	80.5
	60대 이상	18.4	16.5	15.9	18.0	21.0	19.5

정보통신업	50대 이하	92.4	92.1	93.2	93.2	86.3	94.9
	60대 이상	7.6	7.9	6.8	6.8	13.7	5.1
금융 및 보험업	50대 이하	72.8	72.7	70.3	76.1	79.2	72.1
	60대 이상	27.2	27.3	29.7	23.9	20.8	27.9
부동산업	50대 이하	69.2	63.7	70.9	63.5	64.3	62.1
	60대 이상	30.8	36.3	29.1	36.5	35.7	37.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대 이하	84.9	86.8	83.0	82.9	77.5	83.2
	60대 이상	15.1	13.2	17.0	17.1	22.5	16.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대 이하	84.7	84.7	83.0	82.5	81.6	84.3
	60대 이상	15.3	15.3	17.0	17.5	18.4	1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0대 이하	91.7	93.1	91.7	90.6	85.7	95.5
	60대 이상	8.3	6.9	8.3	9.4	14.3	4.5
교육 서비스업	50대 이하	93.1	92.7	93.1	92.2	90.8	91.6
	60대 이상	6.9	7.3	6.9	7.8	9.2	8.4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50대 이하	80.3	79.5	82.2	79.6	69.4	77.8
	60대 이상	19.7	20.5	17.8	20.4	30.6	2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대 이하	82.4	84.3	82.2	82.9	59.3	81.6
	60대 이상	17.6	15.7	17.8	17.1	40.7	18.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대 이하	76.6	76.8	77.6	74.8	69.7	73.2
	60대 이상	23.4	23.2	22.4	25.2	30.3	26.8

〈자료〉 경기통계(2025), 경기도사업체조사.

3. 시사점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 전략 필요

- 고양특례시는 전체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전망
- 특히 2030년까지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지역 노동력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 확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고령 인력 활용 등 노동력 확보 전략 마련 필요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

- 고양특례시는 2021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
- 특히 전기 고령자(65~74세)의 증가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 공공형 노인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연계형·경력 활용형 일자리 확대 필요

□ 연령대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이원화된 일자리 전략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예상
- 청년·중장년 중심의 생산연령 일자리 정책과 고령층 일자리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 필요
- 이를 통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 필요

□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산업 다변화 필요

- 고양특례시는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형성
- 특정 업종에 사업체와 고용이 집중된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첨단산업, 콘텐츠 산업 등 성장산업 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다변화 전략 필요

□ 소규모 자영업 중심 고용 구조 개선 필요

- 고양특례시는 평균 종사자 수가 약 3명 수준으로 영세 사업체 중심 산업구조
- 소규모 사업체 중심 고용 구조는 고용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취약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기업 성장 지원,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 확충 필요

□ 여성 중심 고용 구조를 고려한 여성 일자리 정책 확대 필요

- 고양특례시는 여성 종사자 비중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특징
- 이는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난 결과
- 이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돌봄·유연근무 지원, 여성 창업 지원 등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필요

제2절 고양특례시 일자리 현황

1. 일자리 현황

□ 낮은 구인배율로 나타나는 구조적 일자리 부족 문제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구인배율은 0.35로, 경기도 전체(0.52) 및 서울시 전체(0.45)보다 낮은 수준
- 구 단위로 보면 일산동구는 0.52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나, 일산서구(0.29)와 덕양구(0.28)와는 큰 격차 존재
- 이는 지역 내부에서도 일자리 접근성과 고용 기회가 불균등하게 분포 의미 내포

표 4-12 | 고양특례시 자치구별 구인배율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구인인원 (명)	구직건수 (건)	구인배율 (배)	구인인원 (명)	구직건수 (건)	구인배율 (배)	구인인원 (명)	구직건수 (건)	구인배율 (배)
전국	3,317,302	4,684,080	0.71	2,904,899	4,776,288	0.61	2,246,210	4,525,456	0.5
서울특별시 총계	455,497	731,003	0.62	425,194	753,758	0.56	340,682	750,254	0.45
경기도 총계	950,344	1,225,672	0.78	799,817	1,277,672	0.63	630,577	1,214,832	0.52
고양특례시 총계	46,771	99,989	0.47	48,409	88,909	0.54	33,634	96,378	0.35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15,861	46,081	0.34	3,051	4,865	0.63	12,709	44,723	0.28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1,422	26,798	0.8	6,973	17,642	0.4	13,534	25,793	0.52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9,488	27,110	0.35	38,385	66,402	0.58	7,391	25,862	0.29
경기도 수원특례시 장안구	9,729	24,708	0.39	8,837	26,071	0.34	6,392	24,787	0.26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13,068	35,337	0.37	12,161	36,690	0.33	10,349	34,886	0.3
경기도 수원특례시 팔달구	10,259	17,983	0.57	8,581	19,752	0.43	7,332	18,548	0.4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14,361	26,431	0.54	12,270	27,594	0.44	10,192	26,385	0.3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7,612	21,641	0.35	7,206	21,426	0.34	5,834	21,150	0.2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2,974	20,632	0.63	10,561	21,152	0.5	7,716	19,736	0.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2,907	27,919	0.82	21,144	27,717	0.76	18,210	26,252	0.69

주: 구인배율(배) = 구인인원 ÷ 구직건수

〈자료〉 국가데이터처(2025), 경기도사업체조사보고서

□ 경기도 시·군 비교에서 나타나는 ‘양적 규모 대비 질적 한계’

- 고양특례시는 운영 점포 수 49,809개로 경기도 내 2위를 차지할 만큼 사업체 규모가 큰 편
- 반면 평균 영업기간은 5.2개월로 31개 도내 22위, 평당 종업원 수는 0.034명으로 19위
- 이는 사업체 수는 많으나, 지속성·고용 밀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 시사

표 4-13 | 고양특례시 영세사업자 현황(2021년)

시군별	운영점포수(개)	종사자 수(명)	평균영업기간 (개월)	면적당 매출액 (백만원/3.3㎡)	면적당 종업원수 (명/3.3㎡)
경기도	609,455	186,881	5.4	4	0.035
수원특례시	52,966	17,106	5.6	4.4	0.038
고양특례시	49,809	15,505	5.2	4.5	0.034
성남시	43,120	16,021	5.9	4.7	0.037
용인특례시	43,006	13,576	4.9	5.3	0.047
부천시	38,177	11,086	6	4.9	0.047
화성특례시	37,484	12,173	4.2	4.1	0.041
남양주시	32,207	9,022	4.9	5.6	0.047
안산시	30,082	8,912	5.7	3.2	0.035
평택시	26,757	7,458	5.6	2.6	0.02
안양시	25,542	8,406	6.3	4.6	0.031
시흥시	23,674	7,006	4.8	5	0.035
김포시	23,098	6,892	4.2	5.6	0.044
파주시	21,589	6,272	5.1	4.1	0.031
의정부시	21,445	5,912	5.5	3.6	0.02
광주시	16,270	4,943	5	5.3	0.036
하남시	14,102	4,299	4	6.1	0.051
광명시	12,261	3,943	6.1	2.8	0.049
양주시	10,641	3,026	5.2	3.6	0.038
군포시	10,461	3,563	5.9	5	0.042
이천시	10,240	3,258	6.5	3.9	0.034
구리시	9,986	3,049	5.7	3.7	0.04
오산시	9,371	2,786	5.4	4.7	0.031
안성시	8,988	2,372	6.6	3	0.025
포천시	8,364	2,275	7.4	2.2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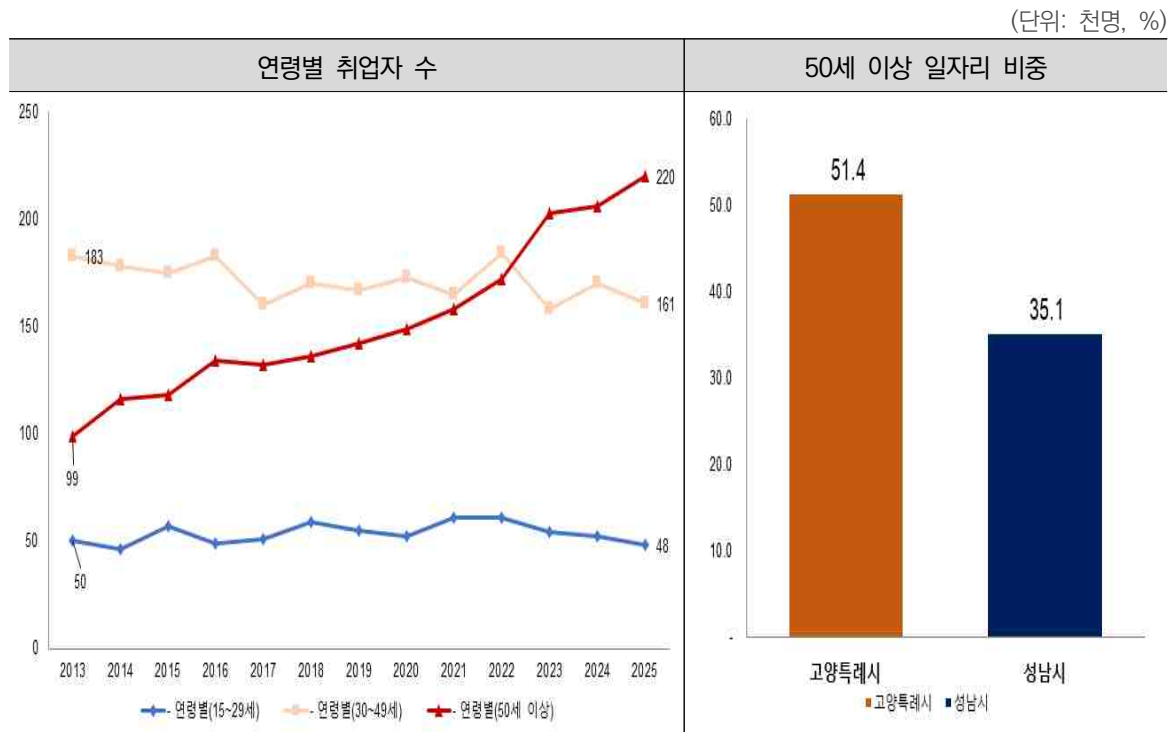
양평군	5,831	1,357	6.5	1.9	0.03
의왕시	5,653	1,824	5.8	2.5	0.047
여주시	5,461	1,590	7.1	1.7	0.025
동두천시	4,305	1,022	7.3	3.3	0.026
가평군	3,990	991	7.4	0.9	0.022
과천시	2,460	811	7.6	6.8	0.042
연천군	2,115	425	9	1.8	0.035

〈자료〉 국가데이터처(2021), 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 50세 이상 일자리 수 증가

-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 노인일자지만 꾸준하게 증가
- 또한 성남과 50세 이상 일자리 비중을 비교했을 때 고양특례시의 비중이 51.4%로 성남시에 비해 16.3%p 높은 수치

그림 4-1 | 고양특례시 취업자 수 및 비중



〈자료〉 경기도(2025), 경기도기본통계 데이터 재가공.

2. 시사점

- 지역 내 구조적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필요
 - 고양특례시 구인배율은 0.35로 경기도(0.52)와 서울시(0.45)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내 일자리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
 - 지역 내 산업 기반과 기업 유치 규모가 노동 수요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시사
 - 따라서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필요

- 영세사업체 중심 산업구조에서 성장형 산업 생태계로 전환 필요
 - 고양특례시는 사업체 수 규모는 크지만 평균 영업기간과 고용 밀도는 낮은 수준
 - 이는 소상공인·영세사업체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의미
 - 따라서 창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 구조로의 전환 필요

- 고령층 중심 고용 구조에서 세대 균형 일자리 정책 필요
 - 고양특례시는 노인일자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타 도시 대비 고령층 고용 의존도가 높은 특징
 - 이는 고령화 대응 정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성장형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한계 존재
 -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보완적 역할로 유지하되 청년·중장년층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 강화 필요

제3절 뉴스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트렌드 분석

1. 뉴스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트렌드 분석 개요

□ 분석 내용

- 본 분석은 전국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사회적 담론의 흐름 파악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외부 환경 인식 및 정책 프레임 분석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 대상: 전국 주요 언론사 104개 매체의 뉴스 기사
- 수집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10월 22일
- 검색어: '일자리'를 중심으로 유관어 동시출현 방식을 적용하여 기사 데이터를 수집·분석
 - 유관어 리스트: 고용, 노동, 정책, 대책, 지원, 고용안정,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인력양성,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청년, 여성, 노인, 중소기업, 창업지원, 취업지원, 구인구직

2. 뉴스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1) 지역에 따른 뉴스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및 비교

(1) 전국 단위

□ 전국 단위 뉴스 기사 분석 규모와 전반적 특징

- 총 19,004건의 일자리 관련 뉴스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
- 기사 수 기준으로 볼 때, 일자리 이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사회적 관심 주제로 유지

□ 주요 키워드 중심의 정책 담론 구조

- 주요 정책대상 키워드 '청년', '노인', '여성', '취약계층'
- 이는 일자리 정책 담론이 특정 산업 중심보다는 대상별·계층별 고용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프레임과 제도적 실행 강조

- 뉴스 담론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 정책 협약 체결, 정책 성과 평가 등 하향식 정책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
- 단발성 사업보다는 중장기 정책 패키지와 제도화된 실행 체계에 대한 높은 언급 비중

□ 산업·기업·재단 등 실행 주체 다각화 경향

-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산업계, 기업, 공공·민간 재단 등 다양한 주체의 실행 역할강조
- 이는 일자리 정책이 단일 정부 주체 중심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확장되고 있음 시사

표 4-14 | 전국단위 일자리 정책 이슈 키워드 Matrix

month	고빈도																			저빈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3-01	일자리								올해	투입		종합			대책		계획		민선					
2023-02	일자리							발대식					올해	투입	본격									
2023-03	일자리													개혁		노동		발대식	산업					
2023-04	일자리													안전						협약				
2023-05	일자리																재단		협약	운영				
2023-06	일자리						협약					업무		체결										
2023-07	일자리										재단		협약				안전교육	실시						
2023-08	일자리							주택			대상	클럽		기관	전국		평가		재단	지자체				
2023-09	일자리												평가	재단	대상	응답		기관						
2023-10	일자리					박람회									장애인			재단		실시				
2023-11	일자리								내년					기관		평가								
2023-12	일자리							내년											평가	주택				
2024-01	일자리						올해	발대식							안전교육	실시								
2024-02	일자리					발대식		대학						플러스										
2024-03	일자리									산업	안전					협약		대책		올해				
2024-04	일자리														협약			산업	올해					
2024-05	일자리															박람회			안전					
2024-06	일자리										박람회		광주		어린이		전남	전남도	안전	참여				
2024-07	일자리						기관								클럽		수행	평가						
2024-08	일자리						대상				주택					전국	수상	고용노동부						
2024-09	일자리												응답		수상			고용노동부	평가	안전				
2024-10	일자리					박람회									재단		어린이							
2024-11	일자리									내년								장애인		박람회				
2024-12	일자리							내년											성과					
2025-01	일자리														올해	참여	발대식			평가				

(2) 성남시

□ 전국 대비 높은 기사 비중과 정책 노출도

- 성남시 관련 일자리 뉴스는 총 897건으로, 전국 대비 약 4.7% 차지
- 이는 성남시 일자리 정책과 고용 이슈가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과 노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 청년·취약계층·상권 활성화 중심의 키워드 구조

- 주요 키워드 ‘청년’, ‘취약계층’, ‘상권 활성화’
- 청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담론이 두드러지게 형성

□ 청년정책 중심의 종합 생활지원 담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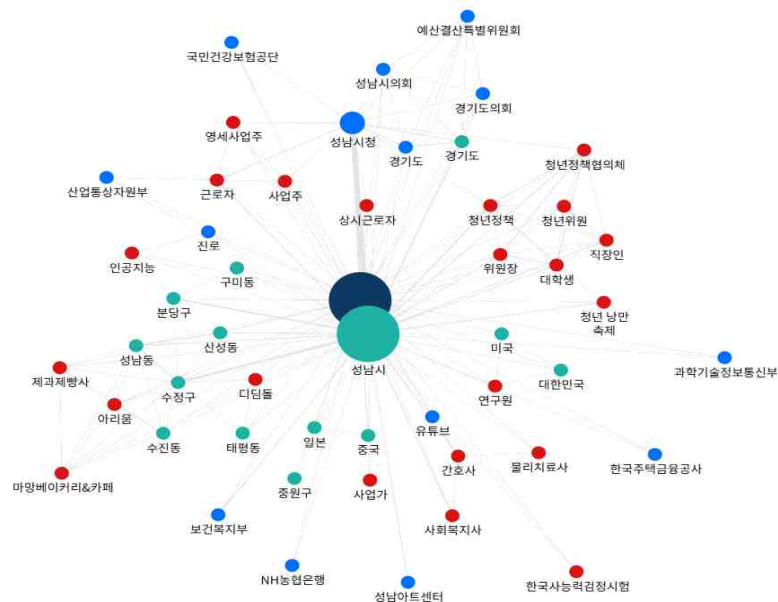
-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문화·생활 지원을 포함한 청년 정책 뉴스 비중이 전국 최상위권 수준
- 소상공인, 청년 창업, 도심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일자리 정책 이슈 집중

표 4-15 | 성남시 일자리 정책 이슈 키워드 Matrix

month	고빈도																			저빈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3-01	일자리						예산			유급				폭등					사작										
2023-02	일자리							장장			오디션	구직						발굴											
2023-03	일자리						자축		만기							자립				구직									
2023-04	일자리		전문								생리	용품	조례	상임	통과			연간	버스	요금									
2023-05	일자리														버스킹	현대	그린	푸드											
2023-06	일자리						보험료			스마트	측정	기기		맞춤	관리	봉사	상반기	일반		우수									
2023-07	일자리										변환		보증금		이재명	폐지		월세											
2023-08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	대회			상반기						조례	수강									
2023-09	일자리						편성					정상	올해		호응	가능		낭만	축제	보조금									
2023-10	일자리										작무		실시			자정	가존	개소	소로										
2023-11	일자리					교류	위급속				소통			차매	상담	가법		내달	의원	완주시									
2023-12	일자리														인원	폭력	불법	촬영	근절	합동									
2024-01	일자리								토론회	스마트	실패	재기		도시		마을	세무사												
2024-02	일자리																			폐지									
2024-03	일자리										파키지	자전거	재활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2024-04	일자리								매너저		계약			하이테크	별리	가리	우측	회형	사기										
2024-05	일자리				주식			남부			러닝	크루	달린다	아색	달리기	프로		전체	인구	고령									

																그랜						
2024-06	알짜리					예비			상인							점점	원금		협약	여름철		
2024-07	알짜리						이직	준비							비대	진료	보건	사범				
2024-08	알짜리															일반		우수				
2024-09	알짜리					기념			행사	축제					가을	시청				하반기		
2024-10	알짜리			어린이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용역	착수		의정부시				
2024-11	알짜리							요양	기관	근무	할빙				증가			압도	스케일	솔로몬	선택	
2024-12	알짜리						지도	제작	책자	형태	배포					걱정		골목길	이여기			
2025-01	알짜리									구축				개념		시청	기관	인구	코디	네이션	시스템	
2025-02	알짜리																		소상	공인		
2025-03	알짜리														반자하	개폐	방법			가주		
2025-04	알짜리															발굴	나이	경로당			인상	노숙
2025-05	알짜리									시장	가스		타이머	보급	산상진	성년	임대주택				소식	
2025-06	알짜리							자립	보조	가기	배상	책임	보험	국가	보훈			포함		훈자		
2025-07	알짜리											취득	운전면허									
2025-08	알짜리			노후	공장	선정	리뉴얼							연속		방문	월간	교류	폭염	강화		
2025-09	알짜리								활기		도담				상원	산상진	시장	화형	미디어	광장	개장	
2025-10	알짜리							응급					등급	소통		강화			획득			

그림 4-3 | 뉴스빅데이터 네트워크(성남시)



(3) 고양특례시

□ 전국 대비 낮은 기사 비중과 생활복지 중심의 일자리 담론 구조

- 고양특례시 관련 일자리 뉴스는 총 442건으로, 전국 대비 약 2.3% 수준 해당
- 이는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및 고용 이슈의 전국적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을 의미

□ 여성·복지·취약계층 중심의 키워드 구성

- 주요 키워드는 ‘여성’, ‘복지’, ‘취약계층’ 등으로 나타나, 생활밀착형·돌봄 중심이 주된 담론
- 청년·스타트업·신산업 관련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 생활복지형·공동체 기반 일자리 정책 집중 경향

- 고양특례시 뉴스에서는 공공일자리, 복지 연계형 일자리, 지역 공동체 기반 사업이 주요 정책 사례로 언급
- 시민 참여형 일자리, 지역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정책이 강조되는 경향

□ 정책 담론의 한계와 구조적 특징

- 일자리 정책이 ‘고용안정’과 ‘복지 보완’ 중심으로 인식되며, 성장·혁신형 일자리 담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이는 고양특례시의 인구 구조(여성·중장년 중심)와 기존 산업 구조가 뉴스 담론에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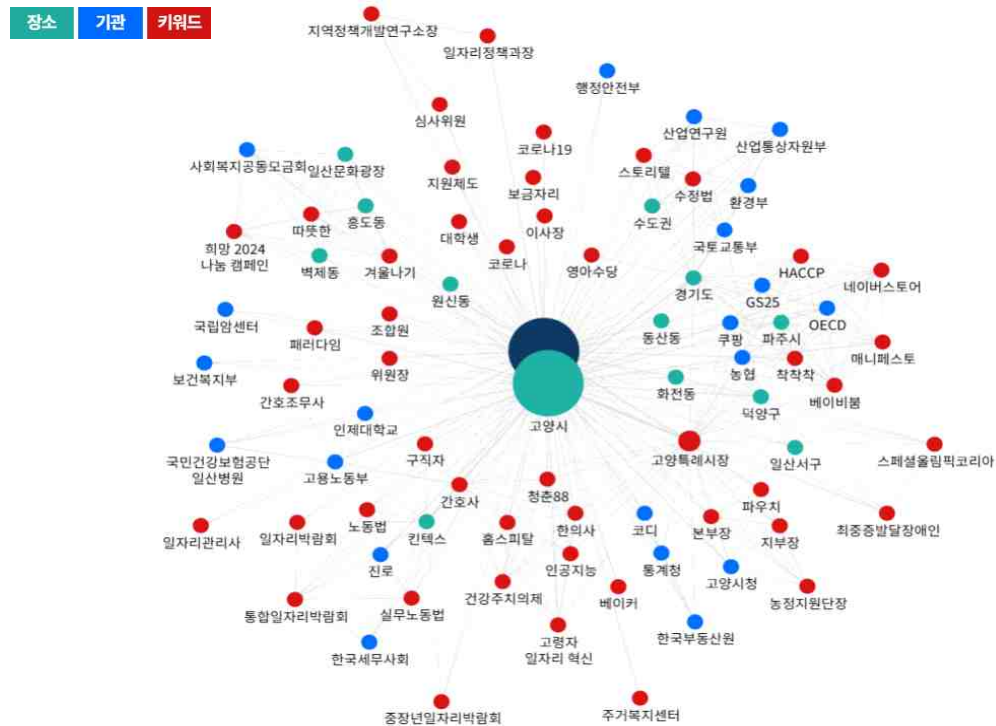
표 4-16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이슈 키워드 Matrix

month	고빈도																		저빈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3-01	일자리								구멍	총력	장비			주력					패러다임	전환
2023-02	일자리										반려동물	의료	장례비용	정보망	전면	개편	정보		단절	
2023-03	일자리				세부	계획	공시					첫걸음	자식	산업		네트워킹	협의	구축	서울	필요
2023-04	일자리							정보	정보망	개편			잠자리	기틀						
2023-05	일자리					라레이						축하		만성	질환	종합병원				
2023-06	일자리				중증	장애	노인도	포함											차매	후견인
2023-07	일자리									취임					주년		마을		대피	
2023-08	일자리			우울증	치료		주요역	인근	안심	갯길	협동	점점			투입			냉방		
2023-09	일자리					개발	재탄생	응원									특강			탈버림
2023-10	일자리													복서		전문		회복	지협	
2023-11	일자리															사형			감치	

2023-12	일자리							용의자	추적	자하		겨울 나기	고독사						
2024-01	일자리											자난해	테크노	발리			빙한	모자	
2024-02	일자리																		
2024-03	일자리																구역	성사	혁신
2024-04	일자리										번지	최선		유급	병가	건강 감진	포함	금융	
2024-05	일자리														아버지 날	기념			
2024-06	일자리									매월	하반기		공동체				보간소	식료품	보육
2024-07	일자리							아슈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활기	공동			특성화 고		결실
2024-08	일자리			단체	협의	평등	인식	개선	저출산	극복	육아	골든벨	상황		정규	강좌	배움	기회	제공
2024-09	일자리											선도	매니페 스토	최우수 상	수상		통해		살기
2024-10	일자리																	풍산동	버퍼회
2024-11	일자리														운정	교회		대한 민국	아워드
2024-12	일자리				절기						자정			노사	민정	상생			
2025-01	일자리																	신규	
2025-02	일자리									한국			유급	병가					강사
2025-03	일자리								입학식			세부	계획	공시	배움	열정			
2025-04	일자리	화전동			무료	진료													
2025-05	일자리				교체	공무원	효율	진명등	조명	무상	원산동	안전	안심			일산 동구	영남	신불	피해
2025-06	일자리				문화		현안				거당	역점	무료	식사	제공	논의	경로당		건의
2025-07	일자리				출근		전환	행복	살버		폭염				출하		오늘	파라다 임	급증
2025-08	일자리				교실	산업	진로		전략	여성 폭력			실무			커피	살버	버리 스타	양성
2025-09	일자리				추석				맞이			각력							살천
2025-10	일자리								기념								상대		성황리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4 | 뉴스빅데이터 네트워크(고양특례시)



〈자료〉 연구진 작성.

(4)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방향

□ 일자리 정책 담론은 ‘대상 맞춤형 안정’ 중심

- 청년·노인·여성 등 생애주기 및 계층별 키워드의 빈번한 등장으로, 보편적 고용 확대보다 맞춤형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 중앙정부 정책 프레임과 지역 정책의 연계 필요성 확대

- 뉴스 담론이 중앙정부 종합계획 중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지자체 일자리 정책 역시 중앙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중요
- 동시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행 전략을 통해 정책 차별성과 실효성을 확보 필요 존재

□ 고양특례시와 성남시 간 일자리 정책 인식의 구조적 차이

- 고양특례시는 생활복지·공동체 중심의 안정형 일자리 담론이 우세한 반면, 성남시는 청년·창업·상권 활성화 중심의 성장형 담론 형성
- 이는 두 도시의 산업 구조, 인구 특성, 정책 전략 차이가 뉴스 담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 고양특례시는 기존의 복지·안정 중심 일자리 정책 강점을 유지하되, 청년·스타트업·혁신 산업 관련 담론을 전략적으로 확대 필요 존재
- 정책 설계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성장형 일자리 메시지 강화 요구

□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

- 뉴스 담론 분석은 정책의 실제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
- 향후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 수립 시, 정책 실행과 함께 뉴스·미디어 노출 전략을 병행하는 접근 필요

2) 정책 대상별 뉴스 빅데이터 분석 및 비교

(1) 전국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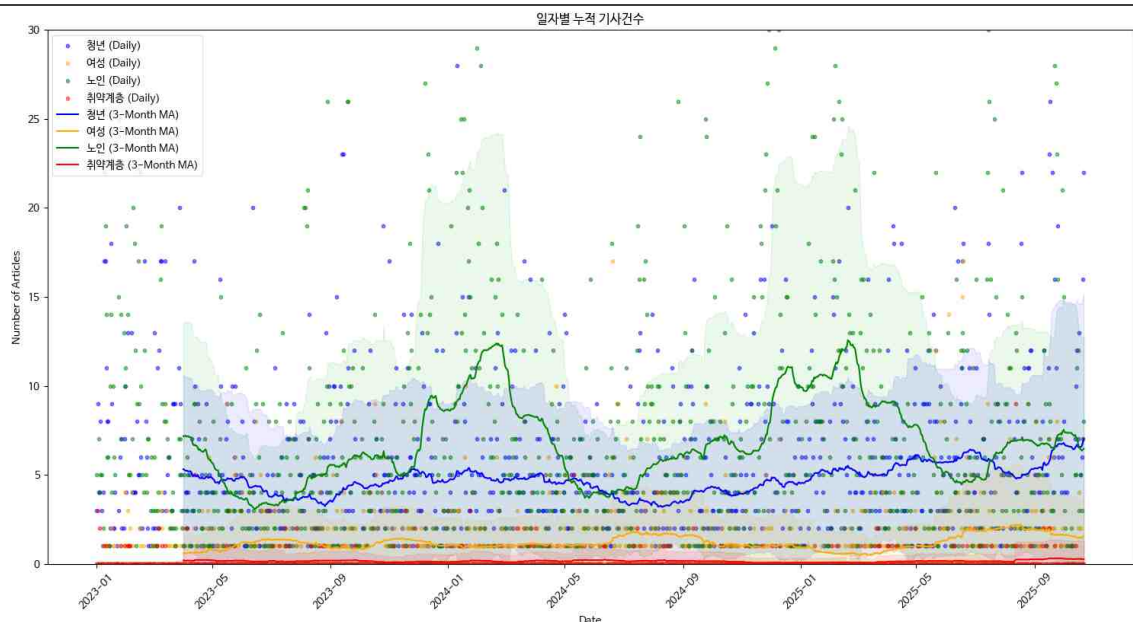
□ 노인 일자리는 계절적·구조적 안정축으로서 정책 위상 지속

- 노인 일자리는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빈도를 유지하며, 일자리 정책의 핵심 축으로 기능
- 연초(1~3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되는 등 뚜렷한 계절성 패턴 관찰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형·공공형 일자리 사업이 중심을 이루며, 경기 대응과 고령층 사회 참여 확대를 주요 정책 목적으로 설정
- 이는 노인 일자리가 단기 경기 대응 수단이자 구조적 고용 안전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

□ 여성 일자리는 사회복귀형 보완축으로서 정책 역할 강화

- 여성 일자리는 전체 정책 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
- 경력단절 해소, 돌봄 연계형 일자리 등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정책 중심
-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
- ‘일·가정 양립형 고용정책’이 단기 사업을 넘어 지속적 정책 의제로 정착하는 추세

그림 4-5 | 대상별 일자리 정책 월 기사 건 수(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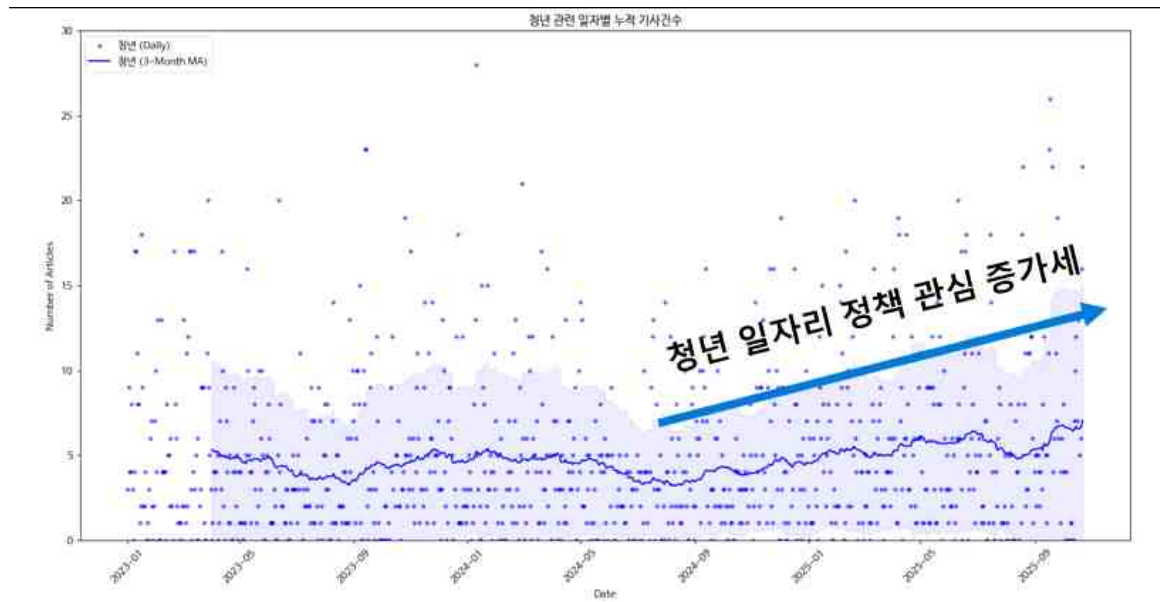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청년 일자리는 혁신형 성장축으로 정책 전환 가속

- 청년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2024년 이후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가속화
- 스타트업·벤처·디지털 인턴제 등 민간 기반의 혁신형 일자리 관련 정책과 담론 확대
- 정책 기조는 기존의 '취업 지원 중심'에서 '창업·혁신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
- 청년층의 고용 정책과 창업 생태계를 결합하는 방향이 향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전환

그림 4-6 |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 월 기사 건 수(전국)



〈자료〉 연구진 작성.

(2) 성남시

□ 청년정책 관심도의 지속적 상위권 유지와 도시 정책 이미지 형성

- 뉴스 그래프에서 확인되듯 성남시는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청년 이슈가 꾸준히 출현
- 청년 취업·주거·문화 정책이 성남시 정책 담론의 중심축으로 작동
- 이는 '청년친화 복지도시'라는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강화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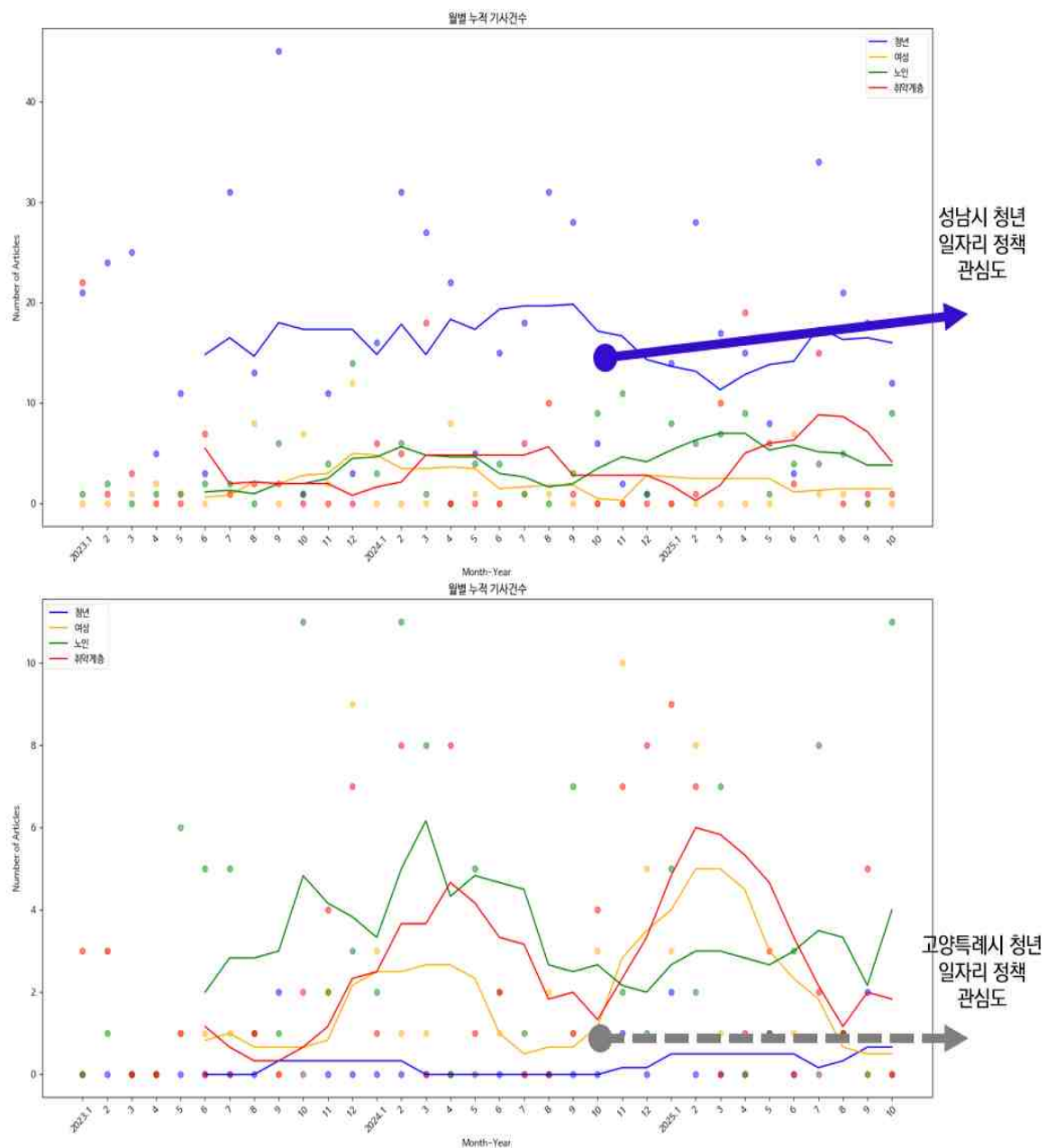
□ 취약계층(노인·저소득층) 일자리 및 복지 정책의 단계적 확장

- 2025년을 전후로 노인 일자리 관련 뉴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에너지·안전·돌봄 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속도가 빠르게 변화
- 이는 청년 중심 정책과 병행하여 '포용복지형 일자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경향

□ 청년 중심 성장전략과 포용 정책 간 균형 과제 부각

- 청년 중심 정책이 지역 활력과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
- 반면 뉴스 담론 상 청년 외 연령대에 대한 상대적 저편향 현상이 일부 확인
- 정치적·재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지속성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그림 4-7 | 성남시-고양특례시 청년 일자리 정책 관심도 비교



〈자료〉 연구진 작성.

(3) 고양특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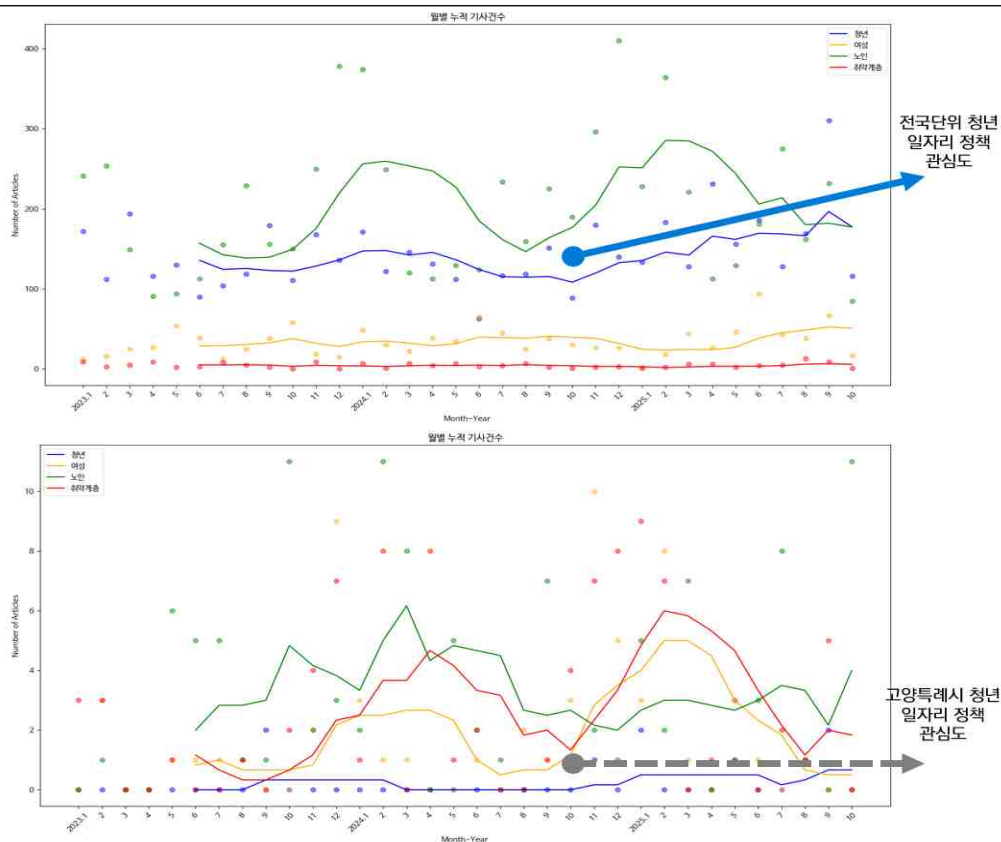
□ 여성·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형·포용형 일자리 정책 구조

- 고양특례시 관련 뉴스에서 여성·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기사 비중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음
- 경력단절 여성 지원, 돌봄·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회적기업 연계 사업이 주요 정책 키워드
- 공공서비스형·복지 연계형 일자리 정책이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의 핵심축으로 작동
- 사회적 포용과 지역 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성이 뉴스 담론 전반 반영

□ 청년 일자리 담론의 상대적 부족과 성장형 정책 공백

- 청년 관련 뉴스 기사 수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며,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인 저빈도 패턴 유지
- 청년 창업, 스타트업, 디지털 고용 등 성장형 일자리 관련 언급의 부재
- 이는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메시지와 실행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시사
- 지역 산업 및 기업과 연계된 청년 고용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확대 진행

그림 4-8 | 전국-고양특례시 청년 일자리 정책 관심도 비교



〈자료〉 연구진 작성.

(4) 정책 시사점 및 향후 방향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은 현재 ‘복지형 포용 정책’을 중심으로 설계·인식
-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고령화·여성 중심 인구 구조와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 산업 구조가 정책 담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해석
- 다만 성장 동력과 혁신을 견인할 청년 중심 정책 축이 상대적으로 결여, 중장기적으로 지역 활력 저하 위험 존재

□ 성남시-고양특례시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성남시는 청년 정책을 도시브랜드와 결합하여, 청년 중심 성장형 모델을 통해 도시 성장과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유지
- 반면 고양특례시는 ‘복지형 포용 모델’로, 여성·취약계층 중심의 안정·포용 정책에 강점을 보이나, 성장형 청년 정책 축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
- 이는 청년 정책을 단기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으로 설계할 필요성 시사
-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고용 대책을 넘어, 지역 성장과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음 의미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 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 고양특례시는 기존 복지형 정책 강점을 유지하되, 청년·혁신 정책을 결합한 이중축 전략 설계 요구
- 특히 청년 정책을 보조적 영역이 아닌, 중장기 도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재정립할 필요성 존재

□ 향후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방향의 전략적 전환

- 여성·취약계층 중심 정책의 강점을 유지·고도화하는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성장형 정책 축을 병행 구축할 필요성 존재
- 청년 스타트업·벤처 지원, 지역 기업 연계형 청년 고용 전략을 통해 청년 일자리 담론과 정책 실행을 동시에 강화 필요
-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을 ‘포용형 기반의 성장형 모델’로 재정비 필요

3) 경기도 시·군 및 정책대상별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

(1) 경기도 시·군 및 정책대상별 분석

□ 분석 개요 및 방법

○ 분석 개요

- 분석 내용: 앞서 수행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경기도 관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분석
- 분석 대상: 총 713,072건의 일자별 뉴스 기사 제목과 초록
- 분석 방법: 빈도분석을 통해 정책대상별 언급 수준을 비교·분석
- 해석 기준: 분석 결과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시·군에서 해당 정책대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담론 형성이 활발함 의미

○ 분석 체계 구축

- 경기도 내 시·군별 정책대상 관심도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스타트업, 기업, 근로자, 노동자, 학생
- 상기 분류를 기반으로 시·군-정책대상 간 관심도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지역별 일자리 정책 초점의 차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활용 범위

- 본 분석을 통해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내에서 어떤 정책대상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제공
- 특히 고양특례시의 여성·취약계층 중심 정책 구조와 청년·기업·스타트업 정책의 상대적 약세를 도 차원에서 비교·진단
- 향후 전략을 경기도 평균 및 유사 도시와 비교하여 재설계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분석 결과

○ 경기도 전반의 일자리 정책 관심 대상 구조

- 경기도 전반적으로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의 가장 높은 관심도
- 이는 도 차원의 일자리 정책과 시·군 단위 정책 모두에서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주체로 청년과 기업을 설정하고 있음 시사
- 상대적으로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은 안정·복지 중심 정책대상으로 병행 추진되는 구조

○ 시·군별 정책대상 관심도의 구조적 이질성 확인

- 일부 시·군은 ‘청년·스타트업·기업’ 중심의 성장형 정책대상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반면, 다른 시·군은 ‘노인·여성·장애인·근로자’ 중심의 복지·안정형 정책대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 존재

-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 인구 구조, 산업 기반, 정책 전략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상이함을 의미

표 4-17 | 경기도 시·군 및 정책 대상별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 결과

시군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스타트업	기업	근로자	노동자	학생
평균	618	127	105	84	49	509	64	47	44
고양	480	79	98	29	56	488	13	7	25
광주	6760	1066	934	868	570	5363	707	540	480
수원	1173	230	155	196	93	1102	67	72	111
용인	1138	282	207	272	100	1220	179	79	46
안양	813	84	53	50	78	538	12	30	59
성남	631	174	85	89	77	401	110	59	23
안산	573	90	83	77	23	348	51	65	59
평택	428	172	43	62	46	384	67	94	28
광명	354	82	123	49	31	225	43	7	28
화성	336	148	79	33	28	375	40	44	22
의정부	320	82	125	55	26	337	18	21	31
부천	306	80	64	37	5	268	49	23	23
시흥	294	203	86	40	14	304	101	49	19
남양주	279	64	59	34	21	108	11	3	21
하남	264	46	48	45	22	263	32	13	16
포천	247	40	60	16	8	163	38	15	29
오산	243	31	45	20	0	62	6	5	12
안성	201	47	47	23	1	155	44	22	12
군포	198	32	69	25	24	155	11	6	10
이천	188	33	18	19	2	153	5	9	18
파주	179	79	27	30	0	158	13	24	16
구리	156	35	71	11	5	81	6	8	13
김포	133	38	25	22	4	120	21	8	8
여주	128	16	43	14	7	133	4	1	19
양주	124	29	25	25	19	188	13	7	15
의왕	115	40	45	51	8	131	9	3	6

〈자료〉 연구진 작성.

□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 정책대상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 필요

- 모든 정책대상을 동일하게 포괄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핵심 정책대상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 존재
- 경기도 전반의 '청년·기업 중심' 정책 흐름 속에서, 각 시·군은 보완 또는 차별화 전략 선택 필요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 고양특례시는 기존 여성·취약계층 중심 정책 강점을 유지하되, 경기도 전반에서 관심도가 높은 청년·기업·스타트업 정책대상을 전략적으로 보강하는 방향 요구
-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을 경기도 평균 및 유사 도시와 비교 가능한 전략적 틀 속에서 재설계할 필요 존재

(2) 경기도 내 주요 10개 도시 간 정책대상별 분석

□ 분석 목적

-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정책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내 주요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 실시
- 뉴스 빅데이터 기반 정책대상 관심도를 활용하여 도시별 일자리 정책 초점과 담론 구조의 차이 비교

□ 분석 결과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담론의 노인 일자리 중심 편중 구조

- 최근 뉴스에서 관찰되는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관련 보도는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 존재
- 이는 고령화 대응과 복지형 일자리 정책이 정책 담론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음 의미
- 반면 청년층, 기업, 스타트업 등 성장형 일자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언급과 정책적 관심

○ 정책대상 전반에서 평균 이하로 나타나는 고양특례시의 관심도 수준

- 정책대상 중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상에서 고양특례시의 관심도는 경기도 평균 이하로 관찰
- 이는 정책 설계 자체의 한계뿐 아니라, 정책 성과와 방향성이 외부로 확산·인식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함 시사
-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외적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강화 필요성 제기

○ 주요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되는 정책 구조의 차별성

-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는 청년·여성·노인·기업 등 다양한 정책대상 전반에 걸친 균형적 분포

- 이는 성장형 정책과 포용형 정책을 병행하는 종합적 일자리 전략이 정책 담론에도 반영된 결과 해석

○ 청년·스타트업 중심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성남시와 안양시 사례

-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시와 안양시는 청년 및 스타트업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
- 이는 두 도시가 청년·혁신·창업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시 경쟁력과 이미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시사

표 4-18 | 경기도 주요 10개 도시 및 정책 대상별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 결과

시군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스타트업	기업	근로자	노동자	학생
고양	480	79	98	29	56	488	13	7	25
용인	1138	282	207	272	100	1220	179	79	46
수원	1173	230	155	196	93	1102	67	72	111
안양	813	84	53	50	78	538	12	30	59
평택	428	172	43	62	46	384	67	94	28
성남	631	174	85	89	77	401	110	59	23
화성	336	148	79	33	28	375	40	44	22
부천	306	80	64	37	5	268	49	23	23
남양주	279	64	59	34	21	108	11	3	21
의정부	320	82	125	55	26	337	18	21	31
10개도시평균	590	140	97	86	53	522	57	43	39

주: 붉은색 부분은 평균이하를 뜻하며, '10개 도시 평균' 보다 해당 정책대상에 대한 언급이 낮은 도시들을 표시한 것임
(자료) 연구진 작성.

□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 노인 중심 안정형 정책에서 성장·포용 병행형 전략으로의 전환 요구

- 고양특례시는 기존 노인 일자리 중심의 안정형 정책 강점을 유지할 필요 존재
- 동시에 청년·기업·스타트업 등 성장형 정책대상에 대한 전략적 보강 요구

○ 정책 설계와 정책 인식 간 간극 해소 필요

- 정책 실행뿐 아니라, 뉴스·미디어를 통한 정책 인식 확산 전략을 병행할 필요 존재
-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의 대외적 인지도와 정책 파급력을 제고 가능

4) 군집분석 및 군집비교

(1) 군집분석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담론은 5가지 군집으로 분류
 - 복지·돌봄형, 지역공동체·시민참여형, 지식·교육·청년역량, 도시기반·산업연계, 기후·생활안전형
- 복지·돌봄형 정책 군집의 압도적 우세와 포용복지 중심 정책 기조
 - 뉴스 빅데이터 군집 분석 결과,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담론은 사회복지·건강·심리 안정 중심의 '복지·돌봄형' 군집이 가장 강하게 형성
 - 노인, 장애, 보육, 치매, 고독사, 안전, 권익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 안정 관련 키워드가 다수 출현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 자체보다 사회적 보호와 포용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 유지 의미
- 지역공동체·시민참여형 군집을 통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모델 형성
 - 비교적 뚜렷한 마을, 공동체, 단체, 상생 등 시민 참여 기반의 공동체형 일자리 키워드
 - 공공 주도형 일자리와 함께 시민 참여형·지역 연계형 일자리 모델 병행 추진
 - 이는 지역 사회 결속과 공동체 회복을 중시하는 고양특례시의 정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 지식·교육·청년역량 군집의 존재와 한계
 - 청년 대상 역량 개발,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관련 키워드가 일부 확인
 - 특강, 강좌, 진로, 직업교육, 특성화고 등 교육·훈련 중심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정책 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
 - 이는 청년 대상 정책이 보조적 성격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인 성장·혁신형 일자리 전략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시사
- 도시기반·산업연계 군집의 초기 형성과 성장 가능성
 -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산업, 글로벌 등 산업연계형 키워드가 일부 군집으로 확인
 -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과 일자리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책 담론에서의 존재감은 제한적
 - 향후 고양특례시의 성장형 일자리 전략으로 확장 가능한 잠재적 정책 축으로 평가
- 기후 생활·안전형 군집을 통한 안전망 중심 일자리 연계 정책
 - 폭염, 산불, 환경 개선, 보건소 등 생활환경 안전과 재난 대응 관련 키워드 확인
 -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안전망 강화를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복지형 접근 확대 의미
 - 다만 해당 군집 역시 고용의 질과 성장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는 구조

표 4-19 | 뉴스 빅데이터로 관찰한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의 특징

주요 군집	특징 요약
복지·돌봄형 (노인, 치매, 장애, 보육, 우울증, 고독사, 유급, 경로당, 실버)	사회복지·건강·심리안정 중심의 포용복지형 정책 기조
지역공동체·시민참여형 (마을, 공동체, 릴레이, 바자회, 성사, 번지, 교회, 단체, 상생)	시민참여 기반 공동체 일자리 모델지향
지식·교육·청년역량 (특강, 강좌, 진로, 배움, 특성화고, 강사)	청년 대상 역량개발·직업훈련형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규모는 제한적
도시기반·산업연계 (테크노, 밸리, 강소기업, 혁신, 글로벌, 산업, 개발, 상생)	첨단산업(일산테크노밸리 등) 중심의 산업혁신 거점화 시도

〈자료〉 연구진 작성.

(2) 군집비교

□ 전국-고양특례시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 청년 중심 고용과 혁신 정책 부족
 - 현저히 적은 산업·스타트업·디지털 고용 분야의 정책 노출
- 성과관리 구조의 미약
 - 평가·성과 중심 정책 관리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반면에 고양특례시는 구조적으로 미약
- 복지의존적 구조 위험성 존재
 -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복지 연계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방향

표 4-20 | 전국-고양특례시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구 분	전국 트렌드	고양특례시 트렌드	차이점
정책 프레임	중앙정부-지자체 협약형 구조	지역공동체-시민참여형 구조	시민주도·생활밀착형 접근
주요 대상	노인·청년·여성 중심	노인·복지수요층 중심, 청년 비중 작음	세대균형보다 복지안정 우선
산업 연계	산업·기관·재단 중심	도시 내 테크노밸리·강소기업 중심	대기업유치와 더불어 지역산업 육성 지향
정책 관리	계획·발대식·평가 중심	교육·참여·공동체 활동 중심	제도적 관리보다 자율·현장형 운영 강조

〈자료〉 연구진 작성.

□ 성남시-고양특례시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 청년정책의 정체성과 브랜딩 부족

- 산업 생태계 중심의 성장 전략에 비해 청년 정책의 정체성과 브랜딩이 부족하여 자족 도시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 존재

○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

-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기반 정책 확대 필요

○ 산업·도시 개발 진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력 부각 필요

표 4-21 | 성남시-고양특례시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구 분	성남시 트렌드	고양특례시 트렌드	차이점
정책 프레임	청년친화 복지도시	지역공동체-시민참여형 구조	청년정책의 브랜딩이 부재하며, 자족도시로서의 존재감 필요
주요 대상	청년 및 장애·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복지수요층 중심, 청년 비중 작음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
산업 연계	상권·창업 생태계, 의료·돌봄서비스, 문화·관광산업	도시 내 테크노밸리·강소기업 중심	산업생태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음
정책 관리	예산 갈등 및 정책 지속성 이슈	교육-참여-공동체 활동 중심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만큼 예산과 실행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은 ‘복지·돌봄-공동체 중심’의 안정형 구조가 지배적

- 사회적 포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 성과는 분명하나, 성장형·혁신형 일자리 측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

○ 성장형 정책 축의 보완 없이는 중장기 도시 활력 저하 가능성 존재

- 청년·산업·기업 중심 정책 군집의 약세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역동성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정책 구조 재편의 방향성: ‘성장형+안정형’ 이중축 전략 설계 필요

- 기존 취약계층 및 돌봄형 정책의 강점을 유지·고도화하는 동시에 청년 역량 강화, 산업 연계, 혁신 기업 유치 등 성장형 일자리 정책을 전략적 결합 필요

제4절 고양특례시 추진 사업과 일자리 연계 필요성

1. 추진 사업 현황

□ 고양특례시는 대규모 인프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고양특례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은 총 9개 사업 진행

-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조성 추진
- 콘텐츠·미디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영상문화단지, 방송영상밸리 조성 추진
- MICE 관광 기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릉천 관광지 개발, 킨텍스 제3전시장 개발 추진

○ 인프라 사업은 투입 재원이 크고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전략과의 체계적인 연계 요구

○ 특히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프라 사업을 지역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전략과 연동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

그림 4-9 | 고양특례시 추진 예정 인프라



〈자료〉 연구진 작성.

2. 추진 사업과 일자리 연계 필요성

□ 고양특례시 주요 인프라 사업의 고용유발 효과 예측

- 사업 유형에 따라 첨단산업·창업·콘텐츠·관광·전시·복합사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 포괄
- 인프라 사업별 일자리 창출효과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사업별 사용면적과 사업별 1인당 사용면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산
- 이들 사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최소 83,872명에서 최대 159,558명 수준으로 추정되어,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 보유

□ 사업과 일자리 전략 연계 필요성

- 고용유발 효과가 큰 핵심 인프라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복합사업·업무형)은 최대 66,47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어, 고양특례시 인프라 사업 중 가장 큰 고용 파급력 예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창업·지식산업형)는 최소 20,833명에서 최대 41,667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청년·창업·혁신형 일자리 전략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
 - 고양방송영상밸리와 고양영상문화단지 등 콘텐츠·미디어 관련 사업 역시 상당한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내며,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
- 첨단산업·MICE·관광 인프라의 보완적 고용 효과
 - 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산업 고도화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
 - 킨텍스 제3전시장과 창릉천 관광지 개발 등은 고용유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전시·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인 고용 수요를 창출하는 보완적 역할 수행
 -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고용 규모는 제한적이나, 스타트업·창업 중심의 질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징성과 확장 가능성
-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전략의 체계적 연계 필요성
 - 고양특례시의 인프라 사업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나 시설 확충을 넘어, 산업 육성·청년 고용·창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 존재
 -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기업 유치-고용 연계를 사전에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 요구
 - 이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복지형 일자리 정책과 성장형 일자리 정책을 연결하는 구조적 시너지 창출 가능

표 4-22 | 인프라사업 예상 일자리 창출 효과 추정

(단위: 명)

유관 인프라 사업명		사업유형	최소 고용유발	최대 고용유발
1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복합형	6,667	14,286
2	일산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형	1,245	1,744
3	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	창업·지식산업형	20,833	41,667
4	고양방송영상밸리	콘텐츠·미디어형	17,550	28,079
5	고양영상문화단지	문화·콘텐츠형	2,508	4,013
6	킨텍스 제3전시장	MICE·전시형	1,007	2,015
7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복합상업·업무형	33,238	66,476
8	창릉천 관광지 개발	관광레저형	737	1,105
9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창작·스타트업형	87	173
총 계			83,872	159,558

주: 사업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단위면적당 고용창출을 추정해 최소~최대 범위를 추정함(단, 창릉천관광지 개발은 km 단위 사용)
 〈자료〉 연구진 작성.

제5장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 체계 도출

제1절 고양형 일자리 창출 방향 설문조사 분석

제2절 SWOT 분석 및 전략 과제 도출

제3절 미래 일자리 상황별/시나리오별 전망 분석

제1절 고양형 일자리 창출 방향 설문조사 분석

1.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1) 분석 프로세스

□ 고양특례시 전략적 일자리 전략 방향 도출을 위한 분석 절차

-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일자리 전략의 체계적 도출
- 이를 위해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결합한 단계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적용

□ 분석 프로세스 개요(5단계)

○ 1단계: 일자리 전략(안) 도출

- PEST·SWOT 분석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대내외 환경을 종합 진단하고, 후보 일자리 전략군 설정

○ 2단계: 평가모델 설계

- 고용효과, 산업파급력, 정책 적합성, 실행 가능성 등 핵심 평가 항목 중심의 다기준 평가체계 구축

○ 3단계: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투자 중요도 설정

- 전문가 설문(AHP, Line-up, Risk-Return 등)을 통해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와 전략별 투자 우선순위 산정

○ 4단계: 설문 결과 분석

- 설문 응답의 일관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전략별 종합 점수와 상대적 우위 분석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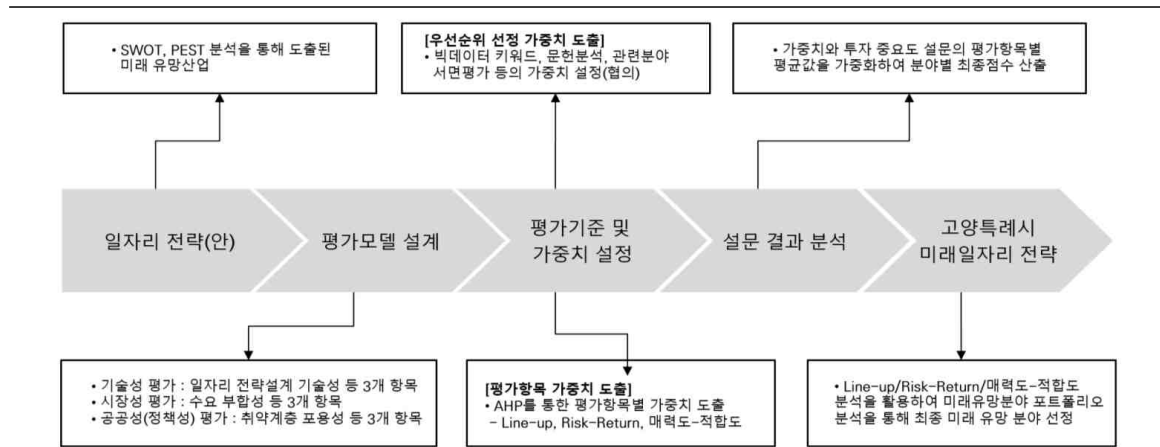
○ 5단계: 최종 전략 선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고양특례시에 가장 적합한 미래형 일자리 전략과 중점 투자 방향 도출

□ 의의

- 객관적 평가와 전문가 판단을 결합한 전략적 일자리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석 틀로 활용 가능

그림 5-1 | 전문가 설문 분석 과정 개요도



〈자료〉 연구진 작성.

2) 평가모델 설계

□ 전략 우선순위 분석의 기본 틀

- 기술성·시장성·공공성의 3개 분야, 총 9개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일자리 전략 간 우선순위 분석
- 이를 통해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와 기본적인 투자 우선순위 도출

□ 기존 우선순위 분석의 한계

- 9개 평가항목 기반의 단순 가중치 분석은 전략 간 서열화에는 유효하나, 개별 전략의 실행 위험, 정책 파급력, 여건 적합성 등 전략적 판단에 필요한 다차원적 비교에는 한계 존재

표 5-1 | 전문가 설문 평가모델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정의
기술성	일자리 전략 설계의 기술성	고양특례시 산업·인구·주거·노동시장 구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일자리 목표 및 전략 적절성
	추진체계 역량	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일자리 관련 정책기관)의 정책 실행 역량, 전문성, 협업 네트워크 수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기술	정책효과 분석, 환류시스템, 고양특례시 내 고용통계 등을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시장성	지역 산업·노동시장 수요 부합성	고양특례시 전략산업과 직접적 연계성 실제 기업-산업간 인력수요와의 적합성
	민간기업 참여 가능성 및 지속 수요성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 창출 가능성(시장성) 기업의 일자리정책 참여의지
	참여 대상자(청년·여성·중장년 등) 매칭 가능성	고양특례시 인구 구조 및 대상군 특성에 맞는 취업 가능성·기술 적합성
공공성 (정책성)	고용취약계층 포용성	청년, 여성, 경력단절, 장애인, 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참여율 강화
	지역사회 파급효과(공익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산단·대학·마을 기반 등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투자 가치	지방재정 부담 대비 공공적 가치 제도화 가능성, 장기적인 일자리 유지·안정성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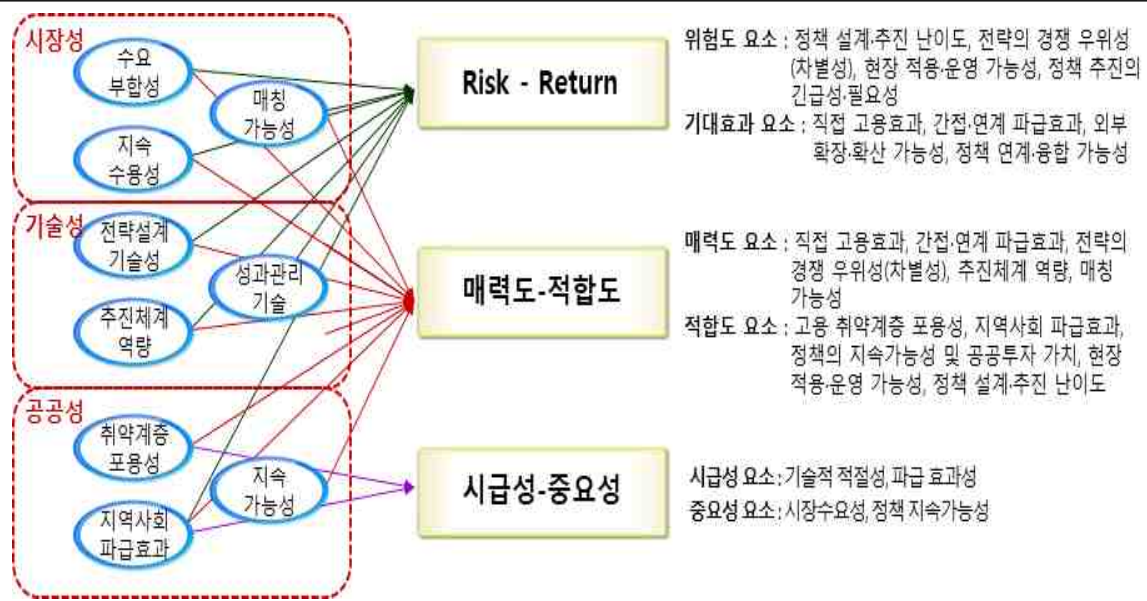
□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매트릭스 분석 도입

- 세부 평가항목을 활용한 매트릭스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전략 선택의 방향성과 실행 우선순위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
- 매트릭스 분석 구성(3유형)
 - 일자리 정책 실행의 위험도-기대효과 매트릭스
 - 정책 실행에 따른 리스크 수준과 고용·산업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 일자리 정책 실행의 매력도-여건 적합도 매트릭스
 - 민간 참여 유인, 산업 성장성 등 정책 매력도와 고양특례시 여건 부합성을 동시 평가
 - 일자리 정책 실행의 시급성-중요성 매트릭스
 - 현안 대응 필요성과 중장기 전략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도출

□ 기대 효과

- 고양특례시 여건에 부합하는 실행 가능하고 전략적인 일자리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그림 5-2 | 매트릭스 분석 항목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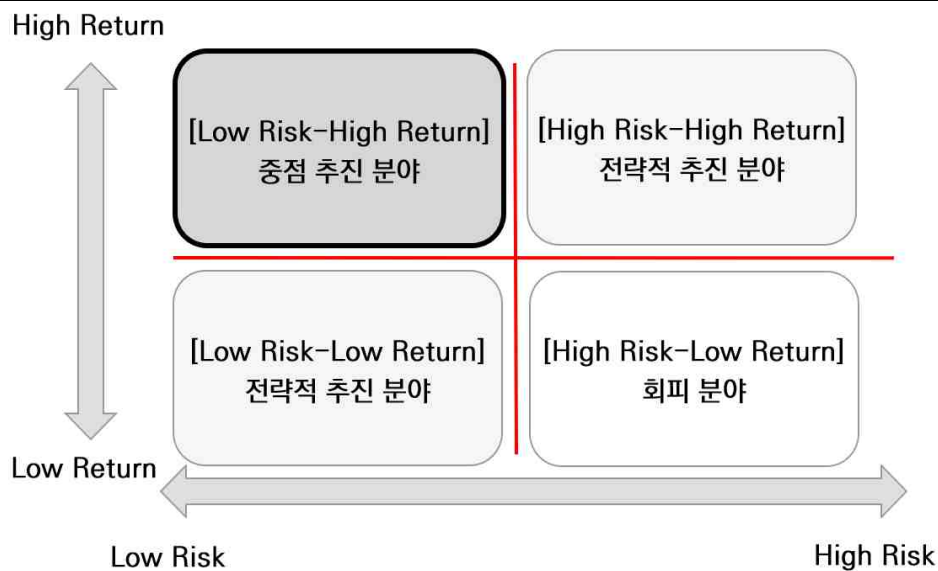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1) 세부 평가모델: 위험도-기대효과

- 일자리 전략의 실행 리스크와 정책 성과 간 균형의 종합적 평가
- 8개 세부 평가항목 중 다음과 같이 Risk Factor와 Return Factor 설정
 - Risk Factor(4개 항목)
 -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 전략의 경쟁우위성(차별성)
 -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 Return Factor(4개 항목)
 - 직접 고용효과
 - 간접·연계 파급효과
 - 외부 확장·확산 가능성
 - 정책 연계·융합 가능성
- 매트릭스 해석 기준
 - Low Risk-High Return: 중점 추진 분야
 - High Risk-High Return / Low Risk-Low Return: 전략적 추진 분야
 - High Risk-Low Return: 추진 회피 분야

그림 5-3 | 위험도-기대효과 매트릭스 분석 평가 기준



〈자료〉 연구진 작성.

(2) 세부 평가모델: 매력도-적합도

□ 정책의 기대성과와 고양특례시 여건 부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략의 실행 타당성 분석

□ 총 10개 세부 평가항목을 활용

○ 매력도 평가항목(5개)

- 직접 고용효과
- 간접·연계 파급효과
- 전략의 경쟁우위성(차별성)
- 추진체계 역량
- 참여 대상 및 산업 간 매칭 가능성

○ 적합도 평가항목(5개)

- 고용취약계층 포용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정책의 지속가능성
-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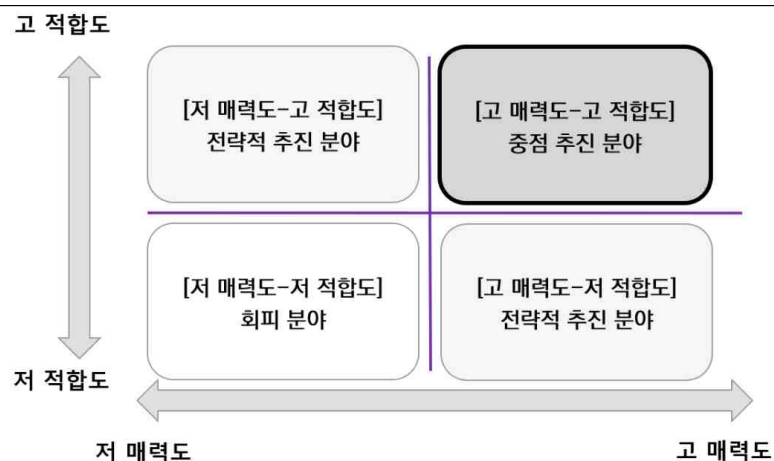
□ 매트릭스 해석 기준

○ 고 매력도-고 적합도: 중점 추진 분야

○ 고 매력도-저 적합도 / 저 매력도-고 적합도: 전략적 추진 분야

○ 저 매력도-저 적합도: 추진 회피 분야

그림 5-4 | 매력도-적합도 매트릭스 분석 평가 기준



〈자료〉 연구진 작성.

(3) 세부 평가모델: 시급성-중요성

□ 정책 추진의 필요 시점과 중장기 전략적 가치 평가

□ 9개 세부 평가항목 중 다음과 같이 시급성과 중요성 요소 설정

○ 시급성 평가항목

- 전략 설계의 기술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중요성 평가항목

- 고용취약계층 포용성
- 지속적 일자리 수요 창출 가능성
- 정책의 지속가능성

□ 매트릭스 해석 기준

○ 고 시급성-고 중요성: 중점 추진 분야

○ 고 시급성-저 중요성 / 저 시급성-고 중요성: 전략적 추진 분야

○ 저 시급성-저 중요성: 추진 회피 분야

○ ‘기술성·시장성 요인’과 ‘파급성·지속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단기 대응 전략과 중장기 구조 전환 전략을 구분·해석 가능

그림 5-5 | 시급성-중요성 매트릭스 분석 평가 기준



〈자료〉 연구진 작성.

3)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 선정을 위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고, 전략(안)에 대한 정책 실행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자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 설문은 AHP 기반의 가중치 산정과 함께, 다양한 평가모델을 적용한 다각적 판단을 병행하여 전략 선정의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설문조사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여, 여러 대안 중 최적의 선택안을 찾아내는 정량적 분석 기법

□ 설문 주요 내용

- AHP 설문문항 구성
 - 평가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고, 평가체계의 상대적 중요도 정량화
- 다양한 관점의 체계적 평가 문항 구성
 - Line-up, Risk-Return, 매력도-적합도 등 모델별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전략의 실행성과 파급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평가
- 응답자 전문성 수준 파악 문항 포함
 - 설문 결과의 해석 신뢰도 및 가중치 적용의 적정성을 보완
- 유망 전략(안)별 상대적 중요도 산출 문항 포함
 - 유망 분야에 대해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전략 간 우선순위 및 투자 판단 근거로 활용

그림 5-6 | 전문가 설문 예시

Part 1

우선순위 선정 평가모델 : Line-up 모델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전략의 중점 연구분야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Line-up 모델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ine-up모델은 시장성, 기술성, 공공성(정책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각 평가점수의 합산 결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일종의 줄 세우기 방식의 평가모델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정의
기술성 평가	일자리 전략 설계의 기술성	고양특례시 산업연구주거노동시장 구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일자리 목표 및 전략 적절성
	주진체계 역량	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일자리 관련 정책기관)의 정책 실행 역량, 전문성, 협업 네트워크 수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기술	정책효과 분석, 환류시스템, 고양특례시 내 고용통계 등을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시장성 평가	지역 산업·노동시장 수요 부합성	고양특례시 전략산업과 직접적 연계성
	민간기업 참여 가능성 및 지속 수요성	실제 기업·산업권 인력수요와의 적합성
	향후 지속적 일자리 수요 창출 가능성(시장성)	향후 지속적 일자리 수요 창출 가능성(시장성) 기업의 일자리정책 참여여지
공공성 (정책성) 평가	대상자(청년·여성·중장년 등) 매칭 가능성	고양특례시 연구 구조 및 대상군 특성에 맞는 취업 가능성 기술 적합성
	고용취약계층 포용성	청년·여성·경력단절·장애인·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참여율 강화
	지역사회 파급효과 (공익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투자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공산·민·대학·마을 기반 등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
	지방재정 부담 대비 공공적 가치 제도와 가능성, 장기적인 일자리 유지·안정성	

■ Risk Factor 간 비교

□ Risk 측면에서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전략의 경쟁우위성(차별성),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등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전략의 경쟁우위성(차별성)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점수				

□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항목(B)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전략의 경쟁우위성(차별성)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정책 설계·추진 난이도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현장 적용·운영 가능성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정책 추진의 긴급성·필요성

■ Return Factor 간 비교

□ Return 측면에서 직접 고용효과, 간접·연계 파급효과, 외부 확장·확산 가능성, 정책 연계·융합 가능성 등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직접 고용효과	간접·연계 파급효과	외부 확장·확산 가능성	정책 연계·융합 가능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점수				

□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 대상

○ 고양특례시 내·외부 경제 분야 전문가 15명 대상 설문 실시

○ 아래와 같이, 관련 전공 박사 15명, 유관경력 최소 7년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설문 실시

표 5-2 | 전문가 설문 참여자

소속		성명	전문분야	경력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강○○	경제학	7년
2	한국개발연구원	김○○	통계/데이터분석	31년
3	충남연구원	김○○	경제	15년
4	한국외국어대학교	김○○	경제학	17년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	인공지능, 중소기업	12년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	건설산업	17년
7	충남대학교	순○○	경제학	10년
8	고양연구원	유○○	산업정책	40년
9	산업연구원	이○○	지역산업정책	25년
10	한남대학교	이○○	경제학	8년
11	조선대학교	이○○	지역경제, 지방재정	14년
12	한국생산성본부	이○○	경제학	15년
13	고려대학교	이○○	경제	34년
14	고양연구원	주○○	관광/MICE(경영)	9년
15	고려대학교	최○○	경제학	19년

4) 설문 결과 분석

(1) Line-up 모델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Line-up 모델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고양특례시 재원 투자 중요도를 바탕으로 일자리 전략 우선순위 분석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지수(CR)가 0.1 이하인 응답만을 유효 표본 활용

□ Line-up 모델 분석 결과

- 다음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도출
 - 1순위: 중앙정부 첨단 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활용한 지역 인재 mismatch 해소
 - 2순위: 여성·신증년 고용 기반을 활용한 고령화 및 인구 유출 위협 대응
 - 3순위: 미래산업 기반의 자족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 이는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에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형 전략과 인구구조 대응 전략의 우선적 추진 필요성 시사
- 반면, 복지·재취업 지원 강화 전략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평가되어, 단독 추진보다는 성장형 전략과의 연계·보완적 추진 필요

표 5-3 | Line-up 모델 분석 결과

미래성장동력 산업	기술성			시장성			공공성(정책성)			합계	순위
	전략설 계기술	추진체 계역량	성과관 리기술	수요 부합성	지속 수요성	매칭 가능성	포용성	파급성	지속 가능성		
가중치	0.09	0.064	0.019	0.268	0.31	0.07	0.027	0.08	0.072	1	
1. 미래산업 기반의 자족형 일자리 생태 계 구축	0.0082	0.0041	0.0004	0.0718	0.0959	0.0049	0.0007	0.0064	0.0052	0.1975	3
2. 청년 대상 정부 스타트업 지원사 업 연계 강화	0.0464	0.0203	0.0018	0.2946	0.4595	0.0256	0.0041	0.0365	0.0278	0.9166	5
3. '복지형+성장 형 이중축모델' 정 책 기초 재정비	0.0395	0.0188	0.0017	0.3097	0.4443	0.0233	0.0039	0.0342	0.0264	0.9019	4
4. 중앙정부 첨단 산업 인력양성 사업 을 활용한 지역인재 mismatch 해소	0.0387	0.0184	0.0019	0.3588	0.4393	0.0261	0.0033	0.0288	0.0237	0.9389	1
5.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충격 흡수	0.0434	0.019	0.0018	0.3437	0.4797	0.0256	0.0038	0.0311	0.0248	0.9729	7

6. 여성·신중년 고용 기반을 활용하여 고령화 및 인구 유출 위협에 대응	0.0352	0.0207	0.0015	0.2833	0.4797	0.023	0.0035	0.0298	0.0251	0.9018	2
7. 영세 자영업 중심의 산업 구조 취약성을 방어하기 위한 민생 안정 및 생계 지원 강화	0.0421	0.0199	0.0018	0.3324	0.4696	0.0253	0.0036	0.0311	0.0256	0.9515	6
8. 고령화 및 청년 유출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재취업 지원 강화	0.0412	0.0199	0.0017	0.3097	0.4241	0.0253	0.0034	0.0308	0.0251	0.8812	8

주: 기술성 등 최종가중치 설정 후 순위.

(2) 위험도-기대효과(Risk-Return) 매트릭스

- 위험도-기대효과 매트릭스 분석에서 중점추진분야(Low Risk-High Return) 제외
- 다만 전략적 추진분야(High Risk-High Return)에 1. 지식산업(미래산업기반), 4. 첨단산업, 6. 여성신중년, 3. 복지형+성장형 산업이, 전략적 추진분야(Low Risk-Low Return)에 5. 경제자유구역, 2. 청년 스타트업, 7. 영세 자영업, 8. 재취업 지원 포함
- 회피분야(High Risk-Low Return)에 모든 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결과
-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고양특례시에서 High Risk 측면에서 전략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Low Risk 측면에서 전략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 즉 제시된 모든 산업을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책을 먼저 고려하되, 정책적·재정적 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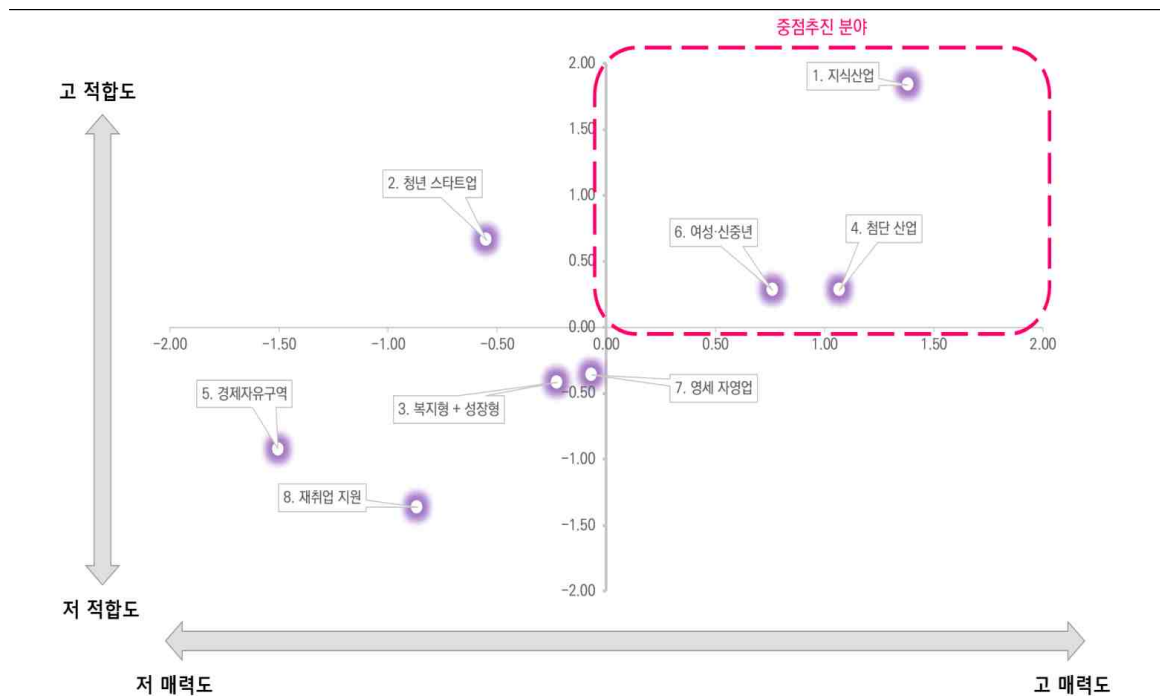
그림 5-7 | 위험도-기대효과 매트릭스 결과



(3) 매력도-적합도 매트릭스

-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 전략은 정책 매력도와 고양특례시 여건 적합도 모두에서 높은 수준
- 반면, 재취업 지원 전략은 적합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어, 성장 중심 일자리 전략으로서의 제한적 효과
- 이는 재취업 정책이 단독 성장전략보다 보완적·안정화 전략으로 활용될 필요성 시사

그림 5-8 | 매력도-적합도 매트릭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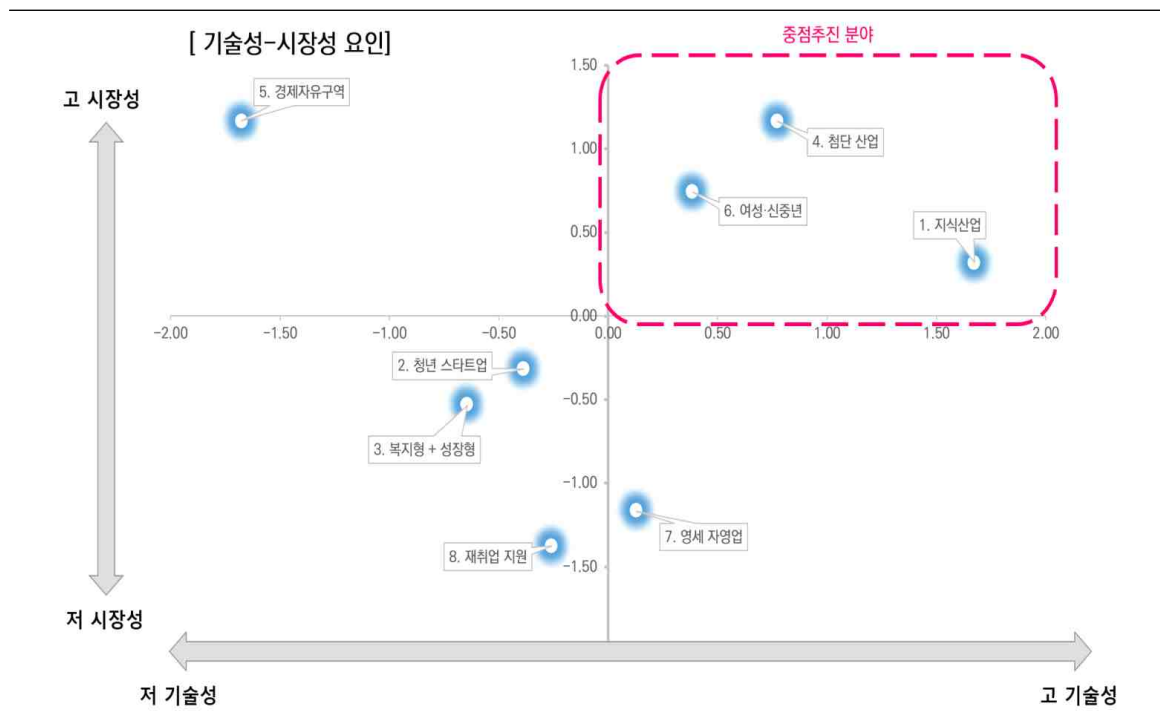


(4) 시급성-중요성 매트릭스

□ 기술성-시장성 요인

-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 전략은 높은 기술적 적합성과 함께 높은 시장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재취업 지원 전략은 시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성장형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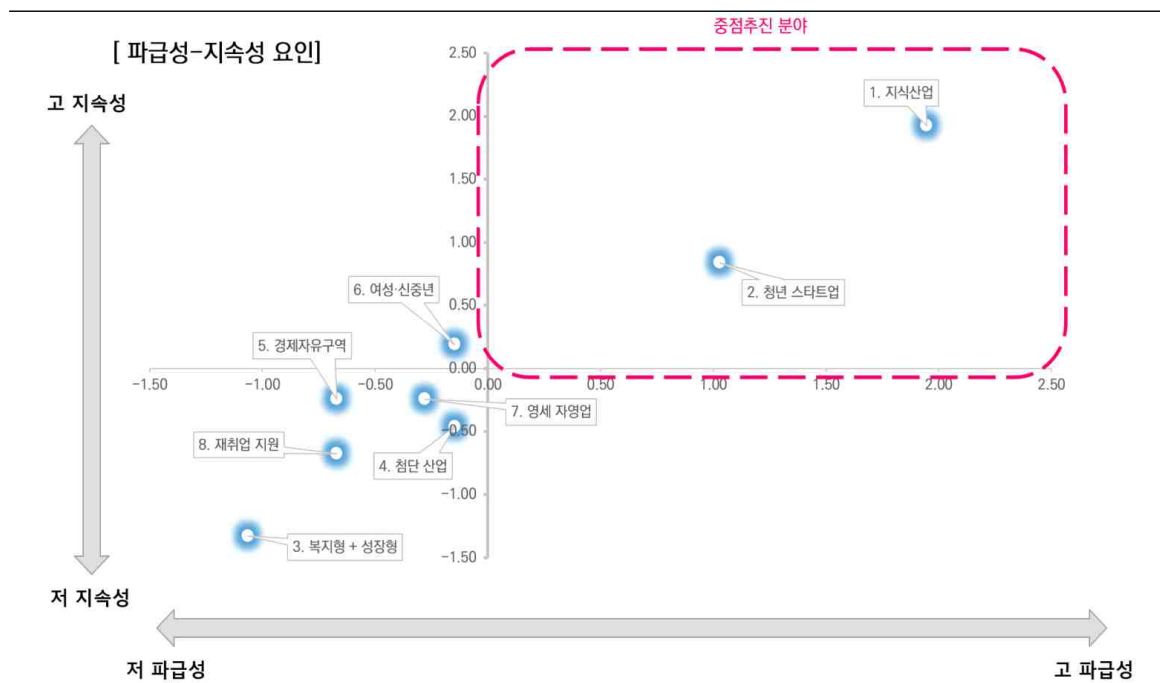
그림 5-9 | 시급성-시장성 매트릭스 결과(기술성-시장성 요인)



□ 파급성-지속성 요인

- 미래산업 전략은 고용 파급력과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
- 청년 스타트업 지원 전략은 두 번째로 높은 파급성과 지속성을 나타내며, 중장기 성장전략으로서 가능성 확인
- 반면, 첨단산업 전략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낮게 평가되어, 장기 관점에서는 제도적 보완과 연계 정책 요구

그림 5-10 | 시급성-시장성 매트릭스 결과(파급성-지속성 요인)



(5) 종합 시사점

- 제시된 산업 모두 고양특례시에서 향후 정책으로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High Risk-Low Return, 회피분야에 포함된 산업이 없음), 고양특례시의 예산 및 인력, 현 인구수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정책을 수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
- 그러므로 고양특례시의 핵심 성장전략은 미래산업 중심으로 설정하되, 첨단산업은 단기 성과 중심의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청년 스타트업 지원은 중장기 지속성을 보완하는 축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5) 전문가의 일자리 전략 선정

□ 종합순위 상위 전략의 특징

- 1순위: 미래산업 기반의 자족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 매력도-적합도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Risk-Return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높아 고양특례시의 중장기 핵심 성장전략으로 도출
- 2순위: 중앙정부 첨단 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활용한 지역 인재 미스매치 해소
 - Line-up 모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이 높게 평가
- 3순위: 여성·신중년 고용 기반을 활용한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대응 전략
 - 인구 구조 특성과의 적합성이 높아, 고양특례시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적·지속형 일자리 전략으로 평가

□ 중위권 전략에 대한 해석

- 청년 대상 정부 스타트업 지원사업 연계 강화 전략은 성장 잠재력은 크나, Risk-Return 및 매력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보완적·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분류
-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 클러스터 조성 전략은 Risk-Return 상 기대효과는 매우 높으나, 매력도-적합도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존재하여 선별적·집중 투자 전략 요구

□ 하위권 전략의 시사점

- 복지·재취업 중심 전략과 영세 자영업 보호 전략은 공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성장형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해당 전략들은 핵심 성장 전략보다는 보완적 안전망 정책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종합 시사점

-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정책은 미래산업 기반 성장 전략(1·2순위)을 최우선 축으로 설정하고, 여성·신중년 중심 인구구조 대응 전략(3순위)을 결합한 이중 전략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
- 청년 스타트업 및 경제자유구역 전략은 단계적·선별적 추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복지·재취업 전략은 지역 고용 안전망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연계 추진할 필요 존재

표 5-4 | 전문가 설문 결과 순위

일자리 전략(안)	Line-up 모델	Risk-return	매력도-적합도	Score	종합순위
1. 미래산업 기반의 자족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3	2	1	6	1
2. 청년 대상 정부 스타트업 지원사업 연계 강화	5	3	4	12	4
3. '복지형+성장형 이중축모델' 정책 기조 재정비	4	7	6	17	7
4. 중앙정부 첨단 산업인력양성 사업을 활용한 지역인재 미스매치 해소	1	5	2	8	2
5.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충격 흡수	7	1	8	16	6
6. 여성·신중년 고용 기반을 활용하여 고령화 및 인구 유출 위협에 대응	2	6	3	11	3
7. 영세 자영업 중심의 산업 구조 취약성을 방어하기 위한 민생안정 및 생계 지원 강화	6	4	5	15	5
8. 고령화 및 청년 유출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재취업 지원 강화	8	8	7	23	8

2. 대표기업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 고양특례시 관내 기업의 고용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
- 총 19개 기업이 온라인 설문 참여
 - 대표기업의 경우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상공회의소를 통해 니즈 파악
- 주요 응답 기업의 특성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중심
 - 업력: 3년 미만의 벤처기업·스타트업 높은 비중
 - 규모: 종사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 차지

2) 설문조사 결과

(1) 고용 현황 및 채용 특성

- 채용 방식
 - 대부분 수시채용 형태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며, 채용 시기는 주로 1~2분기에 집중
- 채용 수요 직군
 - 1순위: 개발직(연구직, SW·IT 등 공학·기술 기반 직무)
 - 2순위: 서비스직(영업, 판매, 운전, 고객응대 등)
- 신규 채용 여건
 - 신규 직원 평균 연봉은 2,500만 원~3,500만 원 수준
 - 채용 시 주요 고려 요소
 - 1순위: 관련 업계 경험 및 경력
 - 2순위: 직무 관련 기본 지식
 - 3순위: 팀워크 및 대인관계 역량
 - 기업들은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며, 직무 적합성과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뚜렷

(2) 일자리·기업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인식

□ 정책 인지도

- 고양특례시 일자리·기업지원 정책 인지도는 평균 2.56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달
- 정책 정보는 주로 정부·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인지되며, SNS·미디어 등 대중적 채널 노출은 매우 제한

□ 정책 관심도 및 체감 효과

- 정책 관심도는 평균 3.99점으로 높은 수준
- 정책의 실제 도움 정도는 평균 4.60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높으나, 정책 인지도는 낮은 구조적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정보 전달 방식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아래 표는 숫자가 낮을수록 낮은 인지도 또는 낮은 관심정도 의미
 - 반전된 색상이 직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 비해 높은 관심

표 5-5 | 인지도-관심정도 기업인 설문 결과

인지도	기업인 번호																			평균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알선, 구직자 취업연계, 맞춤형 인력 채용 등에 관한 정책	1	4	3	3	1	1	3	4	4	3	4	1	4	3	3	4	1	1	1	2.58
2) 신규 직원 채용 후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관한 정책	1	5	3	3	1	1	3	4	3	3	4	3	4	3	3	3	1	1	1	2.63
3)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접근성, 물리적 환경 개선(체육시설, 공원 등))	1	4	3	3	1	1	3	2	3	3	4	1	4	4	3	3	1	1	1	2.42
4) 재직중인 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정책(복지 처우 개선, 직원 교육 지원 등)	1	5	3	3	1	1	3	4	4	3	3	1	3	4	3	3	1	3	1	2.63
5)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투자유치수출상담, 시장 진출 등)	1	4	4	3	1	1	3	4	4	3	3	3	3	1	3	3	2	1	1	2.53
관심정도	기업인 번호																			평균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알선, 구직자 취업연계, 맞춤형 인력 채용 등에 관한 정책	5	4	4	3	5	5	3	4	5	4	4	2	4	5	3	4	4	5	4	4.05
2) 신규 직원 채용 후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고용유지 지원금	5	4	3	3	5	5	3	4	5	4	4	2	4	5	3	4	4	5	5	4.05

등에 관한 정책																				
3)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 (접근성, 물리적 환경 개선(체육시설, 공원 등)	5	4	4	3	5	5	3	2	5	3	4	1	4	5	3	4	4	5	4	3.84
4) 재직중인 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정책(복지 처우 개선, 직원 교육 지원 등)	5	4	3	3	5	5	3	4	5	3	4	3	4	5	3	4	5	5	4	4.05
5)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투자유치수출상담, 시장 진출 등)	5	4	4	3	5	5	3	4	5	3	4	4	4	1	3	4	5	5	4	3.95

(3) 기업의 정책 니즈 분석

□ 정책 중요도 인식

○ 1군(매우 중요)

- 채용기업 지원(고용유지 지원금, 4대보험 부담 완화)
- 스타트업·벤처 성장지원(액셀러레이팅, 투자 연계 등)
- 기업 입주·근무 환경 개선(공용공간, 복지시설, 접근성 개선 등)

○ 2군(보통 이상)

-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온·오프라인, 제품·서비스 홍보)
- 기업의 경영·기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재직자 복리후생 향상(복지·건강관리 등) 지원

→ 기업들은 단기적 지원보다 성장과 고용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 정책 참여 의향

○ 참여 의향이 높은 정책

- 기업 입주·근무 환경 개선(공용공간, 복지시설, 접근성 개선 등)
- 스타트업·벤처기업 성장지원(액셀러레이팅, 투자 연계 등)
- 채용기업 지원(고용유지 지원금·4대보험 부담 완화 등) 확대

○ 보완적 참여 정책

- 직무 기반 우수 인재 매칭 및 채용 연계 지원
- 기업의 경영·기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온·오프라인, 제품·서비스 홍보)

→ 기업들은 체감 효과가 즉각적이고 성장 단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기업 참여 의향 존재

→ 다만, 항목별로 '필요는 높으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과 '참여의향이 필요 수준을 상회하는 정책'이 구분되어 정책 설계 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표 5-6 | 기업인 정책니즈(needs) 조사

문 항	필요한 수준	참여의향 수준
1) 직무 기반 우수 인재 매칭 및 채용 연계 지원	3.263	3.526
2) 청년·신규 인력 대상 직무교육·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3.211	3.211
3) 채용기업 지원(고용유지 지원금·4대보험 부담 완화 등) 확대	4.474	4.053
4) 신규 직원 직무적응(OJT) 및 현장맞춤형 컨설팅 지원	3.000	2.947
5) 재직자 기초/실무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3.000	3.105
6) 재직자 복리후생 향상(복지·건강관리 등) 지원	3.737	3.263
7) 기업의 경영·기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3.474	3.474
8)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온·오프라인, 제품·서비스 홍보)	3.684	3.947
9) 기업 입주·근무 환경 개선(공용공간, 복지시설, 접근성 개선 등)	3.842	4.316
10) 스타트업·벤처기업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투자 연계 등)	4.316	4.368

3) 종합 시사점

□ 성장·고용 중심의 스타트업 맞춤형 일자리 전략 강화 필요

- 업력 3년 미만, 10인 이하 벤처·스타트업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성장 단계별·고용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요구

□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혁신이 성과의 핵심 변수

- 정책에 대한 관심과 체감 효과는 높으나 인지도는 낮아, 홈페이지 중심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SNS·미디어·기업 접점 중심의 적극적 홍보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존재

□ ‘체감형 정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 근무환경 개선과 성장지원 정책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 홍보·채용·컨설팅·인재 매칭 정책은 이를 보완하는 연계형 정책군으로 단계적 설계 필요

□ 성장 단계별 선택과 집중형 포트폴리오로 재구성 필요

- 향후 고양특례시의 기업지원·일자리 정책은 성장 단계별 선택과 집중형 포트폴리오로 재구성이 필요한데 지역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핵심 조건

제2절 SWOT 분석 및 전략 과제 도출

1. PEST 요인 분석

- 거시 환경 요인 분석을 통한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의 기회·위협 요인 도출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을 위해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요인을 중심으로 한 PEST 분석 실시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 기조, 지역경제 구조, 인구·사회 변화, 기술·산업 환경 등 거시적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전략 수립 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

표 5-7 | PEST 분석(거시적 환경 요인)

구분	주요 내용	기회 or 위협
P (정치)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강화	기회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ICT/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	기회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의 복지·공동체 중심 생활 밀착형 기조	위협
E (경제)	고물가 및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둔화 및 고용 상황 악화	위협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생태계	위협
	낮은 구인 배율	위협
S (사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및 여성/중장년 인구 비중 높음	기회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및 고용 지표 악화	위협
T (기술)	도시 기반 첨단 산업 거점화 시도	기회
	디지털/기술 분야 정책 노출 부족	위협

1) 정치적 요인(Political)

- 중앙정부·경기도의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에 따른 기회 요인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K-Digital, 첨단산업대학원,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산업 인재양성과 혁신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 이는 고양특례시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수 있는 외부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ICT·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ICT 융복합 및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 추진
 -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자족 능력 강화 도모
- 복지·공동체 중심 정책 기조에 따른 성장형 일자리 노출 한계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포용과 복지 연계 중심의 생활 밀착형 기조가 강하게 형성
 - 이로 인해 고용 창출이 경제 성장보다는 복지 연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존재하며, 청년 중심의 혁신·성장형 정책 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정책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

2) 경제적 요인(Economic)

- 고물가·경기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와 산업 서비스화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
 - 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민생경제 둔화와 고용 상황 악화가 지역 차원에서도 지속
- 소규모 자영업 중심 산업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
 - 고양특례시는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 전통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형성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약 3명 수준으로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과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 존재
- 낮은 구인 배율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전체 구인배율은 0.35로, 경기도 평균(0.52) 및 서울시 평균(0.45) 대비 낮은 수준
 - 이는 지역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 대비 일자리 공급 부족, 산업 수요와 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구조적으로 심화 진행

3) 사회적 요인(Social)

- 고령화 심화와 여성·중장년 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기회 요인
 - 고양특례시는 2042년 기준 추계 노령화지수 412.7로 경기도 평균 대비 상위권에 해당하며, 중위연령이 높고 여성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구조
 - 이는 여성·신중년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통해 새로운 고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 청년 인구 유출과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위협 요인
 -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고용지표 전반이 악화되는 현상 지속
 -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활력 저하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청년층을 위한 성장형·혁신형 일자리 정책 강화의 필요성 부각

4)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 도시기반 첨단산업 거점화 시도에 따른 성장 기회
 -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고양 드론 앵커센터 등 미래산업 기반의 도시 개발과 산업연계 시도
 - 이는 첨단 기술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의 기반 가능
- 디지털·기술 분야 정책 노출 부족에 따른 구조적 한계
 - 뉴스 빅데이터 및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청년 창업, 스타트업, 디지털 고용 관련 정책 언급과 노출 부족
 - 이는 산업·스타트업·디지털 고용 분야에서 고양특례시의 정책 존재감이 낮음을 의미하며, 기술 기반 성장형 일자리 전략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

2. SWOT 분석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여건에 대한 내부 강점과 약점의 구조적 진단

- 앞선 PEST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내부 역량과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SWOT 분석 실시
- 도시기반, 인구·사업체 구조, 산업 생태계, 정책 기조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점과 약점 도출

표 5-8 | 내부 환경 분석(강점 및 약점)

구분	주요 내용	강점 or 약점
도시 기반 첨단 산업 거점화 시도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고양드론엔지니어링센터 등 미래산업 기반의 신성장 동력 일자리를 위한 도시 개발 및 산업 연계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ICT 융복합,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이 존재.	강점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인구 및 젊은 사업체 대표 비율	고양특례시의 남성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은 92.87%로 경기도 평균(70.10%) 대비 높으며, 사업체 대표 비율이 성남, 과천, 부천을 초과하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	강점
활발한 수도권 인구 교류 및 대규모 인구 규모	고양특례시는 서울시로부터의 전입 유입이 가장 많고 인접 파주시와의 교류도 활발함. 또한, 운영 점포수(49,809개)가 경기도 내 2위 수준이며, 2040년 예상 총인구 규모로 1,100,637명 예상.	강점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생태계	고양특례시 산업은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수 업종에 집중된 구조이며,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가 3명 수준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가짐.	약점
복지·공동체 중심의 정책 기조 및 혁신 정책 부재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은 주로 여성·복지·취약계층 중심의 생활밀착형·공동체 기반 정책에 집중되어 있음. 정책 트렌드 분석 결과, 청년 창업, 스타트업, 디지털 고용 관련 언급이 현저히 적음.	약점
낮은 구인 배율 및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	2024년 고양특례시 전체 구인 배율은 0.35로, 경기도(0.52)나 서울시(0.45)보다 낮으며, 이는 구직자 대비 일자리 공급 부족을 의미함. 특히 덕양구(0.28)와 일산서구(0.29)에서 큰 격차를 보임.	약점
빠른 고령화 추세 및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고양특례시는 2042년 기준 추계 노령화지수 412.7로 경기 평균 대비 상위권이며, 중위연령이 높게 추정됨(전체 53.7세, 여성 55.5세 수준). 동시에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약점

1) 강점(Strengths)

□ 도시기반 첨단산업 거점화 시도에 따른 성장 잠재력

-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고양드론앵커센터 등 미래산업 기반의 도시 개발과 산업연계 시도 진행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ICT 융복합,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이 존재하여, 신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정책적 기반 보유
- 이는 중장기적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적 강점 평가

□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인구 비중과 젊은 사업체 대표 구조

- 고양특례시 남성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은 92.87%로 경기도 평균(70.10%)을 크게 상회
- 사업체 대표의 연령 구조 또한 성남시, 과천시, 부천시를 초과하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
- 이는 여성·신중년·청년 창업과 고용 확장의 잠재적 기반이 풍부함 의미

□ 활발한 수도권 인구 교류와 대규모 인구 기반

- 고양특례시는 서울시로부터의 전입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이며, 인접한 파주시와의 인구·생활권 교류도 활발
- 운영 점포 수는 49,809개로 경기도 내 2위 수준이며, 2040년 예상 총인구는 약 110만 명 규모로 추정
- 이는 소비·서비스·생활형 일자리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인구 기반 제공

2) 약점(Weaknesses)

□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생태계

- 고양특례시 산업 구조는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수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
-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명 수준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형성
- 이는 외부 경제 충격에 취약하며, 고부가가치·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구조적 한계 존재

□ 복지·공동체 중심 정책 기조와 혁신형 정책 부재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은 여성·복지·취약계층 중심의 생활밀착형·공동체 기반 정책에 집중
- 정책 트렌드 및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청년 창업, 스타트업, 디지털 고용 관련 정책 언급은 현저히 낮은 수준
- 이는 성장형·혁신형 일자리 정책의 가시성과 실행력이 부족함 의미

□ 낮은 구인배율과 심화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전체 구인배율은 0.35로, 경기도 평균(0.52) 및 서울시 평균(0.45) 대비 낮은 수준
- 특히 덕양구(0.28)와 일산서구(0.29)에서 구인배율이 크게 낮아 지역 간 일자리 접근성 격차가 심화
- 이는 구직자 대비 일자리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시사

□ 빠른 고령화 추세와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 고양특례시는 2042년 기준 추계 노령화지수 412.7로 경기도 평균 대비 상위권에 해당
- 중위연령은 전체 53.7세, 여성 55.5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며, 동시에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 이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구조 불균형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3. PEST-SWOT분석 종합

□ PEST 분석과 SWOT 분석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시사점 도출

- 앞서 도출한 PEST 분석 결과와 내부 환경 분석(SWOT)을 통합하여,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도출
- 외부 환경의 기회·위협 요인과 내부 강점·약점을 교차 분석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전략 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

표 5-9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종합)

구분	내부 강점(S: Strengths)	내부 약점(W: Weaknesses)
외부 기회(O: Opportunities)	SO 전략: 성장 주도형 혁신 전략 (Maxi-Maxi Strategy)	WO 전략: 내부 역량 강화 전환 전략 (Mini-Maxi Strategy)
O1. 중앙/경기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S1. 도시 기반 첨단 산업 거점화 시도 (테크노밸리, 경자구역 추진 등)	W1.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생태계
O2. 청년 중심 혁신/성장 전략 강화 추세(정책 기조 전환)	S2.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사업체 대표 비율	W2. 복지 중심 정책 기조 및 혁신 정책 부재(청년/디지털 정책 노출 적음)
O3. 여성/취약계층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포용 정책 확대	S3. 활발한 수도권 인구 교류 및 대규모 인구 규모	W3. 낮은 구인 배율 및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종합 전략 및 시사점	S-O 전략: 첨단 인프라와 젊은 인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선도	W-O 전략: 외부 혁신 기회를 통한 산업 구조 혁신 및 정책 전환
	SO1. 지식산업 기반의 자족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S1+O1)	WO1. '성장형+복지형(보완) 이중축 모델'로 정책 기조 재정비 (W2+O2)
	SO2. 젊은 대표층 대상 정부 스타트업 지원 사업 연계 강화(S2+O1, O2)	WO2. 중앙정부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을 활용한 지역 인재 미스매치 해소 (W3+O1)
외부 위협(T: Threats)	ST 전략: 강점 활용 위협 회피 전략 (Maxi-Mini Strategy)	WT 전략: 취약점 최소화 방어 전략 (Mini-Mini Strategy)
T1. 고물가 및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둔화 및 고용 상황 악화	S1. 도시 기반 첨단 산업 거점화 시도	W1.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생태계
T2. 경제 양극화 및 산업 서비스화 심화(일자리 창출 여력 악화)	S3. 활발한 수도권 인구 교류 및 대규모 인구 규모	W4. 빠른 고령화 추세 및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T3. 지역 간 일자리 경쟁 심화	S2.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인구 및 젊은 사업체 대표 비율	W3. 낮은 구인 배율 및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종합 전략 및 시사점	S-T 전략: 대규모 인프라 및 광역 연계를 통한 경기 방어 및 자족 기능 확보	W-T 전략: 영세 사업체 및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구조적 위협 최소화
	ST1.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충격 흡수 (S1+T1)	WT1. 영세 자영업 중심의 산업 구조 (W1) 취약성을 방어하기 위한 민생 안정 및 생계 지원 강화
	ST2. 여성·신종년 고용 기반(S2)을 활용하여 고령화(W4) 및 인구 유출 위협에 대응(S2+T2)	WT2. 고령화(W4) 및 청년 유출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재취업 지원 강화

1) SO 전략: 성장 주도형 혁신 전략(Maxi-Maxi Strategy)

□ 외부 기회를 활용한 도시 기반 성장형 일자리 전략 강화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스타트업 집중 지원 정책(O1)과 고양특례시의 도시 기반 첨단 산업 거점화 시도(S1)를 결합하여, 미래산업 기반의 자족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가능
-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추진, ICT·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 요구

□ 젊은 사업체 대표층과 정부 혁신 정책의 연계 확대

-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사업체 대표 비율(S2)과 청년 중심 혁신·성장 전략 강화 추세(O2)를 연계한 정부 스타트업 지원사업 연동 강화 필요
-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성장형 일자리 창출 촉진 가능

2) WO 전략: 내부 역량 강화 전환 전략(Mini-Maxi Strategy)

□ 복지 중심 정책 구조에서 ‘복지형 + 성장형’ 이중축 모델로 전환

- 복지·공동체 중심 정책 기조 및 혁신 정책 부재(W2)라는 내부 약점을, 청년 중심 성장전략 강화(O2)라는 외부 기회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전환 필요
- 기존의 포용·복지형 일자리 정책은 유지하되, 청년·디지털·산업 연계형 정책 축을 병행 구축하는 전략적 재정비 필요

□ 외부 인재양성 정책을 활용한 지역 인력 미스매치 해소

- 낮은 구인배율과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W3)를 중앙정부의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정책(O1)과 연계 하여 해소 필요
-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채용 연계 모델을 통해 산업 수요와 인력 공급 간 괴리를 완화 가능

3) ST 전략: 강점 활용 위험 회피 전략(Maxi-Mini Strategy)

□ 첨단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경기 변동 대응력 강화

- 고물가 및 경기 부진에 따른 민생경제 둔화(T1)에 대응하여, 도시기반 첨단산업 거점화 시도(S1)를 활용한 경제 충격 흡수 전략 필요
-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회복 탄력성을 제고 가능

□ 여성·신중년 고용 기반을 활용한 인구 구조 리스크 대응

-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인구 및 젊은 사업체 대표 비율(S2)을 활용하여, 고령화 심화와 청년 인구 유출(T2) 대응 필요
- 여성·신중년 중심의 재취업, 경력 전환, 창업 연계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위협 완화

4) WT 전략: 취약점 최소화 방어 전략(Mini-Mini Strategy)

□ 영세 자영업 구조의 취약성 완화를 위한 민생 안정 전략

-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생태계(W1)는 경기 둔화 및 고용 악화(T1) 상황에서 구조적 위험 요인 작용
- 이에 따라 민생 안정, 생계 지원, 경영 회복 지원 등을 통한 단기적 방어 전략 병행 필요

□ 고령화·청년 유출에 대응하는 복지·재취업 안전망 강화

- 빠른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W4)은 지역경제와 노동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위험 요인
- 맞춤형 복지 정책과 재취업·전환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위험 완화 필요

4. SWOT 분석 기반 연계형 일자리 전략 체계

□ 현시점 유관 인프라 프로젝트와 일자리 전략의 구조적 연계 필요성

- 고양특례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방송영상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등 총 9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해당 프로젝트들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산업 파급력이 높아, 단일 사업 차원이 아닌 종합 일자리 전략과의 연계 필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ST-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 사업을 전략적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 체계화

1) S-O 전략: 첨단 인프라와 젊은 인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선도

□ 미래산업 기반 자족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 인프라(S1)와 중앙·경기 차원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O1)을 결합하여 자족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추진
-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 유치-인력 양성-채용 연계 구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청년·창업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 젊은 사업체 대표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S2)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청년 창업·스타트업 지원 강화
- 이를 통해 청년 인재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 W-O 전략: 복지 중심 정책 구조의 성장형 전환

□ '성장형+안정형' 이중축 정책 구조 재편

- 기존의 복지·공동체 중심 정책 기조(W2)를 유지하되, 청년 중심 혁신·성장 전략(O2)을 결합하여 정책 구조를 이중축 모델로 재정비 필요
- 첨단산업 및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복지형 일자리에서 성장형 일자리로의 단계적 전환 유도

□ 지역 인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 연계

- 낮은 구인배율과 일자리 미스매치(W3)를 중앙정부 첨단산업 인력 양성 정책(O1)과 연계하여 해소
- 인프라 입주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채용 프로그램 도입

3) S-T 전략: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한 경기 방어 및 자족 기능 확보

□ 첨단 클러스터 기반 경기 충격 완화 전략

- 고물가·경기 부진 등 외부 경제 위협(T1)에 대응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 클러스터(S1)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충격 흡수 기능 강화
- 광역 교통·산업 연계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자족성 제고

□ 여성·신중년 고용 기반을 활용한 인구 구조 리스크 대응

- 여성 및 신중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S2)을 활용하여, 고령화 및 인구 유출 위험(T2)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용 전략 추진

4) W-T 전략: 취약 구조에 대한 방어적 일자리 전략

□ 영세 자영업 및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안정화 전략

- 소규모 영세 자영업 중심 산업 구조(W1)와 경기 둔화(T1)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 및 생계 지원 중심의 방어 전략 병행
- 대곡역세권 개발, 관광·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생활형·서비스형 일자리 안전망 구축

□ 고령화·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복지·재취업 연계 강화

- 고령화 심화와 청년 유출(W4, T2)에 대응하여, 재취업·전환 교육과 복지 연계형 일자리 정책 강화

5) 추진과제 종합 및 정책적 함의

□ 6대 핵심 추진과제 도출

-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 창업 육성
- 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제 전환
-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 여성·신중년 고용 확대 및 인구 유입 촉진
-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기존 및 추진 인프라와 추진 일자리 전략과 연계

- SWOT분석에서 도출한 일자리 전략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SWOT 분석 기반 전략과 가장 높은 연계성

표 5-10 | SWOT 분석 기반 일자리 전략

유관 사업명		SO1	SO2	WO1	WO2	ST1	ST2	WT1	WT2	연계 전략수
1	경제자유구역	●			●	●				3
2	일산테크노밸리	●	●		●	●				4
3	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	●	●		●					3
4	고양방송영상밸리		●	●	●					3
5	고양영상문화단지			●			●		●	3
6	킨텍스제3전시장					●				1
7	대곡역세권개발			●			●	●		3
8	창릉천관광지						●	●	●	3
9	IP융합클러스터		●						●	2

제3절 미래 일자리 상황별/시나리오별 전망 분석

□ 6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한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 개요

- 앞서 도출한 6대 추진과제를 기준으로, 각 과제가 연관 업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추진과제별로 연계 가능한 업종을 매핑하고, 업종별 추진과제 할당 빈도를 통해 전략적 육성 필요 업종 도출
-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의 산업적 확장성과 정책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1. 추진과제별 연관 업종 파급 구조

□ 추진 과제 1: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 제조업, 정보통신업(ICT),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과 폭넓게 연계
- 인력 양성-산업 연계-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평가

□ 추진 과제 2: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 창업 육성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과의 높은 연계성
- 첨단 기술 기반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장형 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 추진 과제 3: 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계 전환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등 다수 업종에 파급효과
- 대규모 인프라 및 기업 유치 정책과 결합 시 고용 파급력 확대 가능

□ 추진 과제 4: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폐기물 처리업, 정보통신업 등 광범위한 업종과 연계
- 광역 교통·물류·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외연 확장과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추진 과제 5: 여성·신중년 고용 확대 및 인구 유입 촉진

-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등 생활·서비스형 업종과 밀접하게 연계
-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 전략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 추진 과제 6: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의 높은 연계성
- 단기적 고용안정과 사회적 포용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2. 업종별 추진과제 할당 분석 결과

□ 정보통신업(ICT)의 핵심 육성 업종으로서의 위상

- 6대 추진과제 전반과 연계된 정보통신업의 높은 파급 빈도
- 디지털 전환, 첨단 기술, 플랫폼 기반 산업 육성 측면에서 고양특례시 성장형 일자리 전략의 중심 업종으로 평가

□ 사업시설관리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전략적 중요성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역시 높은 추진과제 할당 빈도
- 이는 기업 유치, 창업 지원, 인재양성, 산업 고도화 등 대부분의 전략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반 업종
- 해당 업종은 직접 고용뿐 아니라,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중간재적 성격

□ 생활·서비스업의 보완적 고용 창출 역할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등은 여성·신중년 및 취약계층 고용과 밀접하게 연계
- 양질의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 내 고용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중요한 역할 수행

그림 5-11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 전략 및 추진과제 연계성

추진과제 종합 (6개)	연관 업종	업종 (19개)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결 강화	제조(3), ICT(10), 전문과학기술(13), 사업지원(14), 교육(16), 예술·여가(1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 창업 육성	ICT(10), 전문과학기술(13), 사업지원(14), 금융(11), 부동산(12), 제조(3)	
기업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계 전환	ICT(10), 전문과학기술(13), 사업지원(14), 교육(16), 공공행정(15), 도소매(7), 숙박음식(9), 예술·여가(18)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농업, 임업 및 어업(1), 광업(2), 운수창고(8), 제조(3), 건설(6), 전기·가스(4), 수도·폐기물(5), ICT(10)	
여성·신중년 고용확대 및 인구유출 감소	건설(6), 도소매(7), 숙박음식(9), 사업지원(14), 교육(16), 예술·여가(18)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공행정(15), 보건복지(17), 도소매(7), 숙박음식(9), 협회·단체(19), 건설(6)	

〈자료〉 연구진 작성.

3.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 6대 추진과제 파급효과에 따른 전망

- 변량회귀분석으로 추정된 회귀계수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종사자 1명이 증가하는 경제상황인 경우, 고양특례시 전체 고용은 약 10명 증가하는 현상 해석
- 이는 특정 업종의 고용 변화가 단순 국지적 변동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고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Employment Multiplier)가 존재함 의미
- 농업,임업 및 어업(jn1)• 광업(jn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jn4) • 금융 및 보험업(jn11) 네 업종의 경우 유의성이 낮아 파급효과 분석에서 제외
- 일자리 회귀계수가 높은 업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인프라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은 파급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
 - 단, 본 회귀계수는 분석에 활용된 승인통계 제약으로, 추가된 공변량이 많지 않아 해석에 유의 필요
 - 따라서, 전략과제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를 추정해 보는 것에 한정

표 5-11 | 6대 추진과제 파급효과에 따른 업종 전망

업 종	변수명	회귀계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jn5	0.07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jn15	0.0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n18	0.026
부동산업	jn12	0.0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jn19	0.020
교육 서비스업	jn16	0.017
정보통신업	jn10	0.0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n13	0.011
제조업	jn3	0.010
운수 및 창고업	jn8	0.009
숙박 및 음식점업	jn9	0.0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jn14	0.009
건설업	jn6	0.0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n17	0.004
도매 및 소매업	jn7	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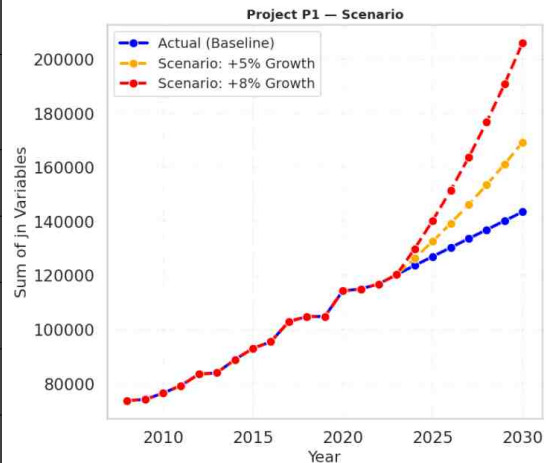
주: 회귀계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1) 추진과제 1: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결 강화

- 업종 종사 수의 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보수적(5%)에서 고무적(8%)까지 고용특례시 일자리 증가 효과 추정
- 특히, 청년 인재 양성에 있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고용 파급효과
- 청년 인재양성 정책은 성장형·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에 핵심적 역할 수행

표 5-12 | 추진과제 1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업 종	변수명	조정 회귀계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jn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jn1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n18	0.0022
부동산업	jn1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jn19	-
교육 서비스업	jn16	0.0055**
정보통신업	jn10	-0.00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n13	0.0055**
제조업	jn3	-0.0008
운수 및 창고업	jn8	-
숙박 및 음식점업	jn9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jn14	0.0031*
건설업	jn6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n17	-
도매 및 소매업	jn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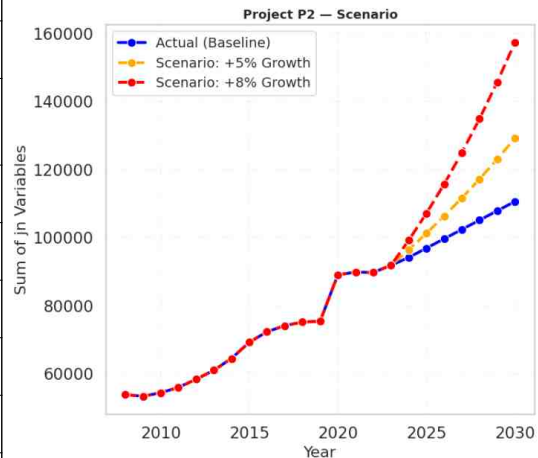
주: 1) 조정회귀계수는 추가검정을 통해 재추정한 회귀계수 값으로, 평균적으로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별 수치로 볼 수 있음
 2) *는 5%, **는 1% 이내 유의수준임을 나타냄

2) 추진과제 2: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 창업 육성

- 미래산업 및 혁신 창업 부문의 고용 확대 효과 뚜렷
- 혁신 창업과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특히 기술·창업 중심 산업의 집적은 고양특례시의 성장형 일자리 비중 확대를 전인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 가능

표 5-13 | 추진과제 2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업 종	변수명	조정 회귀계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jn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jn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n18	
부동산업	jn12	0.00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jn19	
교육 서비스업	jn16	
정보통신업	jn10	-0.00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n13	0.0018
제조업	jn3	-0.0004
운수 및 창고업	jn8	
숙박 및 음식점업	jn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jn14	0.0071**
건설업	jn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n17	
도매 및 소매업	jn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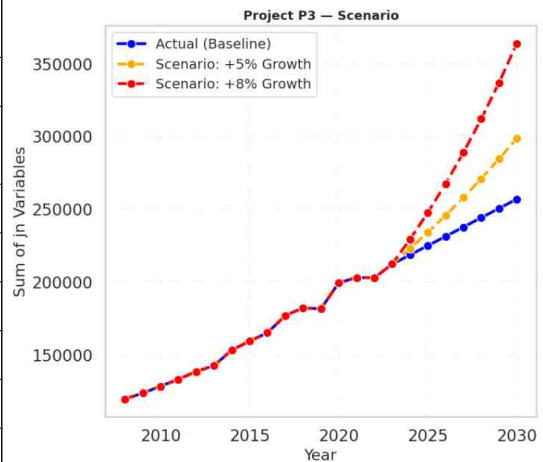
주: 1) 조정회귀계수는 추가검정을 통해 재추정한 회귀계수 값으로, 평균적으로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별 수치를 볼 수 있음
2) *는 5%, **는 1% 이내 유의수준임을 나타냄

3) 추진과제 3: 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계 전환

- 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전환의 가장 큰 고용 창출 효과
-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파급계수(0.0099)가 높아, 이는 산업정책 체계 전환에 있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업종
- 기업 유치 중심의 산업정책 전환은 단순 입주 확대를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축으로 한 고용 증폭 효과 유발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산업 전환의 핵심 매개 업종으로, 향후 고양특례시 성장형 일자리 전략에서 집중 육성 대상 산업으로 설정할 필요 존재
- 인프라·기업 유치 정책과 일자리 전략을 연계한 선별적 기업 유치 전략 요구

표 5-14 | 추진과제 3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업 종	변수명	조정 회귀계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jn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jn15	-0.007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n18	0.0009
부동산업	jn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jn19	
교육 서비스업	jn16	0.0037
정보통신업	jn10	-0.00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n13	0.0099**
제조업	jn3	
운수 및 창고업	jn8	
숙박 및 음식점업	jn9	0.004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jn14	0.0012
건설업	jn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n17	
도매 및 소매업	jn7	-0.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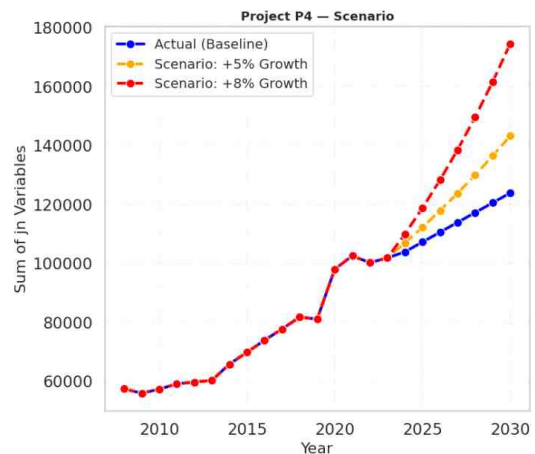
주: 1) 조정회귀계수는 추가검정을 통해 재추정한 회귀계수 값으로, 평균적으로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별 수치로 볼 수 있음
2) *는 5%, **는 1% 이내 유의수준임을 나타냄

4) 추진과제 4: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운수·창고업의 회귀계수 0.0122는 추진과제 중 가장 큰 파급효과
- 광역경제권 연계 전략을 통한 고양특례시의 물류·유통 기반 산업의 고용 확장형 핵심축 전환 효과
- 수도권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확장은 지역 단독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외연 확장형 일자리 전략으로 기능
- 향후 광역 연계 정책은 단순 접근성 개선을 넘어, 물류·제조 연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고용 창출 모델 설계 필요

표 5-15 | 추진과제 4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업 종	변수명	조정 회귀계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jn5	-0.02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jn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n18	
부동산업	jn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jn19	
교육 서비스업	jn16	
정보통신업	jn10	-0.005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n13	
제조업	jn3	0.0051**
운수 및 창고업	jn8	0.0122**
숙박 및 음식점업	jn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jn14	
건설업	jn6	-0.00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n17	
도매 및 소매업	jn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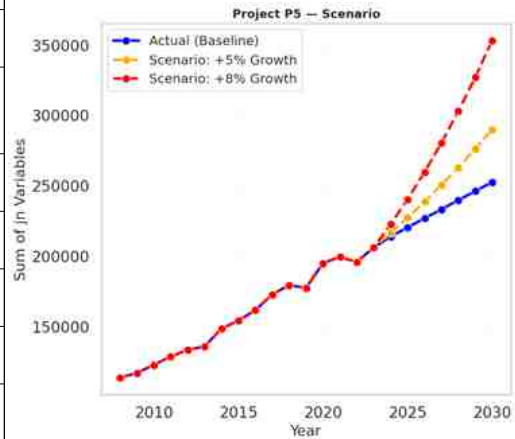
주: 1) 조정회귀계수는 추가검정을 통해 재추정한 회귀계수 값으로, 평균적으로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별 수치로 볼 수 있음
2) *는 5%, **는 1% 이내 유의수준임을 나타냄

5) 추진과제 5: 여성·신중년 고용 확대 및 인구 유입 촉진

-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높은 연관 효과가 나타나, 여성·신중년 고용 확대가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
- 여성·신중년 고용 확대는 단기적 고용 증가뿐 아니라 지역 서비스 산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
- 다만 해당 산업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재교육·재훈련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단순 일자리 공급을 넘어 직무 전환형 정책 설계 필요

표 5-16 | 추진과제 5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업 종	변수명	조정 회귀계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jn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jn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n18	-0.0133
부동산업	jn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jn19	
교육 서비스업	jn16	0.0044**
정보통신업	jn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n13	
제조업	jn3	
운수 및 창고업	jn8	
숙박 및 음식점업	jn9	0.005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jn14	0.0032
건설업	jn6	0.00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n17	
도매 및 소매업	jn7	-0.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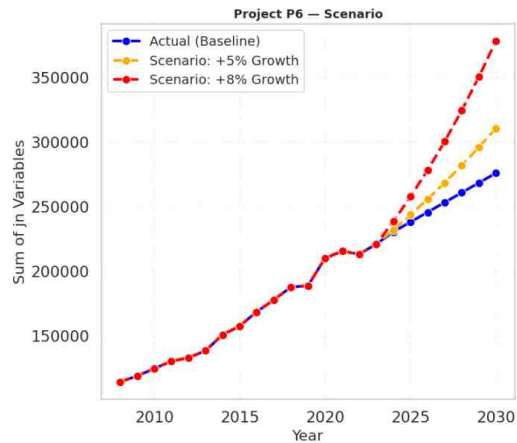
주: 1) 조정회귀계수는 추가검정을 통해 재추정한 회귀계수 값으로, 평균적으로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별 수치를 볼 수 있음
2) *는 5%, **는 1% 이내 유의수준임을 나타냄

6) 추진과제 6: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강한 양(+)의 연관 효과가 나타나, 취약계층 대상 공공·복지형 일자리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고용 증가로 연결
- 추진과제 6은 고용의 양적 확대보다는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해석
- 타 추진과제 대비 파급력은 제한적이나, 경기 변동기 및 고령화 심화 국면에서 고용 완충 장치 역할 수행
- 향후에는 복지·보건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단기 보호 중심에서 중장기 안정 고용으로의 전환 필요

표 5-17 | 추진과제 6의 파급효과에 따른 일자리 전망

업 종	변수명	조정 회귀계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jn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jn15	-0.00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n18	
부동산업	jn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jn19	-0.0005
교육 서비스업	jn16	
정보통신업	jn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n13	
제조업	jn3	
운수 및 창고업	jn8	
숙박 및 음식점업	jn9	0.000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jn14	
건설업	jn6	-0.00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n17	0.0047**
도매 및 소매업	jn7	



주: 1) 조정회귀계수는 추가검정을 통해 재추정한 회귀계수 값으로, 평균적으로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별 수치를 볼 수 있음
2) *는 5%, **는 1% 이내 유의수준임을 나타냄

7) 업종별 시나리오 분석과 통합관점

- 기본 성장은 고양특례시 일자리(취업자 수) 성장세에 따른 예상 자연 증가분이며, 6대 추진과제에 따른 업종별 동일한 연간 성장률을 적용했을 때 분석
- 아래 표는 개별 사업을 고려하기 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19개 업종에 대한 연간 동일한 성장을 고려한 바 현실적인 한계점 존재
- 전 산업 동일 성장을 가정한 바, 향후 추진과제별 파급효과에 따른 세부 일자리 전망 추정 을 통해 고도화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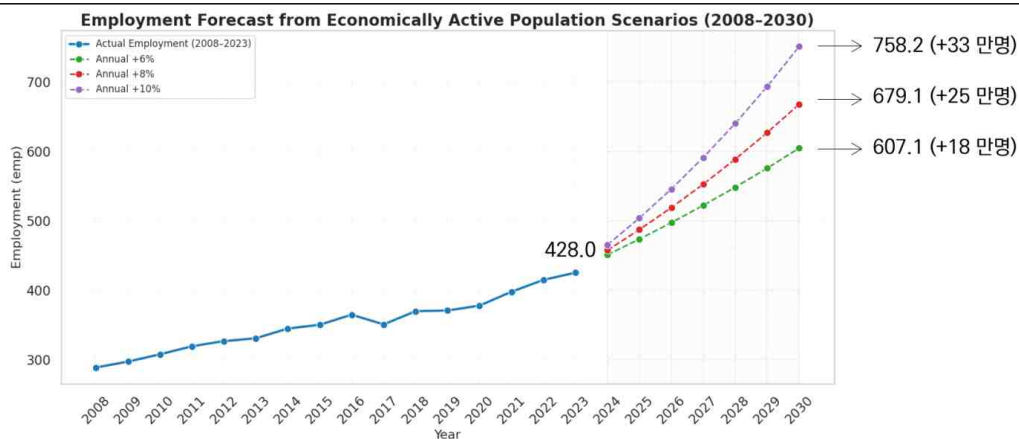
표 5-18 | 일자리 창출 통합 시나리오

(단위: 명)

기준년도	기준선	기본성장	보통성장	고성장	초고성장
	연간 2% 성장시	연간 4%성장시	연간 6%성장시	연간 8%성장시	연간 10%성장시
2024	428,000	428,000	428,000	428,000	428,000
2025	436,560	445,120	453,680	462,240	470,800
2026	445,291	462,925	480,901	499,219	517,880
2027	454,197	481,442	509,755	539,157	569,668
2028	463,281	500,699	540,340	582,289	626,635
2029	472,547	520,727	572,761	628,872	689,298
2030	481,998	541,557	607,126	679,182	758,228
예상 증가 일자리 수(근무기준 취업자 수)	53,998	113,557	179,126	251,182	330,228

주: 예상 증가 일자리 수의 경우 2024년 대비 2030년에 증가한 일자리 수를 구함

그림 5-12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통합 시나리오



〈자료〉 연구진 작성.

8) 종합 분석 결과와 시사점

- 고양특례시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일 사업이 아닌 산업·인구·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전략 추진 요구
- 업종별 분석 결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고양특례시 전체 일자리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산업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추진과제 1(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결)과 추진과제 3(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정책 체계 전환)이 결합될 경우, 고용 파급효과 극대화 예상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신중년·취약계층 정책과의 결합보다 청년 정책과 연계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정책 대상 집단에 따라 고용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시사
 - 향후 업종 중심 전략뿐 아니라 ‘업종 × 대상’ 결합형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 한편, 본 정책 성과 분석은 계량경제학적 추정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제도적·현장적 변수에 따라 성과 차이 존재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관 전문가 설문조사,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우선순위 검증 등을 병행하여 전략의 현실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 제시

제6장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비전 및 로드맵

제1절 일자리 창출 비전 및 목표 설정

제2절 일자리 창출 로드맵

제3절 핵심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

제1절 일자리 창출 비전 및 목표 설정

1.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비전과 전략

1) 일자리 창출 비전

- 고양특례시는 미래 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비전 설정
 - 미래산업·디지털서비스·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및 고임금 일자리로의 구조적 전환 촉진
 - 이를 통해 단기적 고용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질을 함께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다만, 현재 고양특례시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정책대상에 대한 포용적 정책 기조를 병행할 필요성 존재
 - 고양특례시는 여성 및 중장년 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로, 여성·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인구 구조 전환 전략을 병행 추진 필요
 - 또한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생산성,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 일자리 정책은 '성장동력형 청년·혁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되, '복지형·포용형 일자리 정책'을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 전략을 기본 기조로 설정

미래를 심다, 일자리를 고양시키다.

Plant the Future, Grow the Jobs, GOYANG!

미래산업·디지털서비스·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청년 창업 및 고임금

일자리로의 전환 촉진 필요

다만, 현재 고양시 인구구조,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정책대상에 대한 포용적 정책실행 필요

- ✓ 고양특례시는 여성·중장년 비중이 높고 고령화가 빠른 도시
→ 여성·신중년 맞춤형 일자리와 인구구조 전환 전략을 병행 필요
- ✓ 산업은 도·소매, 운수, 숙박 등, 소규모 사업체가 압도적인 구조
→ 생산성·임금·고용안정이 취약

시정 기조는 '성장동력형' 청년·혁신 일자리로, 보완적으로 '복지형 포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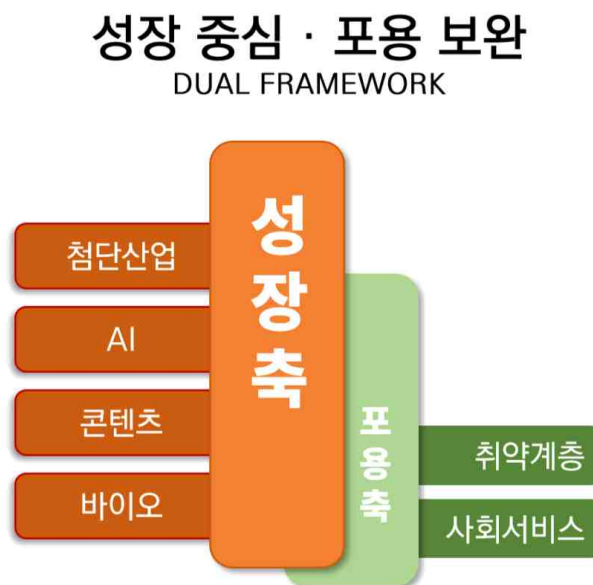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2) 일자리 전략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전반적 전략

- 고양특례시 일자리 전략은 '성장의 주도축' 위에 '포용'이 지탱·보완하는 이중 프레임워크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장과 포용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접근을 넘어, 성장 중심-포용 보완형 구조로의 전략적 진화 의미
- 성장의 필연성
 - 고양특례시는 소상공·저생산성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가처분소득과 고용의 질 제고에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첨단·지식기반 산업 중심으로의 전환 불가피
 - 성남 등 인접 경쟁도시들이 청년·혁신 중심의 성장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 특례시는 단순한 '복지+성장 병렬형'이 아닌 성장 주도형 전략으로의 명확한 전환 요구
 - 특히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미래산업 인력양성·고용혁신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제도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포용의 보완성
 - 여성·중장년 비중이 높은 고양특례시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재진입·전환형 고용정책 없이는 고용률 및 정주인구 유지에 한계 존재
 - 포용 정책은 성장의 대안이 아니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성장 산업으로의 인력 전환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재편입될 수 있도록 기능 필요

그림 6-2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전반적 전략



〈자료〉 연구진 작성.

□ 핵심 추진 전략

○ 성장 중심의 핵심 추진 전략 방향 설정

- PEST·SWOT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복지·보완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성장 주도형 일자리 전략을 중심축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 방향 설정
- 분석 결과, 고양특례시는 첨단·미래산업 인프라 잠재력, 수도권 핵심 입지, 젊은 사업체 대표 비중이라는 강점을 보유한 반면, 영세 자영업 중심 산업구조, 청년 유출, 낮은 구인 배율이라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 주도 + 포용 보완’의 이중 프레임 하에서, 성장 파급력이 큰 전략을 우선 선정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

○ SWOT 기반 핵심 전략 도출

- SWOT 종합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전략군이 중점 전략으로 도출
 - 첨단·미래산업 기반 자족형 산업 생태계 선도 전략(SO)
 - 외부 혁신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전략(WO)
 - 광역 인프라 연계를 통한 경기 방어 및 자족 기능 강화 전략(ST)
 -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구조적 위험 완화 전략(WT)
- 고용 규모 확대, 산업 파급력, 장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 효과가 큰 성장 중심 전략(SO·WO·ST)을 핵심추진 전략으로 우선 선정하고, WT 전략은 이를 보완하는 포용 전략으로 재구성

그림 6-3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핵심 추진 전략

	구 분	전략명	핵심 내용	비전 연계 논리
성장	1. 첨단 인프라·청년 인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선도	SO1·SO2 「미래산업 성장축 구축 전략」	미래산업·AI·모빌리티 중심 자족형 산업생태계 구축, 청년창업·스타트업 연계	청년층 유입과 산업 전환의 성장축 확보
성장	2. 외부 혁신기회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및 정책전환	WO1·WO2 「산업혁신·정책전환 전략」	복지형+성장형 이중축으로 정책기조 재정비, 중앙정부 인력양성사업과 연계	국가정책·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혁신 촉진
성장	3. 대규모 인프라 및 광역 연계를 통한 경기방어·자족기능 확보	ST1·ST2 「광역연계 자족도시 강화 전략」	경제자유구역·클러스터 조성, 여성·신종년 고용을 통한 인구 유출 대응	외부 충격 대비·내부 고용 흡수력 강화
포용	4. 영세사업체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구조적 위험 최소화	WT1·WT2 「포용복지 고용안정 전략」	민생안정·재취업·복지형 일자리 강화, 고령화·청년유출 대응	복지형 안정망으로 지역 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자료〉 연구진 작성.

2. 주요 추진 과제

□ 주요 추진 과제의 특징

- 상기 전략군을 구체화하여 도출한 6대 추진과제는 ①~④를 성장 중심 축, ⑤~⑥을 포용 보완 축으로 구성
- 이를 통해 성장 전략은 고용 규모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포용 전략은 노동시장 이탈과 사회적 리스크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
- 이러한 이중 구조를 통해 고양특례시는 ‘성장 주도형 일자리 도시’로의 전환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 달성 목표

그림 6-4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주요 추진 과제

6대 추진과제		세부 추진 과제 (안)
성장	1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결 강화 - G-Youth Campus 운영 - 지역문제 해결형 중심 청년 리빙랩 창업 지원 - 취업-주거-문화 통합 지원을 통한 청년 정착 패스포트 제도 도입
	2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창업 육성 - AI+ 콘텐츠 융합 허브 조성 - G-Knowledge Valley 구축 - 지역산업 AX 지원센터 설립 - 의료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과 고도화 1인 창작자 및 근로자 고용 지원 체계 마련
성장	3	기업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계 전환 - 고양형 펀드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 고용혁신본부 설치 -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 절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지원
성장	4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 G-Metro 산업벨트 조성 - 경기북부 혁신경제권 협의체 구성
포용	5	여성·신종년 고용확대 및 인구유출 감소 - Re:Work 프로그램 추진 - 여성 리스킬링 아카데미 운영 - 여성 창업 플랫폼 설치 - 세대 융합 창업 지원 - 한부모·양육책임자 재도약 일자리 연계
포용	6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고양형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 데이터 센터 설치 - 사회적 경제·돌봄 일자리 확대 - 고령자 일·쉼 복합센터 설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일자리 창출 로드맵

□ 고양특례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로드맵 계획

- ‘미래를 심다, 일자리를 고양시키다.’라는 비전 아래에 4대 전략과 6대 추진과제를 [그림 6-5]와 같이 수립

그림 6-5 | 고양특례시 일자리 창출 로드맵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핵심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

1. 청년 인재양성 기반 지역 일자리 연결 강화

1) G-Youth Campus 운영(관내 대학 연계 취업 트랙 운영)

□ 주요 내용

- 관내 대학(한국항공대, 동국대, 중부대, 농협대 등)과 연계하여 전공 기반 맞춤형 취업 트랙을 운영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청년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AI·콘텐츠·스마트물류·헬스케어 등 고양특례시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수요 기반 직무 교육과정 및 실무형 커리큘럼 공동 개발
- 기업 참여형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현장실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인턴십 등을 채용과 연계한 '채용 연계형 교육' 체계 구축
- 대학 내 창업 지원 기능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진입을 위한 창업 트랙 운영 및 멘토링·투자 연계 지원 강화

□ 기대 효과

- 지역대학 졸업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취업-정착-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고용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률 제고
- 현장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한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청년 창업 및 커리어 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일산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초기 인력 수급 기반 확보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2) 지역문제 해결형 중심 청년 리빙랩 창업 지원

□ 주요 내용

- 고양특례시 내 교통, 환경, 도시관리 등 생활·도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혁신형 창업 지원 체계 구축
- 시민 참여 기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청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 체계 마련
- 아이디어 공모-프로토타입 제작-현장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
- 공공시설, 공공데이터, 도시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및 초기 시장 형성 지원

- 창업보육센터,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멘토링, 투자 연계, 기술 지원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강화

□ 기대 효과

- 지역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 청년 주도의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기반 강화
-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실증 기반 창업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창업 성장 구조 구축
- 지역 내 창업-실증-사업화-재투자로 이어지는 자생적·순환형 창업 생태계 형성

3) 취업-주거-문화 통합 지원을 통한 청년 정착 패스포트 제도 도입

□ 주요 내용

- 고양특례시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바우처 및 생활지원 패키지를 도입하여 초기 정착 부담 완화
 - 관내 공공기관 및 금융권 협약을 통해 청년특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 산업 거점 인근 공실을 활용하여 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략산업 종사자 대상 입주 가점 부여
- 교통·문화시설과 연계한 ‘일-집-여가’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통과 문화시설 연계
- 지역 문화·공공시설(킨텍스, 일산문화공원 등)을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기대 효과

- 청년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문화·일자리가 결합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제고
- 주거 안정성 제공을 통해 관내 입주 기업의 인력난 완화
- 직주근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입 촉진

2.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창업 육성

1) AI+콘텐츠 융합허브 조성

□ 주요 내용

- 고양방송영상밸리, 영상문화단지 등과 연계하여 AI 기반 콘텐츠 산업의 제작·실증·유통을 아우르는 융합 거점 조성
- AI 영상 제작,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디지털 IP 개발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용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 및 멀티모달 데이터 허브 조성
- OTT 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수익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 기대 효과

- 콘텐츠 IP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형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보
- AI·영상·디지털콘텐츠 융합 직무 확대를 통한 청년 중심의 전문 일자리 창출
-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파급효과 증대
- 분야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셋 구축을 통해 AI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2) G-Knowledge Valley 구축(테크노밸리-킨텍스-대곡역세권 연결형 클러스터)

□ 주요 내용

- 일산테크노밸리(생산·R&D), 킨텍스(전시·비즈니스), 대곡역세권(주거·교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AI, 디지털 콘텐츠, MICE-Tech 등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산업벨트 구축
- 거점별 기능 분담(연구개발-비즈니스-주거·정주)을 기반으로 산업·생활 융합형 복합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 및 산업 집적을 통한 자족형 산업 생태계 조성
- 클러스터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 투자 연계, 산학연 협력 및 산업 간 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
- 클러스터 내 공유형 연산자원(GPU-as-a-Service)을 구축하여 입주 기업이 고가의 AI 연산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별 미세 조정(Fine-tuning)용 공동

데이터 세트 구축 및 개방

□ 기대 효과

- 앵커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집적 효과 창출 및 지역 내 고급 일자리 확대
- GPU 등 고비용 인프라 부담 완화를 통해 AI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성장 촉진
-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구조 형성을 통한 인재 정착 및 인구 유입 촉진
- 기업 간 협업 및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 SME가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3) 지역산업 AX 지원센터(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립

□ 주요 내용

-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데이터 기반 경영혁신, AI·빅데이터·IoT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과 기술 도입 컨설팅 추진
- SaaS형 AI 솔루션을 활용한 생산·물류·경영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 지원
- 콘텐츠, MICE, 서비스 산업 등 고양특례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AX(AI Transformation) 지원 체계 구축
-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전환 역량 인증제 도입을 통해 기업 내 인적 역량 고도화
-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역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 기대 효과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실질적 경영 성과 창출
-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4) 의료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과 고도화

□ 주요 내용

- 고양특례시는 6개 대형병원과 1개 대학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높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의료·돌봄·헬스케어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 생태계 구축
-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 기능을 넘어 재활·요양·방문건강관리 등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연계 산업 육성 필요
- 건강·웰니스 중심의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하여 검진·치료·재활·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 산업 체계화 및 고도화 필요
- 의료기관, 관광업, 숙박·서비스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 코디네이션, 외국인 환자 유치, 헬스케어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관내 병원의 가명 처리된 의료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연계 기반 시스템 마련

□ 기대 효과

-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한 간호·요양·방문돌봄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확대
- 의료기관 중심의 산업 확장을 통해 의료행정, 의료데이터, 헬스케어 서비스 등 전문·중간 숙련 일자리 창출 가능
-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부 수요 유입으로 숙박·관광·서비스업 연계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임상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한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 유입 도모
- 의료 코디네이터, 헬스케어 매니저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가능

5) 1인 창작자 및 근로자 고용 지원 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방송영상밸리 등 인프라 조성에 따른 문화콘텐츠 분야의 1인 창작자 유입이 기대되는 바, 이에 따른 지원 체계나 장치 마련
- 문화콘텐츠 특화 표준 계약서 작성 교육, 법무 자문 창구 개설
- 공동 작업 공간 조성 또는 이용 바우처 지원
- 관내 기업과 근로자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및 1인 근로자 상호 공제회 설립 지원

□ 기대 효과

- 1인 지식 근로자의 근로 환경 안정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
- 창작 환경 조성을 통한 우수 외부 창작 인력 유입과 산업 기반 고도화

3. 기업유치를 통한 성장 연계형 체계 전환

1) 고양형 펀드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 주요 내용

- 고양특례시 펀드를 ‘기업을 유치하고, 키우고, 회수하고, 다시 투자하는 성장 엔진’으로 활용
- 투자청을 펀드 운영 허브로 설정하고, 전략 산업별(콘텐츠·AI·바이오 등) 투자 트랙을 구성하여 투자 플랫폼 기능 강화
- 벤처·혁신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시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여 민간 VC와 공동 투자 및 기업 유치 연계
- 매칭 투자 제도 도입 및 유망 기업 투자 설명회 정례화

□ 기대 효과

- 고양특례시 전략 산업 성장 가속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외부 기업, 자본과 인재 유입 가능
-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 등과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청년 위주의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재정 의존 최소화 및 회수 가능한 투자 구조 마련
- 우수 기업의 지역 정착 및 벤처 생태계 순환 구조 조성

2) 고용혁신본부 설치

□ 주요 내용

- 성장형 산업(첨단·지식기반 서비스 융합 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
- 기업유치부터 고용정착까지 지원하는 PM(프로젝트 매니저) 기반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 구축
 - 최근 하남시에서 기업 전담 매니저 제도 도입으로 (주)이글루코퍼레이션(AI) 유치
- 안정적 도입 후 고도화된 기능 지원 등을 위해 AX 지원센터 등 일원화 필요

□ 기대 효과

- 정책 일관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산업 간 균형 있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
- 고양특례시의 광역 인프라 연계를 통한 첨단·미래산업 영위 스타트업 유치

3)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주요 내용

-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Seed Scale-up IPO 연계
- 기술혁신 수출 R&D 연계형 스케일업 패키지 제공
- 유니콘 및 아기유니콘 육성 전용 펀드와 멘토링 플랫폼 운영
-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행정, 교통, 의료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기업들이 안전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실험실을 운영하여 AI 샌드박스 및 데이터 안심존 운영
- AI 전문가 사단 형성 후 기업 특성에 따른 컨설팅 제공
- 컨설팅 AS 전용 회사 육성을 통해 사후 관리 제공

□ 기대 효과

- 지역 내 고성장 기업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청년 창업 및 혁신기업 유입 촉진
- 데이터 접근성 확보를 통한 고양특례시 특화 AI솔루션(예: 스마트 의료, 자율주행교통) 개발 촉진 가능
- 장기적인 기업 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도모

4) 지역 기업 절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지원

□ 주요 내용

- 기업 이전 및 신규 투자 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과 입지 보조금 지원
- 고용 창출 및 산학협력 우수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 부산시: 최근 3년간 고용 증가 인원 10명 이상(종업원수 10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
 -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운영,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기업,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총 125억원 규모로 지원
 - 경기도: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또는 평균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일자리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 시설 개보수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규제자유특구 및 기업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

□ 기대 효과

- 기업 정착 유도 및 신규 투자 확대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유도

4. 광역경제권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력 확장

1) G-Metro 산업벨트 조성

□ 주요 내용

-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산업기반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고양특례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조성 중인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고양특례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을 근거로 토지매입비,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마련

표 6-1 | 역세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

역세권	추진사업	주요기능	비 고
GTX 창릉역	창릉신도시	자족시설용지(약 25만㎡) 조성	추진 중
GTX 대곡역 대곡소사선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역세권 중심 자족도시 조성 (주거 20% 내외)	계획 수립 중
GTX 킨텍스역	일산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약 31만㎡) 조성	추진 중
3호선 역세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백석동 등 약 1.25km² 지정	추진 중

〈자료〉 고양도시공사 제공.

□ 기대 효과

- 수도권 주요 산업거점과의 연계형 경제공동체 모델을 실현하여 고양특례시 내부 수요에 의존하던 고용 구조를 광역 수요 기반으로 확장
- 광역 교통망과 산업 입지를 결합함으로써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일자리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여 고용 선택지 확대
- 역세권 산업 집적을 통해 민간 기업 유입과 고급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 및 정주 여건을 동반 개선
- 교통 산업 주거가 연계된 구조적 성장으로 도시 경쟁력과 자족 기능을 동시에 강화

5. 여성·신중년 고용확대 및 인구유출 감소

1) Re: Work 프로그램 추진(경력단절 여성·신중년 재취업 과정)

□ 주요 내용

- 경력단절 여성과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전문교육과 기업 연계 과정을 통합 운영
- 경력단절여성은 청년층,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과 신중년 재취업과정과 분리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현장실습과 고용매칭을 일괄 지원하는 전략적 접근
-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복귀 로드맵을 제공하고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함
 - 프로세스: 교육(지역기반 교육기관 활성화)→구직연계(지역기반 취업알선기관 연계 지원 및 협력)→취업 성공 후 인턴지원금 지원(구직자 고용유지)→고용장려금(기업참여유도)→가족친화기업발굴 및 컨설팅(재직자, 기업인 일·가정양립문화 유도)

□ 기대 효과

- 경력단절 해소와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통해 비경제활동 인구를 실질적 노동력으로 전환
- 중장년 인적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지역 내 숙련 노동력 기반 확충

2) 여성 리스킬링 아카데미 운영(디지털·헬스케어 중심 재교육)

□ 주요 내용

- 디지털헬스, 데이터관리, 문화콘텐츠 등 여성 친화형 미래직업군을 중심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일산테크노밸리 전략 산업과 연동한 교육과 채용이 연계된 실습형 과정 도입
- 여성 특화 일자리 실험실을 통해 AI 서비스 기획 등의 실무적인 직무 경험 제공

□ 기대 효과

- 기존 여성 일자리의 기능 고도화
- 단순 서비스직 중심 여성 고용 구조를 미래산업 대응형 전문직으로 전환
- AI 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직무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 고용안정과 인력 관리 유리
- 여성의 기술 기반 고용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3) 여성 창업 플랫폼 설치(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창출)

□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환경관리, 지역돌봄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 여성 창업 프로젝트를 발굴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공익형 소셜비즈니스 모델 집중 육성
-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사업화와 투자로 연결되는 여성 창업 특화 펀드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창업 성과 창출을 유도
-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복귀 로드맵을 제공하고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 교육기관: 창업을 위한 인재 발굴,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 및 창업전략, 창업에 필요한 법률, 자금유치 등을 위한 제반 교육실시로 창업 역량 강화
 - 창업기관: 창업 입주공간 제공을 통한 초기 창업 후 지원, 지속적인 창업 유지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컨설팅, 창업초기자금지원, 시제품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지원 등 창업의 단계별 지원으로 초기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지원

□ 기대 효과

- 여성의 경제활동을 고용에서 창업으로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공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 여성 주도의 지역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력과 사회적 가치 동시 제고
-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 수행 예방으로 예산집행과 행정효율 증가

4) 세대 융합 창업 지원

□ 주요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중장년층 전문가(퇴직자, 기술·경영 인력 등)와 청년 창업가를 연계하여 세대 간 협업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
- 단순 자문-멘토링을 넘어, 지분 참여, 이익 공유 등 성과 연동형 협업 모델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도
- 중장년층의 기술·경영-네트워크 역량과 청년층의 디지털 기술 및 아이디어를 결합한 세대 융합형 창업팀 구성 지원
-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투자,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통합 창업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엑셀러레이팅-투자 연계) 운영

- 산업별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콘텐츠, 제조, 서비스, AI·디지털 분야 등 전략 산업 중심의 전문 인력 매칭 체계 마련
- 창업보육센터, 테크노밸리, 투자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및 후속 투자 유치 기반 강화

□ 기대 효과

- 중장년층의 실무 경험과 청년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생존율 및 성장 가능성 제고
- 단절된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취업이 아닌 '창업 참여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간 협업을 통해 창업 실패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
-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구조를 통해 세대 통합형 일자리 모델 확산
- 지역 내 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형 창업 및 고용 생태계 형성

5) 한부모·양육책임자 재도약 일자리 연계

□ 주요 내용

- 개인적인 이유로 혼자 양육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력 단절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 과정 제공
-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 및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
- 공동직장어린이집·거점형 보육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과 보육 부담 완화

□ 기대 효과

- 이혼 여성 및 한부모 가정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사회 참여 도모
-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보완을 통해 사회적 문제 예방
- 보육 관련 일자리 마련과 여성의 재진입 가능성 향상

6.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강화

1) 고양형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 데이터 센터 설치

□ 주요 내용

-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데이터 생산 거점 구축
- 기존 단순 데이터 라벨링을 넘어, AI가 생성한 답변의 정확성·적절성·윤리성 등을 검수하고 개선하는 고급 데이터 정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훈련-실습-고용 연계형 프로그램 구축
 - 기초 디지털 역량 교육 → AI 데이터 검수 및 평가 훈련 → 실무 프로젝트 참여 → 정규 일자리 연계
- 공공기관, 대학, AI 기업과 협력하여 데이터 품질 기준 및 평가 체계 표준화
- AI 기업과 연계한 데이터 생산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수요 기반 일자리 창출 구조 마련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단순 반복·저숙련 노동에서 AI 데이터 검수·평가 등 디지털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질 향상
- 생성형 AI 기업에 필수적인 고품질 피드백 데이터 공급을 통해 고양특례시를 AI 데이터 생산 거점으로 육성
- 디지털 기반 직무 확산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 시장 재진입 및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 확대
- AI 산업 성장과 연계된 새로운 직무(데이터 평가자, AI 품질관리자 등)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 사회적경제·돌봄 일자리 확대

□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참여형 일자리 확대
- 돌봄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고용을 체계적으로 확충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연계된 고용창출 사업을 통해 단기 일자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근로 기회 제공

□ 기대 효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안정적 고용 창출 구조 형성
-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속성 강화
- 돌봄 공백 해소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로 지역 생활 안정도 제고
- 실업 복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예방하는 안전망 역할 수행

3) 고령자 일·쉼 복합센터 설치

□ 주요 내용

-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건강 관리, 휴식을 통합한 복합공간 조성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지속 근로 모델 구축
- 맞춤형 근로시간제와 노인 친화 직종을 발굴하여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노동 참여 유도

□ 기대 효과

- 고령층 노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완화
- 근로와 건강 관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 단순 공공근로 중심 노인 일자리에서 지속형 참여 모델로 전환
- 의료 복지 지출 증가를 완화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기반 조성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은영·김준영·이상호(2015.12). “해외지역고용사업 사례 조사 I”, 한국고용정보원.
- 강은영(2017). 고용의 질 해외 사례 검토 및 지표체계 구축 방안, 국가데이터연구원.
- 경기도(2023). “경기도 일자리 목표 공시(2023~2026).”
- 경기도(2024). “24년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경기도(2025). “2025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연차별 세부계획.”
- 경기도일자리재단(2024). “경기도 권역별 사업 분석 및 주요 전략.” 김윤중.
- 고용노동부(2025). “[보도자료]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원(2025.08.31).”
- 관계부처합동(2024).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01.02).”
- 관계부처합동(2025).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01.02).”
- 관계부처합동(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08.22).”
- 관계부처합동(2025). “[보도자료] 새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2025.09.10.).”
- 국가데이터처(2025).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 박성훈·안세화·정세원·김다현·김근호(201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18-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은경·천동만·김정욱·이동재(2024).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제2024-33호,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 이토미노루(2015.1). “일본의 지역별 고용창출 유형과 성공사례”, 「국제노동브리프」 제13권 제1호, p. 4-28, 한국노동연구원.
- 전미선, 정용찬, & 강혜연.(2017).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243-274.
- 최균호(2019).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혁신적인 일자리 프로젝트와 시사점”, 「브레히트와 현대연극(Bu T)」 41, pp. 347-366.
- 한국고용정보원(2024).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운영 및 정책과제」. 윤지영, 김수진, 최영주, 심지현, 임정연.
- 한국고용정보원(2024).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 한국노동연구원(2025). 『2025 KLI 노동통계』.
- 한국무역협회(2024).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

[해외문헌]

- Bradshaw, Ted K.(2002). *"The Contribution of Small Business Loan Guarantees to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6 (4): November, 360–9.
- Chirinko, R. S. and D. J. Wilson(2023). *"Fiscal Policies for Job Creation and Innovation: The Experiences of US State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3–01.
- Freedman, Matthew, Shantanu Khanna, and David Neumark(2023). *"Combining Rules and Discretion in Economic Development Policy: Evidence on the Impacts of the 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17: 104777.
- Hyman, Benjamin, Matthew Freedman, Shantanu Khanna, and David Neumark(2023). *"Firm Responsiveness to State Hiring Subsidies: Regression Discontinuity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30664*.
- ILO(1999).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Decen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June 1999.*
- ILO(2013).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 Adopted by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 Moore, Richard W., Daniel R. Blake, G. Michael Phillips, and Daniel McConaughy(2003). *"Training that Works: Lessons from California's Employment Training Panel Program."*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Moretti, Enrico(2010). *"Local Multipliers,"* *American Economic Review* , 100(2), 373–377.
- Negoita, Marian, and Annelies Goger.(2020). *"State-Level Policies to Incentivize Workplace Learning: Impacts of California's Incumbent Worker Training Program."* *Brookings Institution*.
- Neumark, D. and E. Wohl(2023). *"Policies for Creating and Keeping Jobs in California."*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PIC*.
- O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 OECD(2024.5). *"Progettone - job matching for low-skilled workers."*

Paff, Lolita A.(2005). "State-Level R&D Tax Credits: A Firm-Level Analysis." *Topics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5 (1): September, Article 17.

United Nations(2002). *World Population Ageing: 1950-2050*. New York: United Nations.

Workman, Alec.(2021). "Ready for a Close-Up: The Effect of Tax Incentives on Film Production in California."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35 (2): May, 125-40.

World Economic Forum(2025. 1). "Future of Jobs Report 2025".

[관련기사]

경향신문(2022.08.21). 경기도민, 민선 8기 최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일자리' 꼽아...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출범 관련 인식 여론 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208211315001>.

연합뉴스(2022.07.22). 고양특례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4년 연속 수상,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20566000060>.

Abstract

Basic Plan for Future Job Creation in Goyang City

Yong Deok Kim¹⁾

This study examines the weakening of the employment base in Goyang City amid deteriorating macroeconomic conditions,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employment policies. It aims to develop an effective job creation strategy that reflects local conditions and industrial structure, with the goal of revitalising the local economy and enhancing employment stability.

The study employs SWOT and PEST analyses, along with value chain analysis and expert consultation, to derive strategie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a vision of sustainable regional growth and employment expansion is established, centred on future industries. While promoting high-quality jobs in sectors such as digital services and cultural content, the study also adopts an inclusive approach that considers demographic ageing and a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Accordingly, a dual strategy combining growth-driven youth employment and inclusive welfare-oriented policies is proposed.

To implement this, the study establishes a framework focused on industrial ecosystem development, structural transformation, regional linkage, and social protection, from which six key tasks are derived. Specifically, it proposes tailored employment tracks linked to youth talent development, alongside initiatives such as a start-up living lab and a policy passport system. It also aims to expand the future industry ecosystem through the development of an AI-content convergence hub,

1) Director of Economic Research Department(Director of Future Strategy Data Center), Goyang City Institute, Korea

strategic industrial belts, digital transformation support, and healthcare-linked industries.

Furthermore, the study seeks to facilitate growth-oriented industrial transformation by attracting businesses through a Goyang-style fund strategy, the establishment of an Employment Innovation Headquarters, the implementation of a unicorn company development programme, and the provision of tax and location-based incentives. In addition, it aims to strengthen regional linkages and expand industrial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by promoting industrial belts and operating an innovation economic council based on wider metropolitan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cludes strategies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id-career and older workers, while mitigating population outflow. These include the 'Re:Work Programme', which provides specialised re-employment training and corporate-linked programmes, a women-focused reskilling academy centred on future-oriented occupations such as digital health, data management, and cultural cont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women's start-up platform to foster social enterprises in daily-life sectors. It also proposes job linkage programmes for single parents and primary caregivers to support re-entry into the workforce.

Finally, strengthening the employment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is identified as a key priority. This includes expanding participatory jobs through social economy and care sectors, establishing a Goyang-style human feedback reinforcement learning data centre, and creating integrated work-wellbeing centres that provide employment, health, and rest services for older adults.

전략 26-01

고양특례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본구상

발행일	2026년 03월 31일
저자	김용덕
발행인	김현호
발행처	고양연구원
주소	104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24069-1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oPubWorld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본구상

Basic Plan for Future Job Creation in Goyang City